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2013 학술세미나

중민 이론의 재조명 :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

- 자 료 집 -

일시 : 2013년 6월 3일(월) 14:00-18: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B2)

후원 : 한겨레 신문사, 오마이뉴스

주최 :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Joongmin foundation for Social Theory

<세미나 일정>

등록(13:30-14:00)

개회식(14:00-14:20)

■ 사회 : 김성국(부산대)

축사

■ 조경태(민주당 최고위원)

■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제1부 기조발제(14:20-14:50)

1) 중민 이론의 자기반성 :

중도개혁 노선의 재정립과 민생정치의 과제 / 한상진(서울대)

제2부 주제발표(14:50-16:20)

“80년대 세대,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현상 : 국민의식조사 자료분석”

2) 80년대 세대의 현주소와 민주당의 과제 / 심영희(한양대)

3) 한국정치체제의 변동과 안철수 현상: 87년체제론의 관점에서 / 김종엽(한신대)

4) 복합적 유권자 층의 등장? 안철수 지지집단 분석 / 최종숙(충북대)

* 휴식(16:20-16:30)

제3부 종합토론(16:30-18:30)

■ 사회 : 김재홍(경기대, 제17대 국회의원)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

- 김남국(고려대: 정치외교학)
- 백기철(한겨레 논설위원)
- 장덕진(서울대: 사회학)
- 천정배(전 민주당 최고위원, 전 법무장관)
- 표학길(서울대: 경제학)

- 목 차 -

축 사	6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6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7
중민 이론의 자기반성: 중도개혁 노선의 재정립과 민생정치의 과제 (한상진)	11
1. 비판적 재구성의 뜻	12
2. 중민 이론의 전개 과정	12
3. 변동 주체: 486 정치인의 신뢰 추락	14
4. 오류의 이론적 근원: 이념의 권력도구화	19
5. 변동의 방법론: 중도개혁 노선의 재조명	21
6. 중도개혁의 목표: 민생정치의 과제	24
7. 맺는 말	29
80년대 세대의 현주소와 민주당의 과제 (심영희)	35
1. 서론	35
2. 자료 및 연구방법	37
3. 80년대 세대는 등을 돌렸는가?	39
4. 80년대 세대의 현주소: 경제사정, 대북정책, 후보와 정책, 정당에 대한 인식	46
5. 80년대 세대의 가치지향은 살아 있는가?	58
6. 요약 및 결론	64

한국정치체제의 변동과 안철수 현상 : 87년체제론의 관점에서 (김종엽) 69

- 1. 머리말 69
- 2. 87년체제의 행로 : 박정희체제 그리고 분단체제와의 관련 속에서 70
- 3. 87년 정치체제 75
- 4. 시민정치와 안철수 현상 77
- 5. 맺음말 82

‘복합적 유권자층’의 등장? 안철수 지지집단 분석 (최종숙) 85

- 1. 18대 대선과 안철수 현상, 안철수 정치 85
- 2. 안철수 현상을 다룬 기존논의 검토 87
- 3. 연구의 설계 89
- 4. 안철수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92
- 5. 안철수 지지집단의 가치성향 93
- 6. 결론 100

[토론요지] 103

- (김남국) 중민 이론의 재조명 :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 103
- (김재홍) 탈이념 민생정당의 정강정책과 지지층 간 연결성 107
- (백기철) 현실정치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견해 114
- (천정배) 민주당에겐 4개월의 시간이 있다! 118
- (표학길) 안철수 현상과 ‘노동중심 신당론’ 120

축 사

조 경 태 (민주당 최고위원)

먼저 중민재단 학술세미나개최를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중민재단은 서울대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님이 중산층과 민중의 역할을 주목하여 발전시킨 중민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뜻에서 창립했습니다.

오늘 중민재단 학술세미나는 중민이론의 자기반성 그리고 심화와 재정립의 도정에서 안철수 현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명해 보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민이론을 기계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서구의 이념적 잣대를 지양하고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는 슬로건 정치를 극복하자는 대안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 환경이 척박한 부산에서 민주당이라는 야당의 이름으로 3선을 했습니다.

좌우로 나누는 이념보다, 생활과, 골목에서, 지역민과 밀착하면서 서민중심의 아젠다를 개발하고 실천했습니다.

온갖 색깔론과 지역감정의 극복을 민생에서 찾았습니다.

서민의 사랑을 얻고, 중산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보수층을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지역주의 벽을 세 번 넘었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58.2%의 득표율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이미 중민이론을 거칠고 미력하지만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히 말씀드려도 큰 결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민재단 학술 세미나 개최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와중에서 참석하신 내외빈분들과 발제를 해주시는 심영희 박사님과 김종엽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한상진 교수님께도 무안한 존경을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최 장 집

(고려대 명예교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1.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이 주최해서 중민이론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에서 축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상진교수와 저는 여러 면에서 인연이 깊습니다. 80,90년대 중민이론, 민중개념, 그리고 노동문제를 둘러싸고 학술논쟁이 있었을 때 여러 학술회의에서 토론하고 또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논점 때문에 논쟁하는 경우가 있었을때도, 그 결과는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회고합니다. 90년대 말 김대중정부가 수립됐을 때, 대통령정책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함께 일했고, 최근에는 지난 3월말 동경대한국연구센터와 언론학부가 주최한 학술회의에 함께 참여해서 발표와 토론을 하기도했습니다. 한교수님과 저는 학문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시민사회의 공적토론의 장에서, 또는 정책자문부문에서 삼십년 가까운 시간동안 우의를 다지면서 동료학자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제가 학자로서 한상진교수님을 남다르게 존경하는 이유는, 비단 오랜 인연과 깊은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학문적 업적을 통해 한국사회과학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그의 학자로서의 학문적 태도와 자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한상진교수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서 축하를 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2.

거의 한세대전 처음 한교수께서 중민이론을 제기하였던 때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래됐지만 90년대 어느 때인가 오늘 1,2부 사회를 맡으신 김성국교수와 제가 한 학술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중민이론이 어떻고, 시민이 어떻고, 민중이 어떻고하면서 토론했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러니 “중민이론의 재조명”이라는 학술회의의 주제에서 “중민”이라는 한상진교수의 개념을 접했을 때 일단 감회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내 “재조명”이라는 말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중민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중산층과 민중의 결합, 내지 연대라는 말을 뜻한다고 할 때, 이러한 연대로 가능해진 사회의 두 계층이 포괄하는 사회적 인구집단은 한국사회의 절대다수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사회의 절대적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삶의 조건이 향상되고, 문화교육적으로 지적, 의식적 수준이 높아져 계몽적시민이 된다면, 그러한 상황이야말로 한국사회, 한국민주주의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거의 이상적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민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논거를 발견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재조명이

라는 말은, 한교수가 중민이론을 제기하였던 8,90년대로부터 20여년이 지난 2010년대 초인 오늘의 시점에서 문제를 본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나? 그리고 이 변화된 역사적,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중민이론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 그 사이에 한국사회에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의 원리가 경제적 운영원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영역에서 지배적인 가치이자 규범으로 전면적으로 도입됐고, 이제 그것은, 한국사회의 이념과 가치의 체계에 있어 지배적인 위치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한국사회는 세계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빈부격차가 증대하면서 부와 소득의 분배구조는 양극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시장구조는 정규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었고, 그리고 고용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광범하게 노동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은 과거와는 달리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이 사회적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 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높은 실업률, 고용의 불안정, 임시직, 시급노동의 확대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의 어려움, 고용조건 악화와 불안정이 그 어떤 사회적 인구집단보다 청년세대들에게 몰아닥침으로서 세대문제를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세대”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오늘의 청년세대는 이십 여년전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들의 선배세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화려한 성장의 반대편에서는 성장의 부정적 효과가 가져온 빈부격차의 증대와 사회적 양극화는 어김없이 사회해체, 가정해체와 같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창출하기에 이르렀고, 청년세대들에게는 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는 물론, 그들이 노동시장의 경쟁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사회경제적 문제뿐 만 아니라, 인간적, 실존적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장이 가져온 커다란 부정적결과를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 한국사회라 하겠습니다.

3.

“중민”개념과 관련해 볼 때 신자유주의의 급진적 수용이후의 중요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의 인구집단에 있어 계층구조의 변화입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보았던 사회의 특징은,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로 구성된 피라미드형 계층구성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빈자의 독재체제라 불렀고, 귀족정을 부자의 독재체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이러한 모습을 지녔나? 저의 추정으로는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면서 중산층의 규모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던 동안, 중하층서민들의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현대의 자본주의선진국가들의 계층구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변

화를 한국사회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층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동안, 중산층과 중하층서민들을 통틀어볼 때, 이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졌고, 그리고 경제발전의 결과로,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노년화)로 은퇴자문제, 노년문제를 안게 되었고, 신자유주의와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안정적 고용구조의 해체로 중산층의 사회적 기반은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 위에 새로운 문제로서 청년문제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현상들이 중산층과 서민 모두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가 되었지만, 그 사회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더 강하게 중하층서민들에게 부과되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진 민중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인구비중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수가 된 중하층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시기 중산층과 중하층, 그리고 그들의 연대는, 분명 민주화를 추동했던 중심적인 사회적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다수의 중산층과 상대적으로 소수의 서민,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는 여러 수준에서 상당한 괴리가 생긴 것으로 보여 그때와는 다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강해진 동안, 중하층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의 생산자집단들의 운동은 허약해졌거나 해체됐습니다. 시민이라는 말속에 담겨진 포괄적 인구집단으로서 중산층의 의사와 요구는 과다대표되는 동안, 이 인구집단을 구성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 소수의 인구집단의 소리는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민”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민중부분은 중산층으로부터 떨어져나와 고립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정당, 기존의 언론은 이들 서민으로 통칭되는 소외세력들의 소리를 대표하지도,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나, 자기소리를 갖지못하는 집단으로 소외되어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익을 표로서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당, 어떤 정권으로부터도 대표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자율적결사체, 정당, 또는 선거와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 사회의 다원적 요구들을 표출하고, 이들 각기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를 조직해서 그들의 삶의 질과 기회를 향상시키는 정치체제로서 기능할수 있다는 믿음과는 달리, 정작 민주주의 하에서 이들이 더 크게 더 많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저는 한국민주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현재의 시점에서 중민이론의 재조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집단을 어떻게 중산층과 결합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전사회적으로 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는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중민이론”은 한국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보편이론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중민이론에서 더 논의할 것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이 말이 지칭하는 보

편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수준이 높다는 점이 아닌가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으로 통합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약 정당이 이러한 통합을 실현한다고 한다면, 그 정당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아니면 사회경제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생산체제, 어떤 시장구조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민”의 개념은 서술적개념인지,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설명적 개념인지, 아니면 처방적인 개념인지, 또는 그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 말을 좀 더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오늘 학회에서 토론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학술회의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오늘의 현실정치에 적용해 중민이론을 민주당과 안철수현상을 대비시켜 보려는 시도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 기존정치질서, 기존의 정당정치로부터 유래하는 정당에 대한, 또는 정치전반에 대한 불만과 실망에 기인하는 정치적 무당파의 증가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민이론이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에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흥미를 자아내게 합니다. 오늘 학회에 참여하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들이 열띤 토론을 벌려 커다란 학문적 내지는 실천적 성과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중민 이론의 자기반성

: 중도개혁 노선의 재정립과 민생정치의 과제

한 상 진
(서울대 명예교수)

1980년대 학문논쟁의 산물로 태어난 중민 이론은 원래 사회변동의 주체를 포착 하려는 것이었다. 사회변동 주체에 대한 관심은 사회이론 구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이론은 보다 광의의 설명 틀을 발전시킨다. 중민 이론도 이런 진화과정을 밟았고 또 밟아갈 것이다. 그러나 원래 의도했던 목표, 즉 한국 또는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변동의 주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여전히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모호하고 혼란스럽다. 중민의 성격을 갖는 개인 또는 집단은 사회 도처에 흩어져 있다. 그러나 역사적 체험을 공유한 중민의 구현체는 어디 있는가? 하나의 대답은 1980년대 대학문화와 민주화 운동을 거쳐 사회에 진입한 세대, 즉 80년대 세대가 중민의 핵심을 이룬다는 것이었다.¹⁾ 이들이 중민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는 명제는 옳다. 이들은 민주화의 중심 세력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모태 위에서 학생운동을 조직했고 정계에 입문한 정치인, 즉 486 정치집단이 대두했다. 이들 486 정치인은 분명 민주화를 이끈 공로가 있고 정당 안에서 혁신을 옹호하는 행동을 했다. 그런데 이들에 관한 공중의 논의가 오늘날 예사롭지 않다. 이들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더 이상 개혁적이지도 않고 도덕성을 상실했으며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도 없이 어느덧 기성체제의 일부가 되어 특권을 향유할 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그런가? 80년대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변동의 주체로서 486 정치인의 역할이 소진되었거나 소멸했다는 진단은 참으로 믿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제는 이 의문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중민 이론의 한계가 있고 도전과 기회가 있으며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이 발제는 중민 이론의 비판적 재구성을 겨냥한다. 우선 1) “비판적 재구성”의 의미를 밝히고, 2) 중민 이론의 전개 과정을 간략히 개관한 후, 3) 오류의 경험적 지표를 확인하고, 4) 이론적 원인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런 자기반성에 기초하

1) 중민의 특성이 ‘탈인습적 가치관’에 있다고 할 때, 80년대 세대를 뒤 이은 디지털 세대도 중민의 성격을 지닌다는 명제도 성립 가능하다 (한상진, 2007).

여 5) 중민 이론의 정치 전략으로서 중도개혁의 양면 접근을 새롭게 규정하고 6) 이런 노선의 함의를 정책의 수준에서 구체화한 후, 마지막으로 7) 이런 논의가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1. 비판적 재구성의 뜻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관계가 있다. 이론은 현실의 단순한 재현이나 반영일 수 없다. 반대로 이론은 항상 현실에 개입하는 하나의 실천이며 자신의 개념 틀과 방법론으로 사물을 조직하고 질서를 부여한다. 이론은 끊임 없이 변하는 현실, 즉 사회변동의 자극을 받아 발전한다. 변동의 에너지와 방향을 명확히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생산한 지식을 통해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호 작용을 통해 이론이 혁신되고 생명력을 얻는다 (한상진, 1996).

그럼으로 이론의 눈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당연시된 개념의 틀에 안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경각심이 느슨할 때 현실은 언제고 이론을 배신하여 다른 길로 질주할 수 있다. 그러면 이론은 위기에 직면한다. 다른 원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현실의 변화를 놓친 이유를 먼저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 점에서 날카롭지 않으면 변화를 매개하고 선도하는 이론의 생명력을 되찾기 어렵다.

이 가능성을 여는 행동이 비판적 재구성이다. 비판적이라는 말은 심각한 오류가 파국적인 상태로 이미 발생했음을 뜻한다. 하버마스(1979:95)에 의하면 재구성이란 “많은 측면에서 수정을 요하지만, 자극의 잠재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이론”을 다루는 정상적인 방식이다. “재구성이란 어떤 이론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보다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이론을 분해시키고 다시 새로운 형식 속에 그것을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하버마스, 1979: 95). 이 발제는 이런 눈으로 중민 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중민 이론을 분해하려면 무엇보다 사회변동의 주체, 변동의 방법론, 가치관과 도덕성, 그리고 변동이 지향하는 미래상의 문제를 분석적으로 해부해야 할 것이다.

2. 중민 이론의 전개 과정

1980년대의 학문논쟁은 변혁이론을 향한 열정으로 점철되었다. 모든 추상적 논의를 떠나 핵심적인 문제는 한국사회의 변동양상이었다 (한상진, 1983, 1986). 한국사회는 어떤 힘의 관계에 의해 어떤 모순과 가능성을 배태한 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모순을 분석하고 변혁의 주체를 도출하며 민중운동의 전략을 검토하는 논의들이 분출했다. 정치적 압제 하에서도 경제성장은 계속되었다.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수탈은 줄어들지 않았다. 독재에 저항하고 민중수탈에 저항

하는 학생운동이 고도의 전투성, 조직력, 이념으로 무장되어 대학 안에 견고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켰고 이것을 사회에 전파시켰다. 이로 인한 긴장과 손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국사회는 명백히 구조적 모순들이 사회적 행위들로 폭발되는 전환기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학계, 종교계, 예술분야, 언론 부문을 관통하여 체제 변화를 향한 갈구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중민 이론은 이런 역사적 상황의 결실이다. 중민 이론은 성공의 역설을 강조했다.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가 거둔 경제적 성공의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이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한상진, 1985, 1989), 문제의 근원은 물론 권위주의 체제의 억압성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특징은 권위주의 체제가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의도치 않았던 결과로 저항과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이었다. 근대성의 상징인 중산층과 숙련 노동자층이 대거 성장하여 정치적 압제에 반대했다.

따라서 중민 이론은 무산대중을 변동의 주체로 보는 모든 이론들과 명백히 다른 노선을 걸었다 (한상진, 1987, 1988, 1989, 1992). 가장 무너지기 쉽고 비판에 약한 모순은 국가권력을 둘러싼 권위주의 모순이라고 논했다. 민주화가 변동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중산층이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주장이 중민 이론을 이끌었다 (한상진, 1989, 1990).

당시 학계는 중산층과 민중을 대립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중산층의 기준은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에 있지만 민중의 기준은 정치적 압제에 대한 저항에 있었다. 따라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의 논리를 떠나 생각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이면서 정치적으로 민중의 성격을 갖는 집단은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이었다. 중민은 바로 이 두 축을 교차시켜 얻는 범주였다 (한상진, 1986, 1987, 1988, 1997). 중산층이자 민중 또는 민중의 합리적 중심을 중민이라 불렀다. 보수적 성격의 주류 중산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선호하는 중민 집단이 급격히 성장했으며 이들이 한국사회의 변동을 이끈다는 주장이 중민 이론의 상표가 되었다.

이런 논쟁의 와중에 거대한 역사적 실험이 전개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정치지형을 급격히 변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중민의 정치적 역량을 유감 없이 증명한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이로서 중민 이론은 사회변동 주체설정에 관하여 공중의 인정을 어느 정도 획득한 셈이 되었다.

중민 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그 뒤의 사건은 <노사모>의 출현이었다. 이 현상이 던진 충격과 자극도 컸다. 당시 언론은 이른바 ‘386세대’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세대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분출했다. 탈인습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1980년대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한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생애사적 주기가 이행하면서 유실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도 사회 각 부문의 권위주의 유제를 고치려 노력하고 약자의 권익신장에 적극 관심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점차 보수화되어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할 것인가?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둘러싼 논의에서 중민 이론은 사회조사 자료와 경험적

관찰에 근거하여 중민 현상의 지속성을 옹호했다.²⁾

이런 와중에서 출현한 <노사모> 현상은 중민의 실재성과 영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80년대 세대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에 힘입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혁명’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한국정치는 진보와 보수의 팽팽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학생운동권 출신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사회개혁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필자는 <386세대의 빛과 그늘>에서 이런 현상을 기회이자 위협으로 규정했다. “기회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구들의 지속적 민주화, 검증 받지 않은 사회권력의 민주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80년대 세대가 “요구하고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위협한 것은 “권력은 항상 자만과 타성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살벌하고 정복의 욕구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80년대 세대의 이미지를 “권력이 이미지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진, 2003, 11).

그러나 중민 이론이 그 위협을 얼마나 깊게 응시했는지 의문이다. 위협이 결코 작지 않다고 논했다. 486 정치인이 ‘권력의 단순회로’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폭 넓은 인간적, 문화적, 실천적 호소력과 역량”을 갖추기를 주문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너무 낙관적 전망에 사로잡혔다. 당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더욱 그랬지만 중민 이론도 나태했다. 이들에게 ‘집단적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도덕적 잠재력’(12쪽)이 있다는 근거로 낙관론을 의심하지 않았다.³⁾ 사후적으로 문제를 조명하는 대신 잠복한 문제를 미리 내다보는 눈으로 운동권 출신의 대거 정계진출을 날카롭게 분석하지 못했다. 이것이 큰 실수였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모면하기 힘들다.

3. 변동 주체: 486 정치인의 신뢰 추락

그러면 이제 사회변동의 주체 문제를 해부해보자. 지난 25년간의 사회조사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여주었다. 첫째, 중민은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현저히 증가한다. 둘째, 중민은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층에 가장 많지만 숙련 노동자층에서도 광범하게 발견된다. 셋째, 중민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넷째, 중민은 소외된 계층에 대해 강한 부채의식을 갖는다. 즉 서민의 권리신장과 복지향상을 요구한다. 다섯째, 중민은 관준민비의 전통 대신 민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고 강조한다. 즉 중민은 자신의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갖추고 있다.

2) 1989년 계간 <사상>의 창간호에 “중심화 변혁모델의 탐색: 중민 노선을 향하여”를 기고한 이래 필자는 여러 계기에 중민을 구조화된 세대문제로 보는 입장을 개진했다. 1994년에는 “사회개혁과 중민이론: 도덕적 자원의 제도화”(계간, 1994)라는 논문을 통해 “제도 안에 진입한 중민의 도덕적 자원을 조직화하는 문제”를 집중 검토하기도 했다.

3) 2005년 5월 31일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필자는 당의편가르기 식 논쟁에 반대하며 실사구시 방법론에 따른 실질적 개혁을 설파했지만, 486정치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하지 못했다. 오직 이들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이후, 2013년 필자가 민주당 18대 대선평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회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중민의 전형적인 보기는 앞서 논했던 1980년대 세대 및 486 정치인이다. 후자는 중민 이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민 이론은 외압내진 → 제도진입 → 사회민주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중운동의 압력 속에 1) 제도개혁과 함께 2) 사회운동 세력의 제도권 진입이 확대되면서 2) 사회 각 부분의 민주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2004년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함께 사회개혁을 추진할 역사적 소임을 갖춘 정치집단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한가? 불행히도 486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는 무너졌다. 빠른 성공이 빠른 몰락을 가져왔다고 할까? 민주화로의 전환기에는 투쟁이 중요했다. 기성체제의 특권과 반칙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이 고달파지는 포스트-민주주의 상태로 가면 모호성이 커진다.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인가? 적대적 대립 속에 민생정치가 실종되면 정치를 보는 사회의 눈이 변하게 된다. 적대적 공생관계 안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는 정치를 구체제로 규정한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서로 싸우는가? 국민 다수의 삶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를 타파해야 할 기성체제로 본다.

안철수 현상과 486 정치인의 몰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486 정치인에 대한 분노가 안철수 현상을 이끌고 자극한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개혁의 방법론이 요구된다. 상황은 매우 나쁘다. 그러나 희망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486 정치인에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80년대 세대가 반전의 카드를 쥐고 있다. 이런 생각의 근거를 경험적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용할 자료는 2005년과 2013년의 국민의식조사 자료다.⁴⁾ 흔히 말하는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디지털 세대에 대한 설문들이 있다. 그러나 486 정치인에 대한 설문 자료는 매우 드물다. 다행인 점은 2005년과 2013년 자료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2013년 자료를 심층분석 할 수 있다. 이하의 분석은 486 정치인에 관한 것이다. 필요하면 80년대 세대 또는 디지털 세대의 시각을 도입할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세대의 현주소에 관해서는 다른 발제가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심영희, 2013).

<표-1>은 486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2005-2013년 사이에 어떻게 악화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두 시점의 비교가 가능한 설문은 6개로서 486 정치인은 1) 개혁적이다, 2) 민주화의 활력소다, 3) 깨끗하다, 4) 운동권 체질로 정치한다, 5) 이념적이다, 6) 80년대 세대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설문의 구체적 표현과 응답 척도의 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응답을 100점 만점의 평균치로 비교할 수 있다. <표-1>이 보여주듯이, 국민일반, 8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의 평가는⁵⁾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변했다. 486 정치인의 긍정적 이미지는 현저히 줄었고 부정적 이

4) 2005년 자료는 필자가 사회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에 의뢰하여 수행했던 <선진한국국민의식조사>와 <탈인습세대조사>이며 2013년 자료는 한상진 사회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했던 <국민의식조사>이다.

5) 국민일반의 범주는 8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를 모두 포함한다. 80년대 세대는 대학을 다녔던 사람만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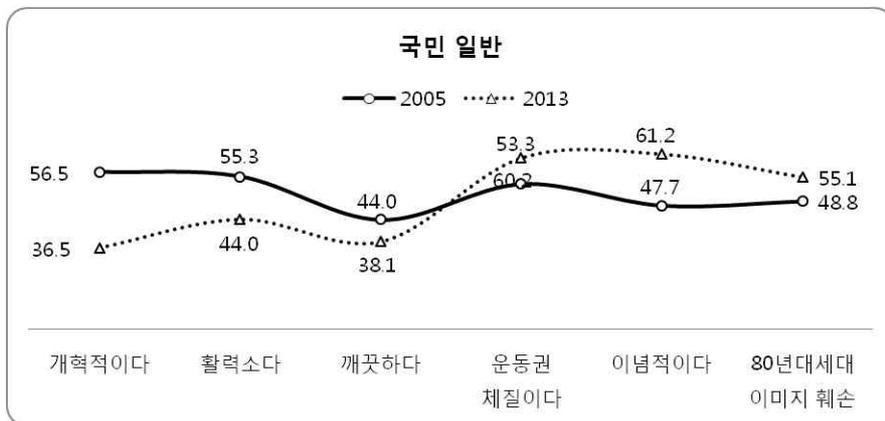
미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표-1> 486 정치인 이미지의 변화추세 (100점 만점)

항목	국민 일반		80년대 세대		디지털세대	
	2005년	2013년	2005년	2013년	2005년	2013년
이미지						
1. 개혁적이다	56.5	36.5	60.5	36.2	47.0	33.4
2. 활력소다	55.3	44.0	55.8	48.9	47.0	37.9
3. 깨끗하다	44.0	38.1	28.1	37.7	23.5	34.9
4. 운동권 체질이 강하다	53.3	60.2	56.2	58.0	57.1	58.3
5. 이념적이다	47.7	61.2	50.3	59.1	45.3	61.9
6. 80년대세대 이미지 훼손	48.8	55.1	69.0	52.9	57.5	58.9

살펴보자면, 2005년 당시 486 정치인에 대한 국민인식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다. 100점 만점의 평균치로 계산하여 486 정치인이 “개혁적”이라는 국민일반의 이미지는 56.5점, “민주주의의 활력소”라는 이미지는 55.3점, “깨끗하다”는 이미지는 44.0점이었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매우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면 50점 이상의 평균치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2013년이 되면 평균치는 각각 36.5점, 44.0점, 38.1점으로 하락했다. 크게는 20점까지 줄었다. 486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자산은 판산 상태에 있다.

다른 한편, 부정적 이미지 항목에 대한 평가는 7-15점 정도 더 악화되었다. 486 정치인들이 “운동권 체질로 정치한다”는 견해에 대한 100점 만점 평균치는 2005년에는 53.3점이었으나 2013년에는 60.2점으로 늘었다. ‘이념적’이라는 이미지는 47.7점에서 61.2점으로 급증했다. ‘80년대 세대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는 48.8점에서 55.1점으로 늘었다. 부정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음을 뚜렷이 알 수 있다.



<그림-1> 486 정치인 이미지의 변화추세 그래프

국민일반의 인식을 떠나 80년대 세대를 보면, 전반적 추세는 유사하지만 두 가지 점이 관심을 끈다. 486 정치인이 ‘깨끗하다’는 이미지에 대해 2005년의 평균치가 예외적으로 매우 낮다. 이 추세는 디지털 세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2013년의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 같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80년대 세대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항목에 관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여러 추세를 감안하건대 2013년 80년대 세대의 평가가 2005년 때만큼 가혹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특징은 80년대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486세대의 긍정적 이미지에 관한 디지털 세대의 평가는 특히 박하다. 국민일반과 80년대 세대를 비교해 보면, 2005년의 경우에는 80년대 세대의 평가가 대부분 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2013년이 되면 상황이 변한다. 486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체에서 상당히 표준화된 것을 발견한다. 국민일반, 8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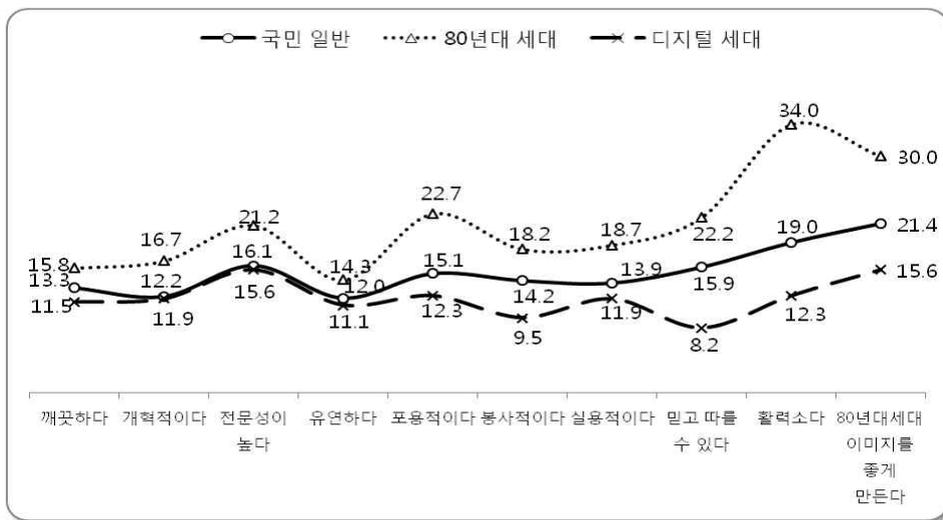
80년대 세대와 486 정치인의 관계는 특별하다. 같이 1980년대에 대학생살을 했고 민주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80년대 세대는 어느 집단보다 486 정치인의 개혁성을 지지했다. 그러나 2013년이 되면 이들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들이 486 정치인을 완전히 버렸다고 하기는 이르다. 2013년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래도 이들이 다른 집단보다 486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표-2> 486 정치인의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동의 (2013년)

긍정적 문항	동의율(%)			100점 만점		
	국민 일반	8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국민 일반	8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1. 깨끗하다	13.3	15.8	11.5	38.1	37.7	34.9
2. 개혁적이다	12.2	16.7	11.9	36.5	36.2	33.4
3. 전문성이 높다	16.1	21.2	15.6	39.8	42.0	41.7
4. 유연하다	12.0	14.3	11.1	36.9	38.8	36.3
5. 포용적이다**	15.1	22.7	12.3	39.4	42.7	37.0
6. 봉사적이다**	14.2	18.2	9.5	38.0	39.8	34.0
7. 실용적이다	13.9	18.7	11.9	38.8	40.9	38.1
8. 믿고 따를 수 있다***	15.9	22.2	8.2	40.3	44.9	35.2
9. 활력소다***	19.0	34.0	12.3	44.0	48.9	37.9
10. 80년대 세대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	21.4	30.0	15.6	44.9	47.1	41.1

<표-2>는 2013의 상황을 자세히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486 정치인은 사회의 호

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100점 만점으로 50점 이상이 하나도 없다. 동의율은 대부분 10% 대에 머물러 있으며 오직 두 경우에만 30%를 넘는다.⁶⁾ 가장 일관되게 가장 낮은 평가를 하는 집단은 디지털 세대다. 이들은 486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 집단은 80년대 세대다. 이들의 34%는 486 정치인이 민주주의 활력소라는 견해에 동의했다. 국민일반의 평가는 80년대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중간에 위치한다. 세 평가주체에 의해 다 같이 20% 미만의 동의를 얻은 항목이 가장 열악한 이미지라고 할 때, 486 정치인의 문제점은 깨끗하지 않고 유연하지 않으며 실용적이지도 않으며 개혁적이지도 않고 서민에 봉사하지도 않는 것으로 들어났다.



<그림-2> 486 정치인의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동의 그래프 (2013년)

이미지 항목 10개를 보다 상위의 4개 영역으로 묶어 분석을 시도했다. 4개 영역은 도덕성, 두뇌기능, 정치자산, 대표성이다. 도덕성은 깨끗한가 부패했는가, 서민의 이익에 봉사하는가 특권적인가의 질문에 관련된다. 두뇌기능은 전문성, 유연성, 실용성에 의해 규정된다. 정치자산은 포용성, 개혁성, 믿고 따를 수 있는 관계, 정치발전의 활력소에 관련된다. 대표성은 80년대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486 정치인이 가장 결여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과 두뇌기능으로 나타났다. 정치자산도 결핍된 것으로 나왔다. 그나마 다소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표성이다.

<그림-2>는 486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2013년 현재 매우 부정적임을 잘 보여준다.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집단은 디지털 세대다. 상황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만 그래도 486 정치인에 대해 희망을 거두지 않은 집단은 80년대 세대이다. 각 항목에 걸쳐 80년대 세대는 높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486 정치인의

6) 이것은 평가 척도에서 중간인 5점 선택을 동의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소진되지 않은 가능성을 주시하고 기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표-3> 486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486정치인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전체국민	80년대 세대
성별(남1/여2)	-.001	.021
연령(20대1/60대이상5)	.072*	-
학력(중졸1/대재이상3)	.111***	-
소득수준(200만원이하1/400만원이상3)	.079**	.149*
호남거주	.037	-.046
TK거주	-.011	-.121*
주관적이념성향(1보수/9진보)	.087***	.184**
도덕성	-.021	-.050
두뇌기능	.087**	-.106
정치자산	.288***	.447**
대표성	.380***	.363***
R2	.477	.590
F비	83.981***	20.447***

<표-3>의 회귀분석은 중요한 발견을 보여준다. 80년대 세대가 486 정치인을 지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표성과 정치자산이다. 486 정치인이 80년대 세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모집단이 486 정치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 일반의 경우에도 대표성과 정치자산은 학력, 주관적 이념성향 등과 함께 큰 영향을 미친다. 과연 486세대가 80년대 세대를 보다 충실히 대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갈 것인가? 80년대 세대의 눈에 정치자산을 풍부하게 늘려갈 것인가? 현재의 상태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희망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4. 오류의 이론적 근원: 이념의 권력도구화

그러면 사회변동의 주체로 등장했던 486 정치인이 사회적 신뢰를 급격히 상실하게 된 오류의 이론적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일까? 중민 이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오류를 방치, 묵인, 간과했던 것일까? 보다 구체적으로 묻자면, 사회운동에 근거하여 외압내진의 논리로 제도권 밖의 인물들이 제도 안에 들어가 혁신을 주장하고 관철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떤 점을 주시해야만 뜻밖의 퇴행이나 부작용을 막고 제도의 품질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가?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 다수를 구성하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다른 긴요한 필수 요소가 충족되어야 바람직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486 정치인의 참담한 추락과 함께 2011년 <혁신과 통합>과의 통합 이후 민주당이 경험했던 참담한 실패는 위의 질문을 소홀히 했던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중민 이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론의 관점에서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지배사회학, 종교사회학을 관통했던 막스 베버의 해안을 깊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변동은 항상 새로운 이념의 성장과 함께 시작한다. 이념은 자신의 계보 안에서 성장하지만 때가 되면 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제도화된다. 제도화는 곧 이념과 권력의 만남을 뜻한다. 이때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념이 권력의 수단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을 막는 장치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념의 참 뜻은 배면으로 숨고 그럴듯한 이념의 외피로 정당화된 새로운 권력관계가 제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유교, 불교의 제도화 과정에서 권력과 이념의 결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상화된 이념의 눈으로 새로운 권력을 찬양하는 것은 머지않아 조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의 핵심은 사회변동의 도덕적 자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념과 권력의 혼동 또는 이념의 권력도구화를 막는 변동주체의 도덕적 윤리적 행위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욕구를 자제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지방을 열기 위한 포용적 소통의 장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가 민주화의 전환기를 넘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려면 단순한 수의 게임, 동원의 전략, 합성의 논리를 떠나 다수의 공존과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협력의 틀,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검증과 토론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향한 지혜와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Habermas, 1979, 1984, 1987, 1990).

회고해 보면, 중민 이론이 이 점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숙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직 지식의 수준에 머물렀을 뿐 행위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 이에 역행하는 현실을 향하여 강력한 경고음을 내지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정치상황은 계속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렇게 볼 때, 486 정치인의 오류는 그들의 세계관이 전환기의 대치상황에 매어 있었다는 데 있다. 이들의 경험이 그랬고 이 단계를 넘는 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지적 감수성이 너무 약했다. 결과적으로 권력욕구에 쉽게 포섭되었고 기존 권력의 구도 안에서 성과를 가시화하고자 동분서주했다. 그러는 사이에 이들은 기성 정치인으로 변했고 기득권을 내려놓기보다 향유하는 위치로 이동했다. 원래의 소임이었던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도 희미해졌다. 이들은 젊었을 때는 새 시대를 향한 열정으로 변화를 절규했으나 막상 제도정치에 들어와서는 새 시대를 향한 비전도 도덕적 자원도 소실한 것처럼 행동했다.

5. 변동의 방법론: 중도개혁 노선의 재조명

중민 이론은 애초부터 “중”의 개념을 중시했다. 중용, 중도, 중심, 중원 등의 전통적 상징과 중민 개념 사이에는 상당한 친화성이 있다. 양극화의 대치보다 중심화의 협력모델을 선호했다. 이런 관점에서 외압내진 → 제도진입 → 사회민주화의 방법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것은 구체제의 단단한 방어막을 단숨에 격파시키려는 성급함, 전위성, 급진성을 제어하고 체제 안으로의 지속적 행진을 통해 구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연속이행 모델을 뜻한 것이었다.

‘중민 노선’의 시각에서 민주화의 전개를 보자면 세 단계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보는데, 外壓 內進의 단계, 제도 진입의 단계, 사회 민주화의 단계가 그것이다. 첫 번째는 민중운동의 압력에 의해 제도 안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민중운동의 합법적 공간이 넓어지는 단계라면, 두 번째는 민중운동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제도와 운동 정치의 관계로 특징되고, 세 번째는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로 인해 민중적 민족적 역량이 확산되고 입체화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세 단계는 상호 중복되어 나타나는 면도 있지만 우리의 현재는 주로 첫 번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상진, 1991:157).

그러나 이런 변동의 과정에서 많은 난제가 제기되었고 애로가 체험되었다. 그 단적인 보기가 시민사회의 과도한 흥분과 에너지의 유실이었다. 시민사회에 언로가 팽창하고 변동의 기운이 넘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다. 그러나 국가권력과 시민사회가 한 판의 승부를 벌이는 최근의 촛불 시위 같은 집합체험의 결과는 다소 우울한 측면이 있다. 많은 노력과 에너지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새로운 협치 모델이 탐구되었고 제도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가 관심을 끌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개혁 노선은 모든 이념의 과부하를 걷어내고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민생정치의 구현을 목표로 했다.

내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이런 중도노선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사회의 심층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 중엽부터 나는 여러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할 기회를 가졌다. 그 결과를 보면서 나는 중산층 안에 결코 보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반대로 당시의 권위주의 현실에서 보자면 가장 변화를 요구하는 집단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는 화이트칼라, 그리고 조직화된 노동자의 핵심부문 등은 권위에 복종하기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근대적인 성격이 뚜렷했다. 또한 수적으로도 이들이 가장 현저히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이들의 변화 욕구를 어떤 틀로 수용하여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상진, 1999:147).

중도개혁 노선을 재조명 하자면 이것은 중도와 진보의 양 날개를 뜻한다. 중민이 중산층과 민중을 결합하듯이 중도개혁은 중도와 진보를 양 날개로 활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진보의 구상을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동시에 중도의 포용성이 진보에 미치는 함의를 숙고한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인식이 필수적이다.

- 1)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 시민들의 창의적 투입요소, 감시와 제안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시민의 기본권과 소통역량을 강화한다.
- 2) 시민요구에 대한 제도정치의 호응성을 높이고 정책생산 능력 또는 산출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앞장선다.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며 제도개선 효과 시민들이 청취, 측정하는 기회를 늘린다.
- 3) 시민운동은 자신의 의제를 과감히 개진하되 이것을 제도권에 강제하려는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 운동의 논리로 정치를 하려는 권력욕구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 4)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이런 쌍방향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한다.

중도개혁 노선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도 필요하다. 첫째, 중도노선을 예의 살펴야 한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로 인한 차이가 정치적 태도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진보노선을 또한 예의 살펴야 한다. 이에 관해서도 지지자와 거부자가 있으며 이런 차이가 정치적 태도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중요한 것은 중도의 축과 진보의 축을 교차시켜 얻은 새로운 범주, 즉 중도-진보 양 날개의 입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중도도 아니고 단순한 진보도 아닌 새로운 결합을 뜻한다.

결국 중도의 축과 진보의 축을 교차하면 네 가지 범주가 나온다.

- 1) 진보를 배제한 중도 노선
- 2) 중도를 배제한 진보 노선
- 3) 중도-진보 양 날개 노선
- 4) 이념에 실증을 느낀 탈 이념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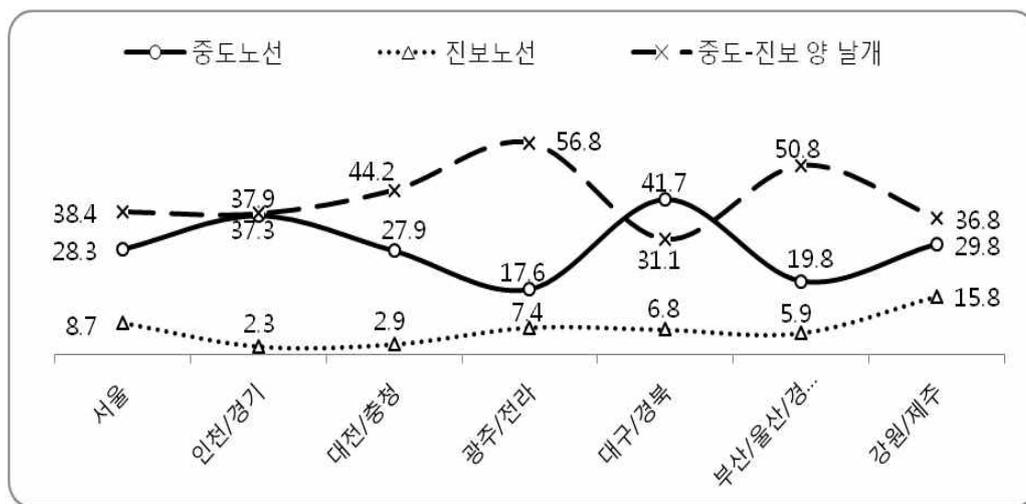
중민 이론이 제시했던 중도개혁 노선은 이 가운데 세 번째의 중도-진보 양 날개로 재규정될 수 있다.

<표-4> 이념지향(정체성)의 4가지 유형⁷⁾ % (N)

중도노선 진보노선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한다	전체
공감하지 않는다	탈 이념 22.2(228)	진보 배제 중도노선 28.6(293)	50.8(521)
공감한다	중도 배제 진보노선 6.4(66)	중도-진보 양 날개 42.8(439)	49.2(505)
전체	28.7(294)	71.3(732)	100.0(1026)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2013년 현재 탈 이념에 가까운 사람은 22.2%에 달한다. 진보를 떠난 중도노선은 28.6%이다. 중도를 배제한 진보노선은 6.4%에 불과하다. 이것은 진보 노선을 택했던 49.2% 응답자의 대부분이 또한 중도 노선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42.8%는 중도-진보 양 날개를 지지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보면, 중도노선의 강력한 지지집단은 50대 연령층(48.0%)이고 진보노선의 강력한 지지집단은 40대 연령층(10.9%)이다. 양 날개 정체성의 강력한 지지집단은 60대 이상 연령층(50.7%)이다. 학력, 소득, 직업의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지역의 면에서 보면 중도노선의 지역적 기반은 대구/경북(41.7%)에 있고 양 날개의 지역적 기반은 광주/전라(56.8%)와 부산/울산/경남(50.8%)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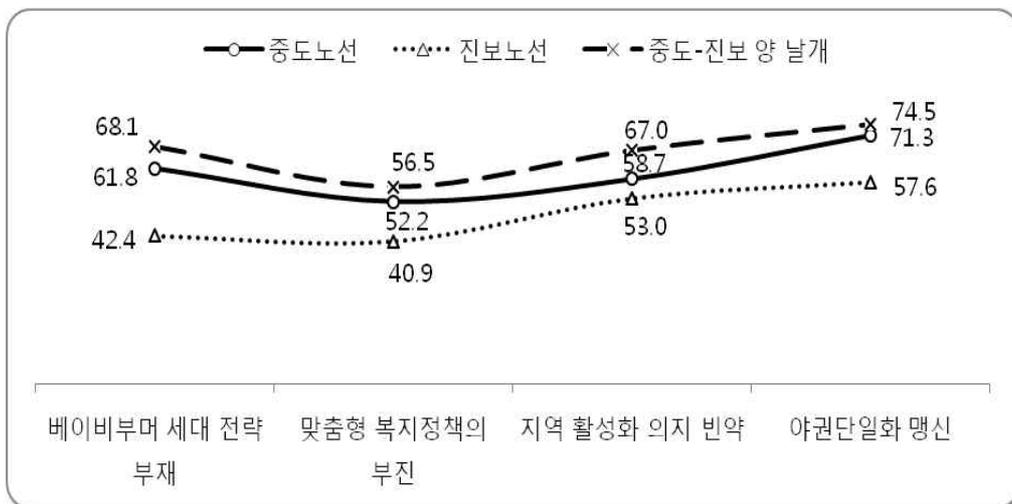


<그림-3> 세 가지 이념노선의 지역 기반 단위 %

위에 구별한 이념적 정체성 또는 개혁의 방법론을 민주당의 현실에 적용했을 때,

7) 중도노선과 진보노선은 각각 0-10점 척도로 측정된 것이다. 이 척도에서 6-10점에 속한 응답자를 공감하는 입장으로 처리했다. 5점은 중간이나 여기서는 0-4점의 공감하지 않는 입장에 포함했다. 확실한 공감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다른 묶음으로 처리했다.

특이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대선패배의 원인진단이나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 등에 관하여 노선에 따른 차이가 매우 현저하다. 가장 인상적인 발견은 진보노선과 중도노선의 예상 효과가 역전된 것이다. 통상 진보노선은 혁신을 뜻한다. 따라서 변화를 선호한다. 반면 중도노선은 신중한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현실에 적용했을 때, 중도노선이 진보노선보다 모든 면에서 예외 없이 민주당의 문제들에 대하여 현저하게 더 비판적인 것으로 나왔다. 진보노선은 계파 갈등의 현실을 훨씬 더 수긍하고 용인하는 특징을 보였다. 즉 중도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보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현저히 변화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뜻밖의 발견은 중도-진보 양 날개를 지지하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가장 변화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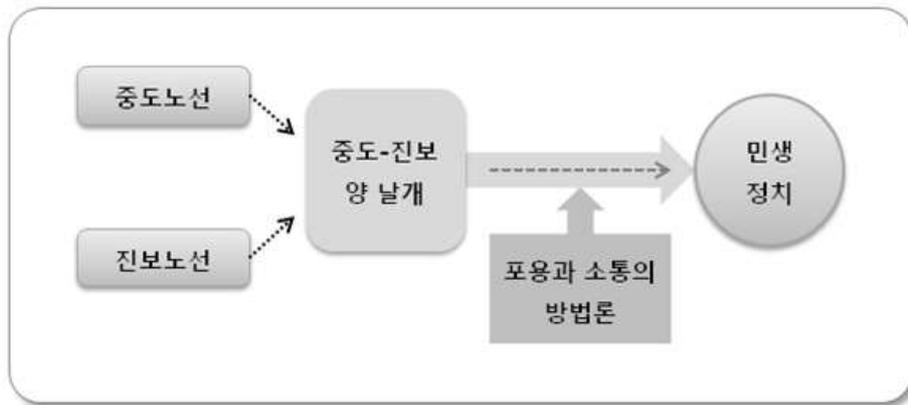


〈그림-4〉 대선패배 원인에 대한 동의율과 정체성 노선 (%)

〈그림-4〉는 하나의 자료를 예시한 것이다. 쟁점은 대선패배의 원인으로 진단된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전략이 부재하여 대선에서 패했다는 주장, 맞춤형 복지정책의 부진이 패배원인이라는 주장 등에 관해 가장 높게 동의하는 사람은 중도-진보 양 날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그 뒤를 중도노선 주창자들이 따라오고 있고 진보노선은 일관되게 가장 밑에 있다. 즉 진보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약하다.

6. 중도개혁의 목표: 민생정책의 과제

그러면 이제 중도개혁의 목표로서 민생정책의 과제를 논하겠다. 중민 이론은 사실 중도-진보 양 날개로 민생정책의 현대화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5> 중민 이론과 민생정치

중민 이론이 옹호하는 민생정치의 패러다임은 세 가지 점에서 독특한 변별력을 갖는다. 첫째, 국가중심 또는 정부중심의 발전논리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우선시한다. 둘째, 시장중심의 경쟁 일변도의 가치지향을 벗어나 공존과 협력을 중요한 발전 과제로 설정한다. 셋째, 동북아/한반도 평화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민주주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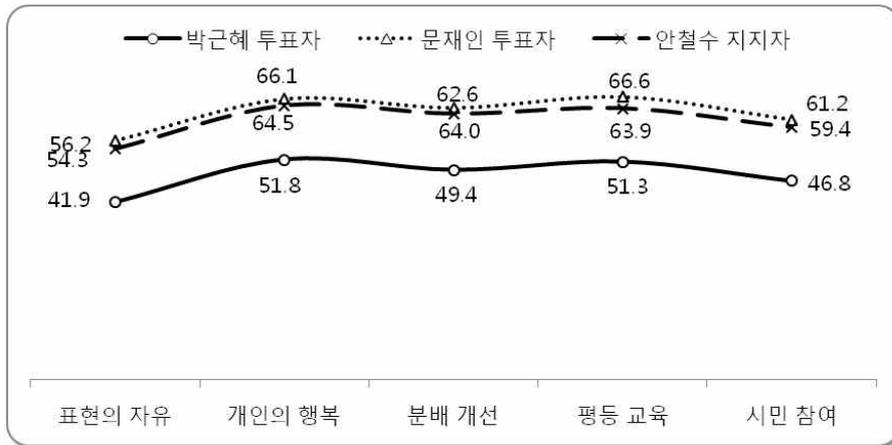
2013년의 시점에서 누가 민생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지하는가? 18대 대선의 정치지형에서 보면 결과가 매우 뚜렷하다. 정치적 함의가 명확하다. 그러나 세대의 지형에서 보자면 결과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보기로 80년대 세대와 디지털 세대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치지형에서 확인한 주요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중심인가 개인중심인가의 선택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개의 설문을 분석했다. 설문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것이다. 한 쪽에는 법치와 사회질서 확립을 두고 반대편에 시민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두어 0-10 척도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했다. 다른 설문은 같은 방식으로 부국강병의 국가건설과 개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대비시켰다. 이 두 설문에 기초하여 국가중심과 구별되는 개인중심 지수를 만들었다. 100점 만점으로 평균이 50점 이상이 되면 개인지향이 더 현저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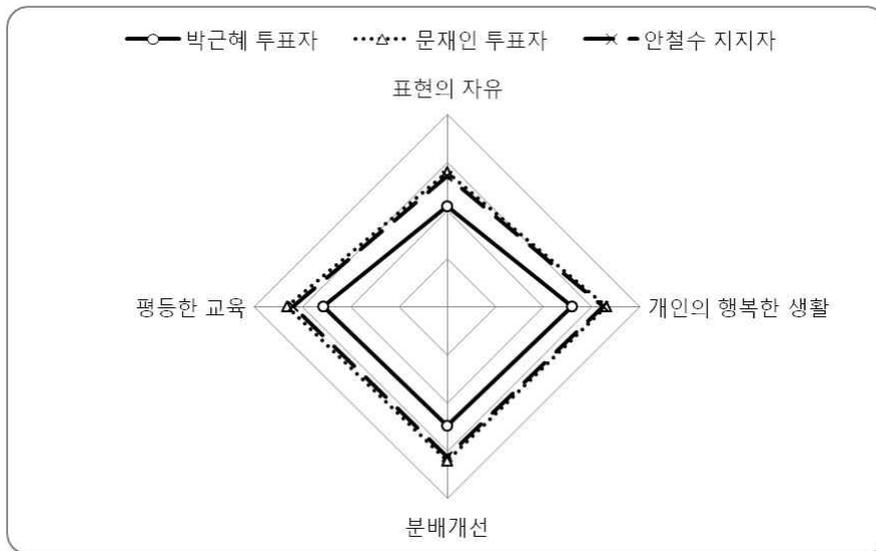
마찬가지로 시장중심과 구별되는 공존지향 지수를 만들었다. 하나의 설문은 경제성장/수출증대와 분배개선/복지증진을 대비시켰고 다른 설문은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과 모두의 잠재력을 키우는 평등한 교육을 대비시켰다. 아울러 정당과 국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발전과 국정의 모든 분야에 시민의 직접참여 증진을 대비시켜 시민참여 선호지수를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5개 지수, 즉 표현의 자유, 개인의 행복, 분배개선, 평등교육, 시민참여의 지수를 18대 대선과 같은 정치지형에 연결시켜본 결과, <그림-6>과 같은 명확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투표자와 안철수 지지자는 모든 차원에서 민생정치를 강력히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투표자가 약간 앞서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이에 반해 박근혜 투표자는 국가중심 또는 시장중심의 패러다임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 민생정치의 패러다임이 여야의 정치지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림-6> 민생정치의 지형



<그림-7> 민생정치 지형의 방사형 그림

한편 민생정치의 지형을 방사형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7>과 같다. 여기서 보듯이, 문재인 투표자와 안철수 지지자가 차지하는 민생정치의 공간은 박근혜 투표자의 공간보다 현저히 넓다. 이것은 민주당 또는 문재인 후보가 민생정치 패러다임으로 대선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호응이 크고 영향력이 확산될 공간이 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후보가 여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정치적 역설이자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뒤를 이어 민생정치의 다른 중요한 차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대북정책의 문제를 살피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생정치는 동북아/한반도의 평화를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구상한다. 먼저 평화지수를 만들기 위해 두 개의 설문을 사용했다. 하나의 설문은 강력한 대북 안보체계 강화와 남북한 교류협력의 증진을 대비시켜 같은 척도로 응답을 요구했다. 다른 설문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과 동북아 평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을 대비시켰다. 두 설문에 대한 응답을 결합하여 동북아/한반도 평화선호지수를 구성했다.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 이상이 되면 평화선호가 강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음으로는 대 북한정책을 고려하기 위해 두 개의 설문을 사용했다. 이 경우, 설문의 방식이 약간 다른데 양쪽에 대립 쌍을 놓고 묻기보다 제시된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방식을 택했다. 척도는 동일했다. 하나의 의견은 “민주당은 북한인권과 세습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이고, 다른 의견은 “민주당은 앞으로 중북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였다. 두 설문에 대한 응답을 결합하여 북한체제 비판지수를 구성했다.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 이상이 되면 북한체제 비판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먼저 동북아/한반도 평화선호지수를 보면 <표-5>와 같다. 박근혜 투표자와 문재인 투표자의 가치지향은 뚜렷하게 구별된다. 문재인 투표자들에서 평화선호지수가 현저히 높다. 박근혜 투표자는 상대적으로 미국중심 안보논리에 더 가깝다. 한편 안철수 지지집단은 평화 프레임을 선호하는 입장에 있지만 문재인 투표자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표-5> 동북아/한반도 평화선호지수

	박근혜 투표자	문재인 투표자	안철수 지지자	전체
강력한 대북 안보체계 강화 대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증진	40.6	58.8	53.8	49.6
한미동맹 중심의 국제협력 대 동북아 평화 중심 국제협력	50.1	64.6	60.6	57.4

대북 정책의 구성 요소로서 북한체제 비판선호 지수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표-6>이 보여주듯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북한체제 비판을 수용하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국민의식이 모여 있다. 특히 박근혜 투표자는 100점 만점에서 75점의 강력한 성향을 보인다. 문재인 투표자나 안철수 지지집단도 이 여론지형 안에 포섭되어 있다. 앞의 평화지수에서는 안철수 지지집단이 문재인-박근혜 투표자 사이에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문재인 투표자보다 북한체제 비판을 더 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표-6> 대 북한체제 비판지수

	박근혜 투표자	문재인 투표자	안철수 지지자	전체
중북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	74.9	61.6	65.3	67.5
북한 인권과 세습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75.3	69.5	68.2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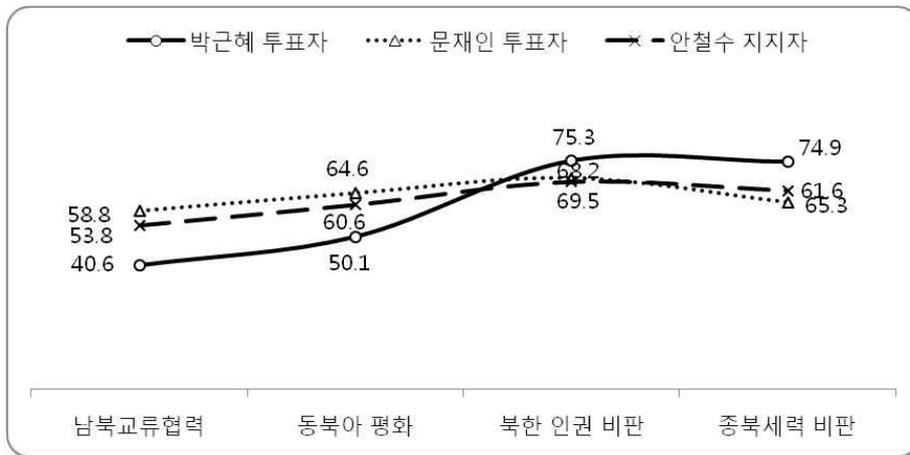
이런 자료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선호 지수와 북한체제 비판선호 지수를 구성하여 비교해 보면 <표-7>과 같다.

<표-7> 평화선호 지수와 북한체제 비판선호 지수 (10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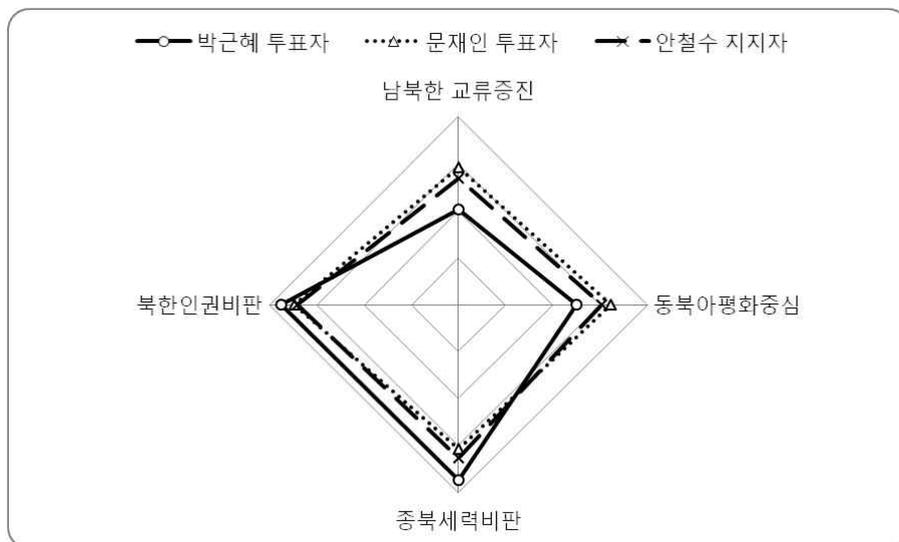
	박근혜 투표자	문재인 투표자	안철수 지지자	전체
동북아 / 한반도평화 선호 지수	45.4	61.7	57.2	53.5
대 북한 체제 비판선호 지수	75.1	65.6	66.8	69.4

결과는 명확하다.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는 입장이 다를 뿐 아니라 각기 경쟁력이 있다.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지키면서 경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여론 지형이 한 쪽으로 경사되어 있다. 이것은 선거전략 상 박근혜 캠프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유권자의 여론지형을 활용하여 민주당 또는 문재인 후보의 특정 요소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지형이 넓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민생정치의 패러다임을 추구함에 있어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것이 <그림-8>이다. 박근혜 투표자는 한반도 안보를 강조하면서 북한체제 비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문재인 투표자는 북한체제 비판 여론지형에 끌려가면서 한반도 평화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안철수 지지집단의 가치지향은 문재인 투표자의 그것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



<그림-8> 안보평화지형



<그림-9> 안보평화지형 방사형 그림

<그림-9>는 안보평화 지형이 전체적으로 좌측 하단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민 이론,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야권의 선거승리 등을 위해 깊은 성찰과 검증을 요구하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7. 맺는 말

486 정치인의 참담한 신뢰추락은 중민 이론의 허점을 여지없이 들춰내면서 민주당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의미를 갖는다.⁸⁾ 같은 실수의 재발이 없도록 철저한 분

8)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 2013 참조

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당의 허약한 체질을 그대로 놔둔 채 지지세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수차례의 통합운동도 같은 성격의 문제다. 이념은 고상했고 혁신적이었다. 국민참여, 시민주권, 온-오프라인 결사체, 모바일 투표 등 지향했던 혁신은 옳고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념과 권력이 혼동되었고 이념의 권력도구화가 명백한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념이 변질된 이유와 그 부작용을 철저히 파헤치고 재발을 막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혁신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이라는 말은 권력을 위한 구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발제는 중도개혁 노선을 중도-진보 양 날개 노선으로 재정립하면서 그 의미를 민생정치로 구체화하려고 했다. 발제를 마치면서 이런 논의가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에 던지는 함의를 간략히 생각해보고자 한다.

안철수 현상의 한복판에 안철수 정치인이 있다. 그 안철수는 성장과정과 주요 활동 및 가치지향에서 전형적인 중민에 속한다. 독재에 항거하여 시위를 주도한 적은 없지만 권위주의 습속을 줄곧 비판해왔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 자신이 거둔 성공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는 인식을 떠나 사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거둔 성공의 과실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다. 의심의 여지없이 중민의 특성이 그의 인생 안에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안철수 현상과 중민 현상이 일치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중복되는 측면은 적지 않다. 새 정치에 대한 갈망과 민생정치에 대한 갈망은 중민의 갈망이기도 하다. 중민이 거부했던 기성체제 또는 권위주의는 과거의 군부독재 체제만은 결코 아니다. 적대적 공생체제 안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제도정치에 대한 안철수의 비판은 곧 중민의 비판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 비판을 자기 것으로 내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철수 현상을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다.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윤리의 실천과 당의 화합을 향한 ‘내 탓이오’ 운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거의 없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지만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난다는 증거는 아직 희박하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과거의 사고 틀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의 관계에는 가능성과 위험이 같이 존재한다. 이 발제가 보여주는 점은 제도 정치권에 대한 높은 불만을 제외하면 안철수 지지집단의 가치지향이 문제인 투표자의 그것과 구별되는 지점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명실상부하게 환골탈태하면 상당수가 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좌파”와 “안철수 우파”의 구별(최종숙, 2013)은 흥미롭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진정한 가치지향의 차이가 가져온 효과인지는 보다 엄밀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안철수 현상의 핵심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크고 그럼에도 정치에서 탈출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한다는 데 있다. 이것이 한국정치와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귀중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 지지집단의 가치와 선호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검증이 요구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한 보기로, 안철수 지지집단은 경제분야에서는 진보를 지향하고 안보분야에서는 보수를 선호한다는 관찰이 있다. 이것이 과연 사실에 부합한 것인가? 혹은 일정한 추세를 명확히 표현한 것인가? 여러 의문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진보와 보수라는 통념을 따르면서 안철수 현상의 진면목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 2013 18대 대선평가보고서: 패배원인 분석과 민주당의 진로.
- 심영희. 2013. “80년대 세대의 현주소와 민주당의 과제,”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2013. 중민이론의 재조명: 안철수현상과 민주당의 과제, 2013. 6. 3. 대한상공회의소.
- 최종숙. 2013. “복합적 유권자층의 등장? : 안철수 지지집단 분석,”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2013 중민이론의 재조명: 안철수현상과 민주당의 과제, 2013. 6. 3. 대한상공회의소
- 한상진. 1983a. “관료적 권위주의와 한국사회,” 서울대 사회학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261-97쪽.
- 한상진. 1983b. “관료적 권위주의 하에서의 민주주의의 전망,”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9-36쪽.
- 한상진. 1985. “권위주의의 유산과 민주화의 논리,” 현대사회 5권 1호 (봄) 특집, 신홍공업사회의 연구, 20-36쪽.
- 한상진. 1986. “한국 중산층은 과연 보수적인가?” 사상과 정책 3권 3호, 여름호, 114-132쪽.
- 한상진. 1987a. 민중의 사회과학적 인식, 문학과 지성사.
- 한상진. 1987b. “한국 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여름호), 121-148쪽.
- 한상진. 1988a. “민중과 중산층 귀속의식에 관한 연구: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와 화이트 칼라를 중심으로,” 고영복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서울:전예원, 267-298쪽.
- 한상진. 1988b. 변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서울: 동아일보사.
- 한상진. 1989a. “중심화 변혁모델의 탐색: 중민노선을 향하여,” 계간 사상 창간호, 사회과학원, 172-232쪽.
- 한상진. 1989b.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한상진. 1990a. “중심화 변혁모델의 사회적 기반: 中民개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한길사, 84-128쪽.
- 한상진. 1990b. “사회변혁운동의 민중성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고찰,” 한국 사회학회 (편), 한국 사회의 비판적 인식, 나남사, 439-470쪽.
- 한상진. 1992. 중민이론의 탐색, 서울: 문학과 지성사.
- 한상진. 1994. “사회개혁과 중민이론: 도덕적 자원의 제도화,” 계간 사상, 가을호.
- 한상진. 1996. “언술검증과 비판이론,” 사회비평 15호, 16-45쪽.
- 한상진. 1997. “중민의 형성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28권 3호, 535-572쪽.

- 한상진. 1999. “한국사회 변동의 양면성: 중민이론의 관점에서,” *계간 사상*, 가을호, 1999. 146-172쪽.
- 한상진. 2000. “386세대는 누구인가 - 9가지 명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개토론회, ‘386세대의 가치관과 21세기 한국,’ 프레스 센타, 4월 7일, 3-12쪽.
- 한상진. 2003. 386세대, 그 빛과 그늘. 문학사상사.
- 한상진. 2007. “탈인습적 세대의 형성과 분화: 사회변동 주체의 탐색,” *이론과 사회*, 11집, 2007, 4-48쪽.

Habermas, Jurgen. 1979,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Beacon.

Habermas, Jurgen.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oston:Beacon.

Habermas, Jurgen. 1987,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rnity*, Cambridge:MIT Press.

Habermas, Jurgen. 1990,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MIT Press.

80년대 세대의 현주소와 민주당의 과제

심 영 희
(한양대 석좌교수)

1. 서론

18대 대선에서 “50대의 반란”(김봉선, 2012; 이지은, 2012) 또는 “486세대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다. “민주화세대”, “중민세대”(한상진, 1989; 1991; 2003; 2007)라고 불려온 80년대 세대는 1987년 소위 “87항쟁”의 주역으로 민주화의 상징이었고 사회에 들어간 이후에는 제도권내에서 개혁의 중추세력으로 간주되었으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주축이 되었던 그들이 2012년 대선에서는 대거 여당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도되었다. 여기에서 80년대 세대는 출생연도로 보면 60년대에 출생하고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로서 1980년대의 민주화시기를 경험한 세대를 가리킨다. 이러한 경험이 그들을 다른 세대와 구별 짓는 탈인습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게 하였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계속 그 성격을 유지하게끔 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한상진, 1989; 1991; 2003; 2007) 세대라는 표현을 쓴다. 이들은 현재 나이 만 44세(1969년생)에서 만 53세(1960년생)까지에 해당된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이 글의 질문을 보다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0년대 세대는 이번 18대 대선에서 어떤 투표를 하였는가? 보도에서처럼 이전의 민주화세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야권에 등을 돌렸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80년대 세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탈인습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그들도 나이가 들면 보수화가 되는가? 이를 연구질문으로 다시 말하면 80년대 세대는 세대효과를 여전히 유지하는가? 아니면 연령효과에 의해서 그들의 이전의 탈인습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중민이론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역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의 투표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특히 18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의 투표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또한 이들의 투표가 다른 세대의 투표와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만약 80년대 세대가 야권에 등을 돌렸다면 또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80년대 세대의 여러 측면을 살펴본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이슈를 다룬다. 그 네 가지는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후보의 수행능력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당 이미지이다. 역대 대부분의 대선에서 중요했던 이슈는 경제적 상황과 대북 담론이었고, 이 둘은 18대 대선에서도 여전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이 두 측면과 관련해서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18대 대선에서 그들을 특정후보 지지로 끌어들이는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후보의 수행능력과 정책에 대한 평가, 정당의 이미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두 이슈가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요인 또는 배경요인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둘은 선거의 전략적 프레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네 가지가 투표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논의하기보다 이 네 가지에 대해 80년대 세대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18대 대선과 80년대 세대의 현주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87항쟁 이후 26년이 지난 2013년의 상황에서 한국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한 80년대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80년대 세대의 가치지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들은 20여년전의 탈인습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이 퇴색했는지 살펴본다. 또한 이들의 가치지향을 통해 민주당이 이들을 다시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세대란 무엇이고 세대효과란 무엇인가? 세대효과는 각 세대가 겪는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험의 결과로 생성된 그 세대 특유의 정치적 성향이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Jennings and Niemei, 1981, 노환희 송정민, 2013에서 재인용). 연령집단을 세대와 혼동해서 쓰는 경향이 있기도 하나, 세대론자들은 세대를 자연연령과 별개로 인식하고, 한 세대가 공유하게 되는 가치 정향과 태도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에 기반을 두어, 특히 정치사회화 초기의 과정을 강조하고 이 기간 동안의 경험이 해당유권자의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노환희, 송정민, 2013: 109). 따라서 세대효과는 “코호트 분석”을 통해 각 세대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집단의 정치적 성향과 태도가 장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에 비해 연령효과란 “생애주기효과”로도 불리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한 기간 동안의 정치적 사건의 영향력 보다는 자연연령의 증가에 따른 유권자의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성숙과정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효과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의미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권자들은 자연스럽게 보수화되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박원호, 2012, 노환희 송정민에서 재인용). 즉 유권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정치적 의식과 행태의 풍화작용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80년대 세대의 특징을 드러내고 비교를 하기 위하여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기성세대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한다. 디지털세대는 흔히 ‘X세대’, ‘N세대’, ‘탈냉전 세대’, ‘월드컵 세대’ 등으로 부르지만, 이 글에서는 이들의 공유된 소통 양식에 주목하여 ‘디지털 세대’로 호칭하기로 한다.¹⁾(한상진, 2007) 90년대 세대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학생운동과 민주화투쟁으로 점철된 80년대 세대와 달리 학생운동도 약화되고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살아온 세대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이 글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상진사회연구소가 실시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로서 표본은 1,026명이다. 둘째는 중민재단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로서 표본은 446명이다. 자료수집은 서베이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자료수집방법은 60세 이하의 조사대상자에게는 패널을 활용한 web 조사를 실시하였고, 60세 이상의 조사대상자에게는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를 <2013 국민의식조사>라 칭하고, 후자를 <2013 중민의식조사>라 칭한다. 비교 목적으로 사용한 2005년 자료는 <선진한국국민의식조사>와 <탈인습 세대조사>다.

이 두 자료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2-1, 2-2와 같다.

<표 2-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2013 국민의식조사)

인구학적특성		빈도(%)	인구학적특성		빈도(%)
성별	남자	509(49.6)	계층	상층	17(1.7)
	여자	517(50.4)		중층	577(56.2)
연령	19세-29세	192(18.7)		하층	432(42.1)
	30세-39세	209(20.4)	소득 수준	100만원이하	100(9.7)
	40세-49세	220(21.4)		101-200만원	175(17.1)
			201-300만원	196(19.1)	

1) 80년대 세대와 디지털 세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 보기로, 박길성(2002: 27)은 80년대 세대를 “정치화된 사회운동 세대”로 규정하고 디지털 세대를 “상대적으로 보수화되고 탈정치화된 문화 세대”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전자는 “6월 항쟁을 통해 정치적 분출을 경험한 세대”라면, 후자는 “2002년 월드컵에서 한 반도를 붉게 물들임으로써 문화적 분출을 경험한 세대”로서 이 두 세대는 “가장 큰 세대 갈등의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는 견해도 피력되었다(조대엽, 2002: 147). 이에 비해 한상진(2007)은 두 세대의 기본 성격을 진보와 보수, 정치와 문화, 집단과 개인 등으로 나누고 그 사이의 차이와 갈등을 강조한 이런 주장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두 세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50세-59세	198(19.3)		301-400만원	193(18.8)
	60세이상	207(20.2)		401-500만원	159(15.5)
지역	서울	205(20.0)	지지정당	501만원이상	203(19.8)
	인천/경기	295(28.8)		새누리당	317(30.9)
	대전/충청	104(10.1)		민주당	158(15.4)
	광주/전라	104(10.1)		통합진보당	16(1.6)
	대구/경북	105(10.2)		기타정당	13(1.3)
	부산/울산/경남	167(16.3)		지지정당없음	522(50.9)
	강원/제주	46(4.5)			
학력	중졸이하	131(12.8)	정치적 성향	보수	263(25.6)
	고졸	260(25.3)		중간	396(38.6)
	전문대재이상	635(61.9)		진보	367(35.8)
합계	1026(100.0)				

<표 2-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2013 중민의식조사)

세대	빈도(%)
80년대 세대	203(45.5)
디지털세대	243(54.5)
합계	446(100.0)

<2013 국민의식조사> 자료의 분석을 위한 세대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먼저 80년대 세대는 60년대 출생 80년대 대학 다닌 세대, 90년대 세대는 70년대 출생 90년대 대학 다닌 세대, 디지털 세대는 8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 모두를 포함하였다. 기성세대는 대학교육 여부와 상관없이 60년대 이전 출생자 모두를 포함하였다. 이렇게 하면 60년대 출생자 중 고졸 이하와 70년대 출생자중 고졸이하가 빠지게 되는데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이글의 3절과 4절은 주로 <2013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5절은 주로 <2013 중민의식조사>자료와 <2005 중민의식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2-3> 세대구성(2013 국민의식조사)

	빈도	퍼센트
기성세대	306	33.3
80년대 세대	138	15.0
90년대 세대	210	22.9
디지털 세대	264	28.8
합계	918	100.0

3. 80년대 세대는 등을 들었는가?

먼저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우는 80년대 세대가 18대 대선에서 과연 야권에 등을 돌렸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8대 대선과 역대 대선에서 80년대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18대 대선에서 특정후보 지지 이유의 분석을 통해 표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18대 대선과 역대 대선의 세대별 후보지지

먼저 18대 대선에서 후보자별 지지세대의 구성비를 보면 박근혜 투표자 중에는 기성세대가 53.8%로 가장 많고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는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문재인 투표자의 경우에는 디지털세대가 34.0%, 90년대 세대가 31.8%로 많은 편이고 기성세대와 80년대 세대는 18.9%, 15.3%로서 비슷한 편이다. 젊은 연령층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나이든 연령층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18대 대선의 경향이 세대별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표3-1> 18대 대선 세대별 후보지지

	기성세대	80년 중민세대	90년 중민세대	디지털세대	전체
박근혜 투표자	53.8	15.3	14.1	16.8	100.0(411)
문재인 투표자	18.9	15.3	31.8	34.0	100.0(412)
전체	33.3	15.0	22.9	28.8	100.0

이를 후보별 세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73.9%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 80년대 세대는 50%, 90년대 세대는 30.7%, 디지털세대의 경

우에는 33.0%가 박 후보를 지지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의 26.1%, 80년대 세대의 50.0%, 90년대 세대의 69.3%, 디지털 세대의 67.0%가 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초점인 80년대 세대의 경우에는 반반으로 이 자료만으로는 이들의 투표성향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으로 역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3-2> 18대 대선 후보별 세대별 지지

%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체(빈도)
기성세대	73.9	26.1	100.0(299)
80년대 세대	50.0	50.0	100.0(126)
90년대 세대	30.7	69.3	100.0(189)
디지털세대	33.0	67.0	100.0(209)
전체(빈도)	49.9(411)	50.1(412)	100.0(823)

역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의 투표성향을 보기 위해서 <2013 국민의식조사>와 <2013 중민의식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두 자료의 결과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에서 보듯이 역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가 민주당 계열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을 <2013 중민의식조사>로 살펴보면 김대중 대 이회창이 출마한 1997년 대선에서 47.3%, 노무현과 이회창이 출마한 2002년 대선에서 60.1%, 정동영과 이명박이 출마한 2007년 대선에서 20.2%, 문재인과 박근혜가 출마한 2012년 대선에서 43.8%로 나타났다. 상대당인 새누리당 계열 후보의 지지율은 1997년 36.0%, 2002년 26.6%, 2007년 47.3%, 2012년 49.3%로서 새누리당 계열 후보의 지지율은 2012년의 경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계열의 4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2012년의 43.8%는 2002년의 60.1%에 비교한다면 많이 떨어진 수치이고 이렇게 보면 80년대 세대가 야권에 등을 돌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의 43.8%와 49.3%(2013 중민의식조사)를 보면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2) 역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가 민주당 계열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을 <2013 국민의식조사 자료>로 살펴보면 김대중 대 이회창이 출마한 1997년 대선에서 46.4%, 노무현과 이회창이 출마한 2002년 대선에서 58.7%, 정동영과 이명박이 출마한 2007년 대선에서 17.4%, 문재인과 박근혜가 출마한 2012년 대선에서 45.7%로 나타났다. 상대당인 새누리당 계열 후보의 지지율은 1997년 35.5%, 2002년 28.3%, 2007년 49.3%, 2012년 45.7%로 나타난다.

<표> 역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가 투표한 후보 및 지지율 (2013 국민의식조사 자료)

	민주당 계열후보	새누리당 계열후보	기타 후보	투표 안 했음	합계
1997 (김대중 대 이회창)	46.4	35.5	7.20	10.9	100.0(138)
2002 (노무현 대 이회창)	58.7	28.3	4.3	8.7	100.0(138)
2007 (정동영 대 이명박)	17.4	49.3	16.70	16.7	100.0(138)
2012 (문재인 대 박근혜)	45.7	45.7	2.2	6.5	100.0(138)

않기 때문에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3> 역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가 투표한 후보 및 지지율
(2013 중민의를조사 자료)**

	민주당 계열후보	새누리당 계열후보	기타 후보	투표 안 했음	합계
1997(김대중 대 이회창)	47.3	36.0	9.9	6.9	100.0 (200)
2002(노무현 대 이회창)	60.1	26.6	6.4	6.9	100.0 (200)
2007(정동영 대 이명박)	20.2	47.3	18.2	14.3	100.0 (200)
2012(문재인 대 박근혜)	43.8	49.3	2.0	4.9	100.0 (200)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계열, 새누리당 계열 정당 후보들이 얻은 연령대별 지지율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표3-4) 50대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1997년 46.7%, 2002년 46.2%에서 2012년 39.3%로 급격히 떨어졌으나 40대 지지율은 1997년 38.9%, 2002년 49.3%, 2012년 46.7%로서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계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40대의 경우 1997년 41.7%, 2002년 45.6%에서 2012년 52.5%로서 7%나 증가하였고, 50대의 경우에는 1997년 38.7%에서 2002년 50.0%, 2012년 60.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2012년 대선에서는 40대와 50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 더 많은 지지를 한 것이다. 이는 2012년 대선에는 강력한 제 3 후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3-4> 역대 대선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의 연령대별 지지율(15,16,18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민주당 계열 후보	1997(김대중)	39.7%	39.3%	38.9%	46.7%	43.1%
	2002(노무현)	68.0%	61.3%	49.3%	46.2%	51.4%
	2012(문재인)	68.3%	66.5%	46.7%	39.3%	22.9%
새누리당 계열 후보	1997(이회창)	30.7%	33.5%	41.7%	38.7%	51.4%
	2002(이회창)	24.7%	32.7%	45.6%	50.0%	48.1%
	2012(박근혜)	29.6%	32.1%	52.5%	60.7%	76.2%

* 자료: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 2013: 21,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자료

40대의 지지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³⁾ 40대를 전후반으로 나눠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국민의

3) 여러 여론조사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40대의 지지가 엇갈리고 있음이 눈에 띈다. 우리조사인 <2013 국민의식

식조사>에서 40대 전반 연령층은 문재인 후보지지 63.4% 대 박근혜 후보지지 34.5%로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다. 반면 40대 후반 연령층은 박근혜 후보지지 49.2% 대 문재인 후보지지 47.6%로 박근혜에 대한 지지가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40대 후반에서 박근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지는 않다.⁴⁾ (자료: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 2013 18대 대선평가보고서: 53). 40대 후반 연령층이 박근혜를 조금 더 많이 지지했지만 50대와 비교해 보면 그리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2013 국민의식조사>에서 50대 전반에서 문재인과 박근혜 지지는 44.1% 대 54.2% 이다. 40대 전반과 후반의 차이보다 40대와 50대의 차이가 더 확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50대의 반란”은 확실하나 40대는 반란이라기 보다는 “이반”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3.2 특정후보 지지 이유 및 성격

특정후보 지지이유 및 성격을 보면 80년대 세대의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를 5가지로 물어보았다. 이는 1) 당과 후보가 둘 다 마음에 들었다. 2) 당은 별로 였지만 후보는 마음에 들었다. 3) 후보는 별로였지만 지지하는 당 후보여서 투표했다. 4) 당도 후보도 별로였지만 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했다. 5) 당도 후보도 별로였지만 연대 때문에 투표했다.의 다섯 가지이다.

1) 특정후보지지 이유

박/문 후보가 득표한 표를 비교해보면 박 후보의 경우에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 둘 다 마음에 들었다는 응답이 32.3%, 새누리당은 별로였지만 박 후보는 마음에 들었다는 응답이 51.0%, 박 후보는 별로였지만 새누리당 후보여서 투표했다는 응답이 3.5%, 당도 후보도 별로였지만 문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투표했다는 응답이 8.9%, 당도 후보도 별로였지만 보수 대연합이 성취되어 투표했다는 응답이 4.1%였다. 문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문 후보 둘 다 마음에 들었다는 응답이 13.5%,

조사>는 방송3사출구조사와 마찬가지로 40대에서 문재인 지지가 박근혜 지지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조사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조사에서는 40대에서 박근혜가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 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 2013: 21)

4) 다른 여론조사결과들의 분석결과도 유사하다. 대체로 40대 전반이 문재인에게 더 많이 투표했다면 40대 후반은 박근혜에게 더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전반은 일관되게 문재인 지지가 박근혜 지지를 압도하여 2030세대의 투표와 유사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40대 후반의 경우 박근혜 지지가 문재인 지지보다 높지만 문재인 지지를 압도하지는 못한다. 40대 후반에서 박근혜 지지가 문재인 지지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경우는 양자의 지지율 격차가 20%에 달하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조사에 한정된다. 방송3사출구조사에서는 40대 후반에서 8%정도 박근혜를 더 많이 지지했으며 민정연 2013년 1월 조사는 5.6% 정도 더 많이 지지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조사는 오히려 문재인지지가 박근혜지지보다 더 높다.

민주당은 별로였지만 문 후보는 마음에 들었다는 응답이 52.5%, 문 후보는 별로였지만 민주당 후보여서 투표했다는 응답이 5.7%, 당도 후보도 별로였지만 박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투표했다는 응답이 17.9%, 당도 후보도 별로였지만 안철수후보가 지지해서 투표했다는 응답이 10.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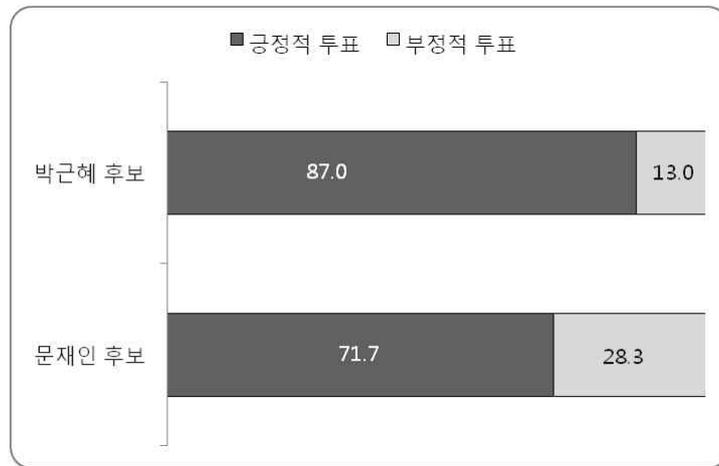
이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보면 80년대 세대의 경우 “새누리당은 별로였지만 박근혜 후보는 마음에 들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당도 후보도 별로였지만 문재인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투표했다”는 응답이 또한 높은 편으로 나타난 것이 특이하다.

2) 적극적 지지와 소극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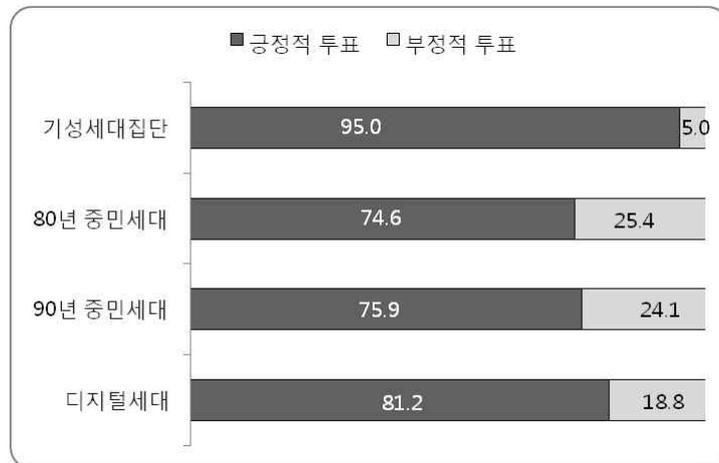
위의 5개 문항 중 앞의 3가지는 당과 후보 모두 또는 당이나 후보나 둘 중 하나가 마음에 들어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 또는 적극적 지지라 할 수 있고, 뒤의 2가지는 당도 후보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상대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또는 다른 이유로 투표했으므로 부정적 또는 소극적 지지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적극적 지지와 소극적 지지로 합해서 박문 후보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 후보의 경우 적극적 지지가 86.8%, 소극적 지지가 13.2%이고, 문 후보의 경우 적극적 지지 71.1%, 소극적 지지 28.9%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 지지는 박 후보 86.8%, 문 후보 71.1%로서 박 후보가 더 많고, 소극적 지지는 박 후보 13.2%, 문 후보 28.9%로서 문 후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 후보와 민주당이 유권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박 후보보다 약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보면 박 후보 지지자의 경우 기성세대의 경우 적극적 지지가 95%에 육박하는 반면 80년 세대의 경우 적극적 지지가 74.6%, 소극적 지지가 25.4%로서 소극적 지지가 많은 편이다. 이는 “당도 후보도 별로였지만” 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또는 보수대연합이 이루어져서 찍었다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문재인후보와 민주당이 싫어서 박 후보를 찍었다고도 볼 수 있는 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4.3절, 4.4절) 보다 자세한 논의를 할 것이다. 문 후보 지지자의 경우에는 적극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극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80년대 세대의 경우 소극적 지지가 38.1%로서 “당도 후보도 별로였지만” 박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또는 안철수후보가 지지하기 때문에 찍었다는 뜻이다.



<그림 3-1>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
(적극적 지지와 소극적 지지)



<그림 3-2>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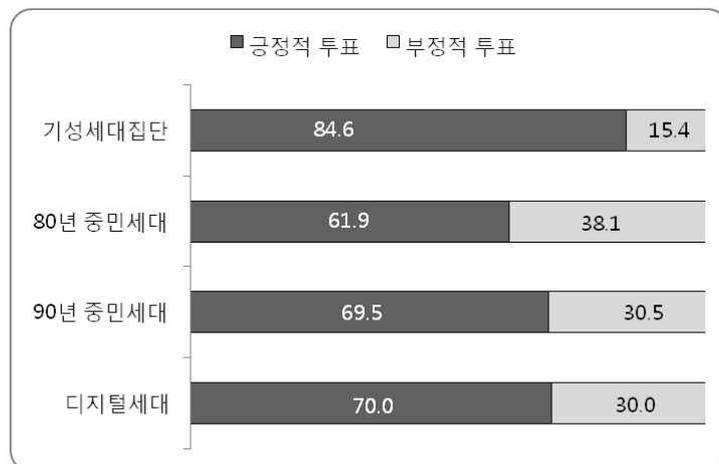


그림 3-3 문재인후보에게 투표한 이유(세대 별)

여기에서 안철수 지지자의 표 이동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지면관계상 생략하겠다.

3.3 소결

18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가 야권에 등을 돌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18대 대선의 세대별 투표, 역대 대선의 세대별 투표, 18대 대선의 지지이유를 통한 표의 성격을 알아보았다.

우선 18대 대선을 볼 때 80년대 세대는 <2013 중민의를식조사>자료에는 약간 박 후보 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2013 국민의식조사>자료에는 정확히 박/문 후보 지지가 반반으로 갈리어 뚜렷한 성격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02, 2007, 2012년 대선에서 80년대 세대의 투표를 추적해보았다.

그 결과 역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가 민주당 계열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을 <2013 중민의를식조사>로 살펴보면 김대중 대 이회창이 출마한 1997년 대선에서 47.3%, 노무현과 이회창이 출마한 2002년 대선에서 60.1%, 정동영과 이명박이 출마한 2007년 대선에서 20.2%, 문재인과 박근혜가 출마한 2012년 대선에서 43.8%로 나타났다. 상대당인 새누리당 계열 후보의 지지율은 1997년 36.0%, 2002년 26.6%, 2007년 47.3%, 2012년 49.3%로서 새누리당 계열 후보의 지지율은 2012년의 경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계열의 4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43.8%는 2002년의 60.1%에 비교한다면 많이 떨어진 수치이고 이렇게 보면 80년대 세대가 야권에 등을 돌렸다고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역대 대선의 연령별 투표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았으나 50대의 경우에는 박 후보쪽으로의 이동이 분명히 보인다. 40대의 경우에는 40대 전 후반이 다르고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엇갈리긴 하나 이반 현상이 보인다. 셋째로, 표의 성격을 보기 위해 지지이유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으나 80년대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소극적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보이는 것 외에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의 탈인습적이고 진보적인 80년대 세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80년대 세대의 현주소:

경제사정, 대북정책, 후보와 정책, 정당에 대한 인식

두 번째 질문은 만약 80년대 세대가 야권에 등을 돌렸다면 또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80년대 세대의 4 가지 이슈, 즉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후보의 수행능력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당 이미지를 다루기로 한다. 경제적 상황과 대북 정책은 역대 대부분의 대선에서 중요했던 이슈였고, 이 둘은 18대 대선에서도 여전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8대 대선에서 투표에 보다 직접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는 후보의 수행능력과 정책에 대한 평가, 정당의 이미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두 이슈가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요인 또는 배경요인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둘은 선거의 전략적 프레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네 가지가 투표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논의하기보다 이 네 가지에 대해 80년대 세대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1 열악한 경제사정과 높은 불안감

1)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50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높은 불안감이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냈고 새누리당 박후보의 지지로 연결되어 대선 승패를 갈랐다는 진단이 많이 나왔다. 은퇴를 하였거나 앞두었으나 자녀에 대한 지원도 노부모에 대한 봉양도 아직 남아있고 있고 자신의 노후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높은 불안감이 이들을 “50대의 반란”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김봉섭, 2012; 이지은, 2012). 그리하여 베이비부머 세대가 새로이 집중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먼저 경제사정과 관련해서 “선생님의 집안 경제사정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5년 전과 비교해서 오늘날 어떻게 변했습니까?”, “5년 전과 비교할 때 오늘날 한국의 경제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선생님의 집안 경제사정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향후 한국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의 4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 5년 전과 비교해서 집안 경제사정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11.4%, 똑같다는 응답은 43.2%, 나빠졌다는 응답은 45.4%로서 대체로 똑 같거나 나빠졌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5년 전과 비교해서 한국경제사정에 대해서

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75.1%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똑같다는 응답이 24.2%, 나아졌다는 응답이 10.7%로 나타났다.

<표 4-1>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100점 만점) 세대별

	기성 세대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전체	F-test
5년전과 비교한 현재 집안 경제사정	42.3	33.5	36.5	38.8	38.7	6.487***
5년전과 비교한 현재 한국 경제사정	41.0	27.5	24.2	31.0	32.2	27.655***
박근혜 정부 출범 시 집안 경제사정 예상	63.8	54.9	49.8	51.4	55.7	25.693***
박근혜 정부 출범 시 한국 경제사정 예상	65.5	52.2	47.6	51.9	55.5	29.866***

*p<0.05, **p<0.01, ***p<0.001

이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5년 전과 비교한 경제사정 평가에 대해서는 80년대 세대와 90년대 세대들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앞으로의 경제사정에 대한 전망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기성세대 중에 가장 높았고 다음이 80년대 세대였다.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90년대 세대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현재 30-40대로서 청년실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2) 위험사회의 등장과 불안감의 증가

투표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보이는 것은 불안감이다. 한국사회는 경제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빈부격차의 심화, 불공정 거래의 확산, 개인화에 따른 가족의 상부상조 기능의 저하, 각종 생활위험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전대미문의 위험사회로 질주하는 양상을 보인다(한상진 심영희 편 2010).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경험하는 위험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일상생활의 불안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생님께서서는 일상생활에서 혹시 다음과 같은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4개의 구체적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는 1) 우리사회의 경쟁이 심해 언제 낙오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다. 2)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가족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3) 경제위기로 집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4)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는 것이 외롭고 삭막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매우 ‘강하게 느낀다’, ‘약간 강하게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네 문항을 주고 응답하게 하였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4 가지중 3 가지가 60점 이상으로 나타

났는데 가장 높은 것이 “경제위기로 인한 살림살이 걱정”과 “가족사고 걱정”으로 각각 70.0, 69.2로 나타났고, 다음이 “경쟁으로 인한 낙오불안”이 60.7, 그리고 “이해받지 못해 외롭고 삭막하다”는 것이 49.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대별로 보면 4가지 모두에서 90년대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경우에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로 인한 살림살이 걱정은 디지털세대의 경우 74.7점, 90년대 세대의 경우 74.6점, 80년대 세대의 경우 71.4로 높았고 기성세대의 경우 61.7로 그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사고 걱정 역시 디지털세대의 경우 74.7점, 90년대 세대의 경우 73.1점, 80년대 세대의 경우 69.4점으로 높았고 기성세대의 경우 62.3점으로 그 중 가장 낮았다. 위의 표 3-2에서 보았듯이 90년대 세대(69.3%)와 디지털 세대(67.0%)의 경우 문 후보 지지가 높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문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불안감이 90년대 세대와 디지털세대에 넓게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80년대 세대는 가족사고걱정, 경제위기로 인한 살림살이 걱정에서는 기성세대와 90년대/디지털 세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후자에 더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일상생활 불안요인(세대별)

100점 만점	기성 세대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합계	F-test
1) 우리 사회의 경쟁이 심해 언제 낙오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다	51.3	63.4	64.1	66.0	60.3	23.282***
2)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가족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62.3	69.4	73.1	73.7	69.1	13.209***
3) 경제위기로 집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61.7	71.4	74.6	74.7	69.8	16.996***
4)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는 것이 외롭고 삭막하다	44.8	53.6	50.1	52.1	49.5	4.853**

*p<0.05, **p<0.01, ***p<0.001

위에서 50대의 불안이 이들로 하여금 야권에 등을 돌리고 새누리당을 찍게 하였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였는데 위의 분석을 보면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 든다.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보면 문후보 투표자의 경우 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은 네 집단 중 디지털세대와 90년대 세대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문후보 지지가 더 높기 때문이다. 50대 초반을 포함한 80년대 세대와 50년대 후반을 포함한 기성세대를 비교해보아도 80년대 세대의 불안감이 더 높으나 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문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 (표 3-2). 따라서 과연 불안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불안감이 높고 새누리당이 이에 적절히 대응해서 50대의 반란이 일어났는지는 앞으로 더 면밀히 연구해봐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2 북한체제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화선호지수

한국정치의 한 특수성은 세계적인 탈 냉전시대가 도래한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 분단의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런 지정학적 근본 조건 위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의 현실에 대응하는 대북정책은 역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이런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레임에 관하여 국가안보 대 교류협력, 한미동맹 중심 대 동북아 평화를 활용하여 “평화선호 지수”를 만들어 세대별 분포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북한인권과 세습의 문제 그리고 친북한 노선(중북세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북한 체제 비판 지수’를 만들어 그 세대별 분포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평화지수의 두 설문을 중심으로 보면, 대북안보 중심과 교류협력 중심의 가치지향이 팽팽히 맞서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 중심과 동북아 평화중심의 축에서는 후자에 보다 많은 지지가 따른다.

응답결과를 세대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80년대 세대와 90년대 세대의 평화선호지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온다. 두 개의 설문 별로 80년대 세대의 평화지수는 100점 만점의 평균치가 각각 58.4점과 63.4점이고 90년대 세대의 그것은 56.8점과 63.6점이다. 이 수치는 기성세대와 디지털세대의 평균적 평화지수보다 현저히 높다.

**<표 4-3> 평화지수 설문에 대한 응답(세대별) (100점 만점)
2013 국민의식조사**

평화지수 설문 (문 84)	기성 세대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전체	F-test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증진	42.8	58.4	56.8	48.3	49.9	15.676***
동북아 평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	50.6	63.4	63.6	57.0	57.4	15.836***

*p<0.05, **p<0.01, ***p<0.001

다음으로는 북한체제 비판에 관련된 설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세습체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를 측정해보면, 71.4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세대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그 차이가 현저하지는 않다. 그 차이는 패러다임의 차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인권과 세습에 관하여 비판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배면에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와 유사한 경향을 종북세력에 대한 입장 정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북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67.5점으로서 북한인권문제와 세습체제 비판에 대한 의견과 비슷하다.

이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보면 “북한인권 비판” 및 “종북세력과 선긋기”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이는 세대는 기성세대로서 각각 73.9점, 74.8점이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는 80년대 세대의 경우이다. 위의 평화지수와 관련해서는 90년대 세대와 함께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던 80년대 세대이지만 북한체제 비판과 관련해서는 각각 69.1점, 73.3점으로서 90년대 세대보다는 기성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표 4-4> 북한체제 비판지수 설문에 대한 응답 세대별(국민의식조사)

100점 만점	기성 세대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합계	F-test
49-11) 종북세 력 선 긋기	73.9	69.1	64.8	61.6	67.5	12.580***
49-16) 북한인 권 비판	74.8	73.3	69.6	67.9	71.4	5.814**

*p<0.05, **p<0.01, ***p<0.001

평화선호 지수보다 북한체제 비판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80년

대 세대의 점수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80년대 세대까지도 이미 새누리당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4.3 후보의 수행능력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다음으로 18대 대선에서 후보의 수행능력과 정책에 대한 평가, 정당의 이미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논의한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과 대북한체제 및 평화지수에 대한 인식의 잇슈가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요인 또는 배경요인이라고 한다면 후보의 수행능력과 정책은 그들을 특정후보 지지로 끌어들이는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선거의 전략적 프레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 문 후보의 수행능력과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후보의 수행능력을 살피기 위하여 다음의 질문을 던졌다. “작년의 대선에서 선생님께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어느 정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하에, 후보의 수행능력 8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는 1)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 2) 후보의 정책과 공약, 3) 후보 캠프의 홍보전략, 4) TV 토론, 5) 상황대처능력, 6) 유권자의 신뢰획득, 7) 정당 동원 능력, 8) 캠프 내 인물 등용 등의 8가지를 물어보고 “매우 잘 수행”, “대체로 잘 수행”, “대체로 잘못 수행”, “매우 잘못 수행”의 4가지 답 중 선택하게 하였다.

두 후보의 수행능력 평가에 영향을 준 8가지 요인들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박 문 후보별로 비교해보면 8가지 항목 중 문 후보가 더 잘했다고 한 것은 tv토론과 상황대처 능력이고 나머지 6 항목은 박 후보가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큰 차이가 난 것은 정당 동원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80년대 세대의 민주당 계열후보 지지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문 후보의 수행능력과 정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문 후보의 수행능력 평가의 8가지 요인을 세대별로 보면 문 후보의 경우에는 40점대에서 50점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90년대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경우 40점대가 3항목이고 5항목은 50 점이상인데 비해, 80년대 세대의 경우 8가지 항목 중 6가지가 40점대로서 기성세대의 평가와 비슷하거나 더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높은 것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tv 토론으로서 각각 53.2점과 52.5점이고, 캠프내 인물 동원능력, 후보 캠프의 홍보전략, 정당동원능력은 최하위권으로서 각각 41.7점, 42.2점, 41.0점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를 지지하리라고 예상했던 80년대 세대가 문 후보의 수행능력에 대해 매우 인색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표 4-5> 문 후보의 수행능력 평가(세대별)

문재인 후보 수행도 (문 45)	기성 세대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전체	F-test
1.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	48.9	46.1	52.6	57.3	51.8	11.353***
2. 후보의 정책과 공약	51.1	53.2	56.2	55.5	53.9	2.757*
3. 후보캠프의 흥 보전략	42.3	42.2	46.3	47.9	44.8	3.854**
4. TV 토론	52.4	52.5	54.0	56.8	54.0	1.708
5. 상황대처 능력	46.7	47.1	52.4	53.8	50.1	5.997***
6. 유권자의 신뢰 획득	43.6	46.6	50.2	53.6	48.4	9.318***
7. 정당 동원 능력	44.4	41.0	40.7	44.9	43.2	2.096
8. 캠프 내 인물 등용	40.1	41.7	46.5	48.7	44.3	7.717***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후보의 주장과 약속에 대해 얼마나 공감했는지 물어보았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나 약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라는 질문하에 후보별로 각각 6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는 후보별로 주장과 약속이 달랐기 때문이다. 박 후보의 경우 1)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 2) 문재인 세력은 이념정부를 꿈꾸고 박근혜 세력은 민생정부를 꿈꾼다는 주장, 3)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4)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 5) 준비된 여성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6)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주장의 6가지였다. 문 후보의 경우에는 1)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 2)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 실패의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3) 이번 대선은 민생을 살리는 국민연대와 민생을 파탄낸 특권연대의 대결이라는 주장, 4)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5)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 6) 일자리 혁명을 이루겠다는 주장의 6가지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매우 공감이 갔다.” “대체로 공감이 갔다.” “별로 공감하지 않았다.”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의 4가지 중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후보의 6가지 주장과 약속들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박 문 후보별로 비교해보면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주장 약속에 대한 공감 정도는 비슷했으나 전반적으로 문 후보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문 후보의 주장과 약속을 살펴보겠다. 문 후보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이 1항목, 50점대가 4항목, 40점대가 1항목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많이 준 요인부터 차례로 보면 가장 높은 것이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61.9점, 다음이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55.8점, 일자리 혁명을 이루겠다. 54.7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은 민생을 살리는 국민연대와 민생을 파탄낸 특권연대의 대결이라는 주장이 46.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의 주장 약속에 대한 공감도의 6가지 요인을 세대별로 보면 디지털세대, 90년대 세대, 80년대 세대, 기성세대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가지 항목 중 5가지에서 기성세대의 평가가 가장 낮으나 “일자리혁명을 이루겠다”는 주장은 80년대 세대의 경우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 세대의 공감도는 기성세대와 디지털/90년대 세대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문 후보의 주장 약속에 대한 공감도(세대별)

문 후보의 주장 약속	기성세대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전체	F-test
1.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실패의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43.2	51.7	58.0	56.6	51.7	15.267***
2. ‘이번 대선은 민생을 살리는 국민연대와 민생을 파탄낸 특권연대의 대결’이라는 주장	38.4	47.6	52.4	52.7	47.1	18.385***
4.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54.6	59.5	68.2	69.1	62.7	18.763***
5.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	40.5	48.0	60.8	65.1	53.4	38.306***
6. ‘일자리 혁명을 이루겠다’는 주장	51.4	48.6	57.5	61.4	55.3	11.404***

*p<0.05, **p<0.01, ***p<0.001

4.4 민주당에 대한 냉혹한 평가와 이반

다음으로 정당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겠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글은 80년대 세대의 민주당 계열후보 지지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민주당의 이미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정당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선생님은 현재의 민주당(또는 새누리당)의 모습에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라는 질문하에 8가지 항목을 물어보았다. 비교를 위해 똑 같은 질문을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8가지 항목은 1)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2)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 3)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이다 4) 나와 같은 사람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 5)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 6)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 7)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해결한다 8)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등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8가지 느낌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보면 두 당 모두 전반적으로 점수가 40점대 이하로서 대체로 낮은 편이나 민주당이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37.2%,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 37.0점,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이다” 34.8%,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34.7점 “나와 같은 사람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34.4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 32.2점,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해결한다”. 29.7점,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 26.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가 최하점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요약하면 이 8가지 항목 중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와 “나와 같은 사람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만 민주당이 더 높고 나머지 6 항목은 새누리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적으로 당이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는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낮다. 그외에도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와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 대한 느낌을 세대별로 나누어보면 8가지 항목 모두에서 80년대 세대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항목 중 2항목이 30점대이고 나머지 6항목이 20점대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항목은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로서 22.3점에 불과하다. 다음이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해결한다”로서 26.4점으로 나타났고 최고점수를 받은 항목은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로서 각각 33.5점과 33.3점에 불과하다.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매우 냉혹하다. 이 절에서 논의한 네 가지 이슈 중 40년대 세대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2002년에 민주당 대선후보에 60.1%라는 높은 지지를 보였던 80년대 세대가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적극적 지지를 보내지 않은

것은 이 절에서 검토한 네 가지 중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지를 하는 경우에도 소극적 지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철회와 관련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표 4-7> 민주당에 대한 느낌(세대별)

민주당은(문 31)	기성 세대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전체	F-test
1.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32.1	29.3	36.2	39.9	34.9	9.154***
2.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	29.2	27.4	33.5	36.9	32.1	8.515***
3.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이다	30.4	27.9	40.4	39.7	35.0	16.190**
4. 나와 같은 사람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	30.0	29.1	38.0	39.4	34.4	11.918***
5.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	22.4	22.3	25.6	26.0	33.2	11.794***
6.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	33.2	33.3	40.1	41.2	37.1	7.588***
7.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해결한다	27.3	26.4	29.5	33.6	29.5	5.171**
8.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34.5	33.5	39.3	41.6	37.5	6.101***

*p<0.05, **p<0.01, ***p<0.001

민주당에 대한 이러한 낮은 평가는 민주당으로부터의 이반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3월 현재 지지정당의 분포는 유권자의 30.9%가 새누리당 지지, 15.4%가 민주당 지지로 나타났고, 통합진보당 및 기타정당 지지는 각각 1.6%, 1.3%로 나타났으며,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비율이 50.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세대별로 보면 디지털세대 40.7%, 90년대 세대 25.0%, 기성세대 24.3%, 80년대 세대 10.0%로서 80년대 세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80년대 세대의 이반현상은 경제사정과 불안감, 대북정책, 후보의 수행능력과 정책, 민주당에 대한 인식의 네 가지 중 민주당으로부터의 이반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들이 왜 민주당

으로부터 이반했는가 될 터인데 추측컨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볼 과제이다.

<표 4-8> 현재 지지정당(%)(세대별)

문 21	기성세대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전체
새누리당	62.3	12.5	10.4	14.9	100.0(289)
민주통합당	24.3	10.0	25.0	40.7	100.0(140)
통합진보당	7.1	28.6	50.0	14.3	100.0(14)
기타정당	15.4	30.8	30.8	23.1	100.0(13)
지지정당 없음	19.3	17.3	29.0	34.4	100.0(462)
전체	33.3	15.0	22.9	28.8	100.0(918)

또한 본인의 이념성향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구체적으로 “평소 선생님은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가장 보수적인 것을 ‘1번’, 가장 진보적인 것을 ‘9번’이라고 하였을 때, 선생님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다.

그 결과는 중간에 해당하는 5에 38.6%가 몰려 있고, 중간에 가까운 4,5,6에 스스로를 위치지운 사람을 합하면 모두 64.2%로서 대부분이 스스로를 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스스로 보수라고 본 사람은 15.9%(1,2,3을 합한 것)에서 25.6%(1,2,3,4를 합한 것), 스스로 진보라고 본 사람은 모두 19.9%(7,8,9를 합한 것)에서 35.8%(6,7,8,9를 합한 것)로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보는 사람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보면 기성세대는 스스로를 보수로 보는 사람이 많고 (59.2%), 90년 세대와 디지털 세대는 스스로를 진보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1.2%, 39.8%), 80년대 세대는 별다른 특징 없이 보수, 중도, 진보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80년대 세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진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진보에서 많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뒤(5.2)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표 4-9> 주관적 정치이념(세대별)(%)

문 22	기성세대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전체
보수	59.2	14.6	10.3	15.9	100.0(233)
중도	34.6	14.8	23.5	27.1	100.0(358)
진보	13.5	15.6	31.2	39.8	100.0(327)
전체	33.3	15.0	22.9	28.8	100.0(918)

4.5 소결: 80년대 세대의 현주소

이 부분에서 논의한 4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80년대 세대의 현주소를 위치시키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경제사정과 관련해서는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와 거의 비슷하게 나빠진 상태에 있으나, 전망에 있어서는 기성세대와 디지털/90년대 세대의 중간쯤의 긍정적인 전망을 하며, 불안의 면에 있어서는 기성세대와 90년대 세대 디지털세대의 중간쯤으로서 90년대 세대 디지털세대보다는 좀 나은 위치에 있지만 후자에 더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 북한 체제비판과 관련해서는 거의 기성세대와 비슷할 정도로 비판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90년대 세대와 함께 평화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민주당 문 후보의 수행능력과 관련해서는 기성세대에 가깝게 비교적 인색한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성세대와 90년대/디지털 세대의 중간의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도 더 낮은 평가를 하여, 네 세대집단 중 가장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네 세대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이념도 그다지 진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80년대 세대의 현주소는 이전의 탈인습적이고 진보적인 모습에서 많은 풍화 작용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특이점이 보인다.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첫째,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북비판지수라는 환경속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한반도 평화지수를 유지하는 점이고, 둘째, 민주당 후보의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편이고,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네 세대집단 중 가장 낮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그만큼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

해본다. 이러한 점들은 80년대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환경속에서 어느 정도 풍화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 또한 약간씩 보여 주는 것 같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80년대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환경속에서 어느 정도 풍화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 또한 약간씩 보여주는 것과 관련하여 80년대 세대의 밑바닥에 변치 않고 남아 있는 가치지향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5. 80년대 세대의 가치지향은 살아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18대 대선과 80년대 세대의 현주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87항쟁 이후 26년이 지난 2013년의 상황에서 한국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한 80년대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하면 80년대 세대의 가치지향은 과연 소진되었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80년대 세대의 가치지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2013 중민 의식조사> 자료이다.

5.1 486정치인에 대한 국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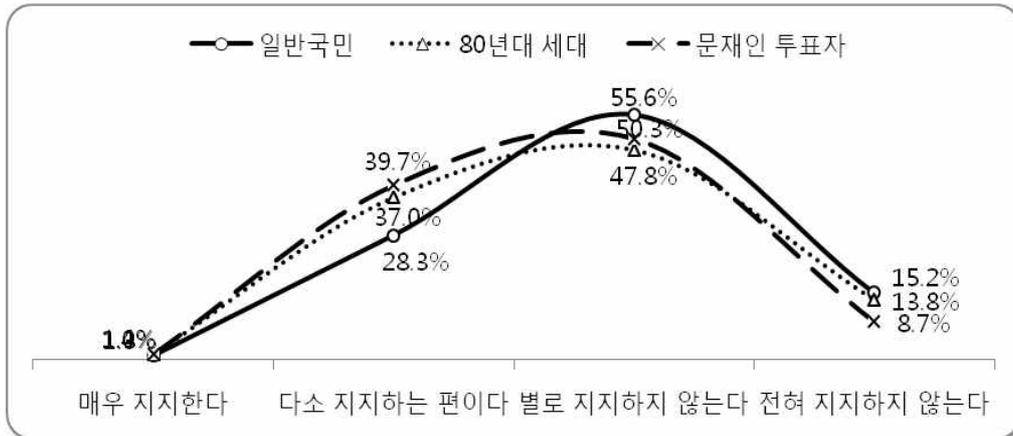
80년대 세대에 대한 가치지향을 살펴보기 전에 비교를 위하여 먼저 소위 486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1980년대 학생운동의 경력으로 정치권에 진입한 분들을 요즘은 <486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이들 정치인에 대한 질문과 응답입니다. 선생님은 왼쪽과 오른쪽의 평가 가운데 어느 편에 더 가깝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소개를 이어 ‘부패했다’와 ‘깨끗하다’와 같이 대조적인 표현을 양 쪽에 배치하고 0-10점의 척도를 제공하여 선택하도록 요구했다. 항목은 모두 10개였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평가는 피하고 486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지지도만을 보기로 한다.⁵⁾

486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지지도(<그림 5-1> 참조)를 보면, 486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매우 지지한다’는 응답은 1%대에 머물러 있고 ‘다소 지지하는 편이다’는 응답 28.3%를 더해 지지자는 30%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를 합친 비율은 70%를 넘는다.

5) 486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한상진 (2013)을 참조하라.

1960년대 출생하여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80년대 세대, 그리고 문재인 투표층의 평가를 보더라도 일반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 486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80년대 세대와 문재인 투표자는 60% 이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자 40%보다 더 많다. 즉 486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그림 5-1> 486정치인에 대한 지지



5.2 80년대 세대의 자기 평가와 상대 평가

486정치인에 대한 낮은 평가와 달리 80년대 세대의 자기평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세대의 가치지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고 80년대 세대와 디지털 세대에게 평가하게 하였다. 설문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으며 오늘날 40대-50대의 연령층을 이루는 <80년대 대학 세대>의 가치지향에 관해, 선생님의 느낌을 여쭙고자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목적으로 세대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항목은 모두 12가지다.⁶⁾ 조사 방식은 각각의 이미지 항목에 대하여 두 세대 구성원들이 자신과 상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는 것이다.⁷⁾

6) 이 12가지 항목들을 일곱 개의 가치블록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한상진, 2007: 39)

<표> 가치 영역별 가치 항목

가치 영역	가치항목	가치 항목	가치영역
사회 공평	사회정의, 약자 돕기	이념 지향	진보적, 보수적
개인 지향	개인 권리, 자기표현	물질 지향	물질 가치
전통 지향	권위 복종, 애국심	양성 평등	양성 평등
민주 지향	참여 정신, 민주 태도		

7) 2013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를 구성하였고, 2005년 조사에서는 응답 가운데 ‘맞지 않는다’는 1점, ‘약간 맞는다’는 2점, ‘매우 잘 맞는다’는 3점을 주어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관적 평가, 즉 80년대 세대 자신이 본 80년대의 자화상을 보면 표 5-1에서 보듯이 12 항목 중 60점 이상이 4 항목으로서, 가장 높은 것은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하다”(63.2점),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62.4점), “물질적 가치를 우선한다”(62.0점), “사회정의를 추구한다”(61.5점), “애국심이 강하다”(59.4점), “참여정신이 강하다”(56.7), “양성평등을 추구한다”(53.9). “자기표현을 잘한다”(53.7). “권위에 복종한다”(53.4). “보수적이다”(53.3). “진보적이다”(51.2)의 순이고, 가장 낮은 것은 “약자를 돕는데 적극적이다”(49.1점)로 나타났다.

이를 디지털세대 자신이 본 디지털세대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보면 표 5-1에서 보듯이 “사회정의를 추구한다”, “권위에 복종한다”. “참여정신이 강하다”,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갖고 있다”, “약자를 돕는데 적극적이다”, “애국심이 강하다”, “보수적이다”의 7가지 항목에서 80년대 세대 자신이 본 80년대의 가치지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7가지 중 “권위에 복종한다”, “보수적이다”만 부정적인 평가이고 나머지는 모두 긍정적인 평가이다. 나머지 5항목, 즉 “물질적 가치를 우선한다”, “진보적이다”, “개인 권리의식이 강하다”, “자기표현을 잘한다”, “양성평등을 추구한다”는 디지털 세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 세대 자신이 본 80년대 세대에 대한 평가를 다른 세대인 디지털 세대 자신이 본 80년대 세대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보면(표 5-2) “물질적 가치 우선”, “권위에 복종”, “보수적이다”의 3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9개 항목에서 80년대 세대가 80년대 세대를 보는 평가가 더 높았다. 이 9가지는 “사회정의를 추구한다”, “참여정신이 강하다”, “진보적이다”, “개인 권리의식이 강하다”,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갖고 있다”, “약자를 돕는데 적극적이다”, “자기 표현을 잘한다”, “양성평등을 추구한다” “애국심이 강하다” 등으로서 모두 긍정적인 가치이다. 80년대 세대의 자기평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긍지가 있고 이에 따라 행동할 확률이 높은 것이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세대에 대한 자기 평가와 디지털세대의 평가에 있어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80년대 세대가 허황되게 높은 자기평가를 한다면 문제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편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80년대 세대의 자기평가가 디지털세대의 80년대 평가보다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세대의 80년대 평가가 낮다는 말인데, 상대적으로 젊은 디지털 세대가 보다 연령층이 높은 80년대 세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높은 자기평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인 현상인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세대의 가치평가에 대한 이전의 자료와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5-1> '80년대 대학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주관적 가치지향 비교
(2013 중민의식조사)

내 용	디지털세대가 본 디지털 세대	80년대 세대가 본 80년대 세대
1) 물질적 가치를 우선한다	75.9	62.0
2) 사회정의를 추구한다	47.3	61.5
3) 권위에 복종한다	50.9	53.4
4) 참여정신이 강하다	53.7	56.7
5) 진보적이다	63.9	51.2
6)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하다	78.2	63.2
7)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	59.9	62.4
8) 약자를 돕는데 적극적이다	41.6	49.1
9) 자기표현을 잘한다	74.5	53.7
10) 양성평등을 추구한다	70.3	53.9
11) 애국심이 강하다	44.2	59.4
12) 보수적이다	36.2	53.3

<표 5-2> 80년대 세대의 가치지향에 대한 80년대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평가(2013 중민의식조사)

내 용	디지털 세대	80년대 세대	전체	F-test
1) 물질적 가치를 우선한다	68.3	62.0	65.5	10.74**
2) 사회정의를 추구한다	47.5	61.5	53.9	50.93***
3) 권위에 복종한다	67.8	53.4	61.2	44.61***
4) 참여정신이 강하다	48.6	56.7	52.3	15.61***
5) 진보적이다	38.8	51.2	44.5	31.66***
6)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하다	60.8	63.2	61.9	1.59
7)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	48.4	62.4	54.7	49.54***
8) 약자를 돕는데 적극적이다	38.7	49.1	43.4	26.70***
9) 자기표현을 잘한다	48.5	53.7	50.9	5.79*
10) 양성평등을 추구한다	37.6	53.9	45.0	67.19***
11) 애국심이 강하다	54.2	59.4	56.6	5.48*
12) 보수적이다	70.5	53.3	62.7	68.72***

*p<0.05, **p<0.01, ***p<0.001

5.3 2005년 자료와의 비교

2013년의 80년대 세대의 자기평가와 상대평가가 이전에 비해 변한 것인지 여전히 같은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전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같은 문항을 사용한 <2005년 중민의식조사> 자료와 비교를 해보겠다.

80년대 세대 자신이 본 80년대 세대에 대한 평가와 디지털 세대가 본 80년대 세대에 대한 평가의 2005년 자료를 살펴보면(표 5-3) “물질적 가치 우선”, “권위에 복종”,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하다”, “보수적이다”의 4가지만 제외하고는 모두 80년대 세대 자신이 80년대 세대를 보는 평가가 디지털 세대가 80년대 세대를 보는 평가보다 더 높았다. 이를 2013년 자료와 비교해보면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하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2013년 자료와 같이 80년대 세대가 자기를 보는 평가가 더 높다.⁸⁾ 이것은 80년대 세대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세대의 잠재력은 소진되지 않고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3> 80년대 세대의 가치지향에 대한 평가(2005년 중민의식조사)

항 목	산업화 세대	386세대	디지털 세대	비교통계
1) 물질적 가치를 우선한다	2.35 (.559)	2.01 (.698)	2.28 (.796)	① = ③ > ②
2) 사회정의를 추구한다	2.30 (.646)	2.55 (.560)	2.28 (.732)	① = ③ < ②
3) 권위에 복종한다	1.88 (.687)	1.86 (.717)	2.20 (.853)	① = ② < ③
4) 참여정신이 강하다	2.31 (.640)	2.42 (.608)	2.24 (.786)	① = ③ < ②
5) 진보적이다	2.23 (.569)	2.28 (.650)	2.03 (.838)	① = ② > ③
6)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하다	2.29 (.618)	2.15 (.695)	2.27 (.799)	① = ③ > ②
7)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	2.33 (.587)	2.31 (.631)	2.06 (.785)	① = ② > ③

8) 2005년과 2013년 자료에 대해 직접적인 점수의 비교는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앞의 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3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를 구성하였고, 2005년 조사에서는 응답 가운데 ‘맞지 않는다’는 1점, ‘약간 맞는다’는 2점, ‘매우 잘 맞는다’는 3점을 주어 척도를 구성하여 서로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교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8) 약자를 돕는데 적극적이다	2.04 (.698)	2.25 (.657)	1.95 (.860)	① = ③ < ②
9) 자기표현을 잘한다	2.29 (.551)	2.11 (.708)	1.94 (.872)	① > ② > ③
10) 양성평등을 추구한다	2.12 (.633)	2.03 (.719)	1.74 (.930)	① = ② > ③
11) 애국심이 강하다	2.13 (.612)	2.41 (.665)	2.27 (.797)	① < ③ < ②
12) 보수적이다	1.86 (.549)	1.94 (.765)	2.24 (.845)	① = ② < ③

5.4 약자에 대한 배려 정신과 적극성

위에서 사회정의,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여러 긍정적인 가치에서 80년대 세대의 자기평가가 높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80년대 세대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풍화작용을 거치기는 하였어도 그 정신은 아직도 유지하려 하고 있고, 또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4절에서 80년대 세대의 높은 평화지수, 민주당에 대한 냉혹한 비판 등을 이런 가치와 연결시킨다면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제 80년대 세대의 가치지향과 관련해서 중민세대의 핵심가치인 “약자를 돕는 일”에 대한 의견과 실천을 물어봄으로써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약자를 돕는 일과 관련하여 물은 질문은 두 가지로서 다음과 같다. 1)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거나 노력도 있지만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에 비해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 성공한 것임으로 약자를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의 시간이나 능력, 자원을 활용하여 약자를 돕는 일에 어느 정도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질문에 각각 “매우 반대한다”부터 “매우 찬성한다”까지, 그리고 “매우 소극적이다”부터 “매우 적극적이다”까지 0점에서 10점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5-4와 같다.

<표 5-4> 약자를 돕는 일에 대한 의견과 적극성

내 용	디지털 세대	중민 세대	전체	F-test
문 16. 약자 나눔 찬성도	66.0	73.5	69.5	16.04***
문 17. 약자 나눔 적극성	47.4	53.3	50.1	9.35**

*p<0.05, **p<0.01, ***p<0.001

표 5-4에서 보듯이 두 문항 모두에 있어서 80년대 세대가 디지털 세대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약자를 돕는 일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디지털 세대가 66.0점, 80년대 세대 73.5점으로서 80년대 세대가 더 높다. 약자를 돕는 일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가에 대해서는 디지털 세대 47.4점, 80년대 세대 53.3점으로서 이 역시 80년대 세대가 높다. 이렇게 볼 때, 87항쟁 이후 26년이 지난 2013년의 상황에서 한국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한 80년대 세대의 가치지향은 소진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민주당은 따라서 80년대 세대의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다시 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이 글에서는 87항쟁 이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현실에서 “중민” 또는 “80년대 세대”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18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는 과연 등을 돌렸는가? 둘째, 80년대 세대의 경제사정, 대북정책, 후보와 정책, 민주당에 대한 인식 등 그들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셋째, 그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밑바닥에 변치 않는 “중민”의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는가? 등이다. 이에 대해 <2013 국민의식조사> 자료와 <2013 중민의식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18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의 투표를 알아보기 위해 18대 대선의 세대별 투표, 역대 대선의 세대별 투표, 18대 대선의 지지이유를 통한 표의 성격을 알아보았다. 우선 18대 대선을 볼 때 80년대 세대는 <2013 중민의식조사>자료에는 약간 박 후보 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2013 국민의식조사>자료에는 정확히 박/문 후보 지지가 반반으로 갈리어 뚜렷한 성격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02, 2007, 2012년 대선에서 80년대 세대의 투표를 추적해보았다. 그 결과 역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가 민주당 계열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을 <2013 중민의식조사>로 살펴보면 김대중 대 이회창이 출마한 1997년 대선에서 47.3%, 노무현과 이회창이 출마한 2002년 대선에서 60.1%, 정동영과 이명박이 출마한 2007년 대선에서 20.2%, 문재인과 박근혜가 출마한 2012년 대선에서 43.8%로 나타났다. 상대당인 새누리당 계열 후보의 지지율은 1997년 36.0%, 2002년 26.6%, 2007년 47.3%, 2012년 49.3%로서 새누리당 계열 후보의 지지율은 2012년의 경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계열의 4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43.8%는 2002년의 60.1%에 비교한다면 많이 떨어진 수치이고 이렇게 보면 80년대 세대가 야권에 등을 돌렸다고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역대 대선의 연령별 투표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았으나 50대의 경우에는 박 후보 쪽으로의 이동이

분명히 보인다. 40대의 경우에는 40대 전 후반이 다르고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엇갈리긴 하나 이반 현상이 보인다. 셋째로, 표의 성격을 보기 위해 지지이유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으나 80년대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소극적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보이는 것 외에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의 탈인습적이고 진보적인 80년대 세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사정, 대북정책, 후보의 수행능력과 정책, 민주당에 대한 인식과 평가라는 4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80년대 세대의 현주소를 알아보았다. 우선, 경제사정과 관련해서는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와 거의 비슷하게 나빠진 상태에 있으나, 전망에 있어서는 기성세대와 디지털/90년대 세대의 중간쯤의 긍정적인 전망을 하며, 불안의 면에 있어서는 기성세대와 90년대 세대 디지털세대의 중간쯤으로서 90년대 세대 디지털세대보다는 좀 나은 위치에 있지만 후자에 더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 북한 체제비판과 관련해서는 거의 기성세대와 비슷할 정도로 비판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90년대 세대와 함께 평화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당 문 후보의 수행능력과 관련해서는 기성세대에 가깝게 비교적 인색한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성세대와 90년대/디지털 세대의 중간의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도 더 낮은 평가를 하여, 네 세대 집단 중 가장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네 세대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이념도 그다지 진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80년대 세대의 현주소는 이전의 탈인습적이고 진보적인 모습에서 많은 풍화 작용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특징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첫째,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북비판지수라는 환경속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한반도 평화지수를 유지하는 점이고, 둘째, 민주당 후보의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편이고,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네 세대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80년대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환경속에서 어느 정도 풍화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 또한 약간씩 보여주는 것 같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80년대 세대의 밑바닥에 변치 않고 남아 있는 가치지향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비교를 위해 한편으로는 80년대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가치지향 평가를 비교하고 다른 편으로는 2005년 자료와 2013년 자료를 비교하였다. 12가지 항목의 가치지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통해 살펴본 결과 80년대 세대의 자기평가는 디지털 세대의 자기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2005년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약자를 돕는 일”에 찬성하고 적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것은 80년대 세대가 시간이 지남에도 자기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세대의 잠재력은 소진되지 않고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80년대 세대에 여전히 관심이 있고 이들을 끌어당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80년대 세대의 이런 현주소를 고려하여 이 세대를 끌어당기는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사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한반도 평화지수와 대 북한비판지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행능력이 뛰어난 후보와 훌륭한 주장과 공약을 만들어 내는 정책,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더 많은 사람을 민주당으로 끌어당기는 정책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은 80년대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많은 세대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봉선 2012. “50대의 반란인가?” 경향신문 2012. 12. 24.
- 노환희, 송정민. 2013. “세대효과인가, 연령효과인가: 18대 대선의 세대균열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정치 특성과 변화, 2013. 1. 23.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107-133.
-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 2013. 18대 대선평가보고서: 패배원인 분석과 민주당의 진로.
- 이지은. 2012. “불안은 50대의 영혼을 잠식했다.” 한겨레 21, 2012. 12. 31.
- 정태석. 1996. 「한국의 신세대: 신세대의 자기표현」, 현대사회 43.
- 조대엽. 2002. 「한국의 사회운동세대, 386」, 계간 사상 가을호.
- 한상진. 1989. 「중심화 변혁모델의 탐색: 중민노선을 향하여」, 계간 사상 창간호, 사회과학원, 172-232쪽.
- 한상진. 1991. 중민이론의 탐색, 문학과지성사.
- 한상진. 2003. 386세대, 그 빛과 그늘, 문학사상사.
- 한상진. 2007. “탈인습세대의 형성과 “ 사회와 이론 통권 11집.
- 한상진. 2013. “중민 이론의 자기반성: 중도개혁 노선의 재정립과 민생정치의 과제,”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2013 중민이론의 재조명: 안철수현상과 민주당의 과제, 2013. 6. 3. 대한상공회의소.
- 한상진 심영희 편. 2010.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새물결.

한국정치체제의 변동과 안철수 현상 : 87년체제론의 관점에서

김 종 업
(한신대 사회학)

1. 머리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은 상당한 승리를 거두었다. 단순히 반 MB 정서만이 아니라 의제의 수준에서 무상 급식을 중심으로 복지 이슈가 부상했고, 갈등이 존속했지만 개혁-진보간의 연합정치가 일정한 흐름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였다.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투표율도 MB 정부 하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18대 대선에서 이점은 매우 뚜렷하게 실증됐다). 연장선상에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될 무렵,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중대선거가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기 시작했다. 대중이 정치에 대한 ‘합리적 무관심’으로 ‘합리적 관심’으로 선회하는 징후가 뚜렷해졌으며, 이 합리적 관심이 체제 변동의 문턱을 넘는 동원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좌절되었으며,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멘붕’이라는 말이 지식인과 대중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런 기대 좌절은 MB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감이나 더 나은 체제의 수립을 향한 가치 헌신이 사회과학계에 널리 퍼져있었던 데서 비롯된 일종의 소망적 사유(wishful thinking)의 결과일까, 아니면 실현되지는 않았다 해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던 기대였을까? 아마도 정답은 두 가지 판단 사이 어디쯤에 위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향한 연습, 그것도 꽤도 강도 높은 연습이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다.

이하에서는 체제 전환의 잠재력을 함축했던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안철수 현상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우선 87년체제의 행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제2절). 체제 이행의 연습이라는 관습에서 본다면, 역시 정치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87년체제를 정치적인 수준을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제3절). 그리고 이런 논의에 기반해서 87년체제로부터의 탈피운동이라는 견지에서 안철수 현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제4절).

2. 87년체제의 행로

: 박정희체제 그리고 분단체제와의 관련 속에서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형성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상을 흔히 “87년체제”라고 부른다.¹⁾ 이렇게 한 체제를 발생 연대를 덧붙여 서술하는 데는 그것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총괄하는 표현을 제시하기 어려운 잠정성이 체제의 속성이라는 직관이 깃들여 있다.²⁾ 이 인식상의 잠정성 밑에는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 그리고 그로 인해 청산되지 않은 구체제 집단과 민주화 이행을 주도한 민주파간의 세력 교착, 그리고 양 진영 간의 힘겨운 진지전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87년체제의 행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그것의 한 방법으로 87년체제를 그 이전 체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는 상위수준에 있는 분단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박정희체제로부터의 불완전 탈피

전두환 정권을 연장된 박정희체제라고 파악한다면, 87년체제는 1961년부터 1987년까지 이어지는 긴 박정희체제(내부에 몇 개의 하위 체제를 시계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의 후속체제라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87년체제가 박정희체제의 유산을 어떻게 변형했는지, 그것으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이동해왔는지를 살필 때, 87년체제의 현재 위치가 좀더 명료해질 것이다.

박정희체제는 권위주의적 발전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행은 사회의 다양한 세력이 권위주의적 국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프로젝트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국가-은행-대자본의 삼자동맹에서 권위주의적 국가의 하위파트너였던 대자본에게 탈박정희화는 자유화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되었고,³⁾ 삼자동맹 아래 배제되었던 민중부문은 탈박정희화를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프로젝트로 수행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의 경합이 87년체제를 특징짓는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탈박정희체제의 두 프로젝트가 그 체제의 한 축인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지만, 또다른 한 축인 발전/성장주의에 대한 명시적인 도전을 내포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발전주의에 대한

1) 87년체제에 대해서는 졸편, 『87년체제론』, 창비, 2009 참조.

2) 예컨대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우리 사회를 총괄하기 위한 표현으로 민주화 체제, 혹은 신자유주의 체제 같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파악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분석틀 또한 이행 이후 사회의 성격에 대한 적극적 규정을 피하고 정치 및 사회 분석의 요구 수준을 민주주의의 발달 상황과 논리에 대한 분석으로 낮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7년체제'론'은 민주화 이후의 사회 체제를 지칭 또는 명명의 차원에서 그 특징을 간결하게 요약할 수 없음을 지칭 자체에 표기하고자 한다.

3) 흔히 이야기되듯이 대자본의 자유화 프로젝트는 1997년 외환위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환위기는 급진적 자유화와 개방의 파괴적 결과이며, 아이러니한 것은 대자본이 자신이 초래한 위기를 전체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강력한 도전은 생태주의로부터 나올 수 있다. 하지만 87년체제를 통해서 생태주의는 체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전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발전주의가 체계통합의 수준 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수준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⁴⁾

근대 사회는 체제 운영의 성과에 대한 배제 없는 포함을 정당성의 원리로 삼는다.⁵⁾ 이런 정당성 원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수행능력 개선이 요구된다. 하지만 수행성 개선이 배제 없는 포함을 실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체제의 수행성을 보완하는 의미론이 발전되며, 그것의 한 방법은 배제 없는 포함의 시간화, 즉 그것을 미래의 지평에 투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현재의 배제가 야기하는 불만은 체제 도전적 잠재력을 잃고 “아직 포함되지 않은 잠정적 상태”라는 규정에 의해 진정될 수 있다.

발전주의는 체제의 수행성 개선을 통해서 경제 성장과 물질적 부의 배분이라는 성과를 형성하고자 하며 그것을 약속한다. 이런 기획이 일정한 성공을 거둔다면 그 체제 속의 개개인들은 과거보다 나은 현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생활사에 투영된 개선의 경험은 미래의 개선에 대한 신빙성 근거가 된다. 미래의 개선 전망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안정화될 때, 발전주의는 체계통합의 원리를 넘어서 사회통합의 수준으로 침투하게 된다. 즉 현재의 배제 또는 불평등을 아직 이룩되지 않은 포함, 멀지 않아 도달할 포섭으로 정당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긴 박정희체제를 통해서 경제 발전의 성과는 매우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발전주의에 기초한 기대는 경험적 반증에 직면할 때도 그것을 일시적 장애로 간주하며 저항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따라서 발전주의에 대한 생태주의적 도전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주의에 대한 신뢰의 철회가 발생해야 한다.

이런 신뢰의 철회가 나타난 것은 이르게 잡아도 외환위기 이후이고 가사화되기 시작한 것은 MB정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발전주의의 신빙성 상실 또는 그것에 대한 신뢰의 철회 현상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 사회로부터 저성장 사회로 이행한 것에서 비롯된다. 저성장은 분배를 향한 투쟁을 격화한다. 모든 가계는 지위 상승의 전망보다 하락의 전망이 커지기 때문이다.⁶⁾ MB정부는 이런 불안한 전망 때문에 등장할 수 있었던 정부이지만 그런 불안한 전망이 낡은 발전주의를 재가동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명료하게 확인시켜준 정부이기도

4) 록우드는 사회적 통합(societal integration)을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는 두가지 수준으로 구분했다. 그에 의하면 체계 통합은 시장이나 국가처럼 행위자들의 개인적 선택이나 규범적 내면화에 의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회적 통합이며, 사회통합은 가치와 규범을 경유해서 통합이다. 록우드에 이래로 널리 쓰이는 이 개념 구분을 이 글도 그대로 수용한다. David Lockwood,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 G. K. Zollschan and Walter Hirsh ed., *Social Change: Explorations, Diagnoses and Conjectures*, New York, 1964, pp. 370-383 참조.

5) 계서제를 인정하는(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체제 운영의 원리로 삼는) 사회에서는 체제 운영의 성과를 위계적으로 배분한다. 위계적 배분은 포함과 배제를 차별적 적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평적으로 분화된 근대사회는 배제를 원리의 수준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근대사회가 모든 종류의 불평등에 대해 강력한 저항의 태도를 가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6) 오늘날 우리 사회 대학생들의 장래 희망 가운데 하나는 부모만큼 살고 싶다는 것이다. 이 점은 당연하게도 이른바 명문대생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하다.

또한 MB정부 시기를 통해서 분배 갈등은 갑/을 관계로 대변되는 사회적 위계 및 착취의 강화로 나타났다. 이런 착취 강화는 이전부터 조금씩 감지되어오던, 낙수효과 소멸을 확인시켜주었다. 낙수효과는 커녕 대자본과 재벌의 성장 자체가 광범위한 대중 착취에 의존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대기업의 기업별 노조에 기초한 노동운동의 낙수효과 또한 사라져간 과정이기도 하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대자본의 하위 파트너 집단으로서의 성격이 점점 더 가시화되었다.⁷⁾ 더불어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의 헤게모니 위기를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킨 동시에 발전주의(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구 문화적 합의를 붕괴로 이끌었다.⁸⁾

하지만 저성장 속에서 발전주의적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가지 방안이 동원되었다. 하나는 미래를 착취하는 것이다. 이런 미래 착취의 방안이 바로 광범위한 대출 사회로의 진입이다.⁹⁾ 그러나 이런 미래 착취는 이미 가계대출 약 1,000조와 정부 및 공기업 채무 약 1,000조에서 보듯이 지속불가능한 방식임이 입증되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기획이었던 발전주의를 개인의 수준에 적용하는 것이다. 흔히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더 강도 높은 자기 착취의 테크닉을 개발하는 과정이다.¹⁰⁾ 2000년대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자기계발서의 열풍은 바로 이런 경향을 대변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불기 시작한 힐링 열풍은 사람들이 자기계발 같은 새로운 “세속적 금욕주의”를 자기과격적인 것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¹¹⁾

MB 정부 하에서는 발전주의의 신뢰 상실을 보완하는 사회적·개인적 기법(즉 미래의 착취와 발전주의의 개인화)의 실패가 가시화되었으며, 그것의 반응이 MB 정부 하에서 빠른 속도로 부상한 복지담론이다. 복지도 근본 이념은 배제 없는 포함이다. 하지만 복지는 발전과 달리 포함이라는 과제를 시간 속에 투영하기 보다는 수평적인 사회적 유대로 이관한다. 물론 이런 전환이 요구하는 도덕적 통찰과 연대감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취약하다.¹²⁾ 하지만 우리 사회는 높은 수준의 속도와

7) 다시한번 대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의 장래희망은 지금 특정한 직업이 아니라 “정규직” 혹은 “갑”이다. 한 광고홍보학과 학생은 무엇이 하고 싶으냐는 필자의 질문에 광고를 하고 싶었는데, 광고회사에 가고 싶지는 않고, 대기업 광고담당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갑인 정규직이 되고 싶은 것이다.

8) 이메뉴얼 윌러스틴, 『미국 패권의 몰락』, 정범진, 한기욱 역, 창비, 2004 참조. 금융위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로빈 블랙번, 「세계 경제위기의 신호탄, 서브프라임 위기」, 『뉴레프트리뷰』, 서용순 외역, 길, 2009, pp. 68-128; 피터 고언, 「심장 지대의 위기: 새로운 월스트리트 시스템의 결과」, 『뉴레프트리뷰 2』, 길, 2010., pp. 17-47 참조.

9) 대출 사회의 발달과 그것이 야기한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제윤경, 이현옥, 『약탈적 금융사회』, 부키, 2012을 참조하라.

10) 이런 자기계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분석으로는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을 참조하라.

11) 세속적 금욕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1999, 제2부 참조.

12) 발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대조하는 작업을 여기서 진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 두가지만 지적하자면, 발전과 달리 복지는 개인화되지 않는다. 복지는 항상 사회적 유대의 망을 전제한다. 다른 한편 발전이 체계통합의 성과를 사회통합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면, 복지는 사회통합의 성과를 체계의 재설계로 구성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복지담론 또한 매우 역동적이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점은 노무현 정부시기만 해도 진보 정당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던 복지 담론이 민주당을 넘어서 새누리당으로까지 파고들어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모든 정당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수용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상황은 두 가지를 말해준다. 하나는 87년체제를 통해서 발전주의는 지속되었으며, 그것을 해체할 조짐은 최근에 와서 발전주의의 신뢰 상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실마리를 우리 사회는 복지담론 속에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발전주의에 대한 급진적 도전인 생태주의가 성과를 거두는 것은 복지주의 확산의 함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¹³⁾ 즉 복지주의의 발전을 가능케 할 규범적 성숙이나 문화적 변동 및 사회적 유대감의 확산 없이 생태적 전환을 이룩하기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흔들리는 분단체제

박정희체제와 87년체제가 각기 분단체제와 관계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단체제와 박정희체제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재생산하는 기능적 관계(기능주의적 표현을 피한다면 긍정적 피드백 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분단체제는 박정희체제에 의해 지지되며, 박정희체제는 분단체제로부터 엄청난 정당성과 통치자원을 획득했다. 이에 비해 87체제와 분단체제는 상호 침식적이며 상호 불안정화를 유발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백낙청 교수는 이런 상황을 “흔들리는 분단체제”라고 평이하게 명명했는데,¹⁴⁾ 그런 동요 과정은 다양한 귀결을 낳는다.

우선 그것은 남북한 사이의 적대적 상호의존성을 약화하는데, 그것이 적대성의 약화라는 하나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비적대적 상호의존과 상호의존 없는 적대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25여년의 간의 경험이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실제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적대를 약화시키고 평화로운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어가는 흐름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의 강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햇볕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반대의 흐름은 MB정부 이후 뚜렷하게 감지된다. 분단체제가 안정적이던 시기에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한 위협을 자기 체제 안정의 자원으로 동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기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지만, 분단체제가 흔들리면서 높은 수준의 적대가 지속되는 것도 가능해지는데,

13) 여기서 복지주의는 복지를 시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간주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태도를 지지하는 규범과 가치 및 사회과학적으로 계몽되고 일반화된 상식의 복합을 지칭한다. 복지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잔여적 과제로 이해하는 입장은 복지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권리로서의 복지 개념에 대해서는 루만, 『복지 국가의 정치이론』 김종길 역, 일신사, 2001 참조. 지난 해 녹색당 실험에 대한 논의로는 하승수, “녹색전환과 녹색정치,” 미간초고, 2013 참조.

14)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1998 참조.

5.24조치와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들 그리고 3차 북핵 실험 이후 일련의 사태는 바로 그런 경우이다. 한미 “독수리연습”이 실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B-52 전폭기에 이어 B-2 전략폭격기가 남한 상공을 비행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¹⁵⁾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개성공단은 폐쇄되었다.

다른 한편 이런 분단체제의 동요는 분단을 남한 사회 내부로 재진입(re-entry)시킨다. 분단은 해방공간의 좌우파 대립에서 연원하는 사회적 대균열을 남북의 두 국가와 휴전선 형태로 고착한 것이다. 분단체제가 동요하게 되면 이 균열이 남한 사회 내부에 복제된다. 분단체제 안정기에는 시민과 간첩이라는 대립선으로 존재했던 것이 이제는 “친북좌빨 혹은 중북 세력”과 “수구꼴통”이라는 상호경멸적인(경우에 따라서는 증오로도 충분히 전환될 수 있는) 대립선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보수 집단에 대립하는 세력이 더 이상 간첩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세력으로 인지된다는 점이다.

보수집단은 모든 반대 세력을 친북 또는 중북이라는 구별 속에 몰아넣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구별은 보수집단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균열이 남한 사회 내부로 재진입함에 따라 진보진영 내부 또한 같은 구별을 도입한다. 아니 이 대립선은 민주화 운동 시기 학생운동집단 내부 분화로부터 출발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고 심화되어갔다.

분단체제의 동요가 심해짐에 따라서 이런 대립선이 점점 더 강렬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진보정당의 분열이 “중북”이라는 단어를 사회화했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균열도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예민해진다. 신자유주의라는 틀로 한국사회를 분석하려는 이론가들은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려고 하고, 진보진영 내의 자주파를 병리적인 집단으로 해석하며 남북관계를 일종의 국제관계로 해석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6.15공동선언과 연평도 포격을 오가며 내부 개혁의 의제를 집어삼키기 일쑤이며 사회운동과 정당 분화 또는 분열을 야기하기도 하는 작동하는 분단체제의 역동성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¹⁶⁾

발전주의의 헤게모니 상실 그리고 분단의 남한사회 내부로의 재진입이라는 두가지 현상을 염두에 둔다면, 87년체제의 현재 상태는 그것의 출발점에서 중요한 구조화원리였던 지역균열로부터 복지외 의제화된 계급균열 내지 경제균열 그리고 분단의 재진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념균열로 중요성이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최근 북미간 그리고 남북간 긴장고조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서재정, 「북의 3차 핵시험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전망」, 『창작과 비평』 2013년 봄호, pp. 386-411 참조.

16) 최장집 교수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이념적 기초의 마련을 위해서도, 갈등하는 좌·우파민족주의 모두에게 잠정협정(modus vivendi) 내지는 합구의 규칙(gag rule)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가능한 한 민족주의 이슈를 정치영역에서 탈정치화하는 것이 요구된다”(「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 『비평』, 2008년 봄호, p. 23)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민족주의가 정당과 정치가들에 의해서 실제 현실보다 ‘과잉동원’되고 있다는 판단의 수준에서나 실현가능성의 수준에서나 모두 타당성이 없다. 합구 규칙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로는 Stephen Holmes, “Gag rules or the politics of omission,” i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J. Elster and G. Hernes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19-58 참조.

물론 여기에 우리는 사회 진화와 문화적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균열과 젠더균열에 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균열들의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87년체제의 특성 해명을 위해서는 그것들이 계급균열이나 이념균열과 결합하는 방식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87년 정치체제

정치체제의 수준에서 87년체제의 특징을 밝히고 그것에 입각해 87년체제로부터의 탈피운동의 양상을 살펴보자. 근대 정치의 일반적으로 행정, 의회 및 정당정치(좁은 의미에서 정치), 공론(장)이라는 세 영역으로 분화를 겪는다. 행정은 수직적 명령체제에 근거한 관료제로 운영된다. 이 수직적 구조 때문에 전통사회의 정치제도와 일정한 유사성을 띤다. 근대 행정에서도 소통은 기본적으로 명령과 복종의 연계이다. 하지만 두 가지 점이 다르다. 우선 전통사회에서 정치제도는 수직적인 위계제의 일원적 체제였지만 근대 사회에서는 이미 지적했듯이 행정, 정치, 공론으로의 삼중 분화가 나타난다. 행정은 이런 삼중 분화 속의 한 계기일 뿐이다.¹⁷⁾ 다음으로 전통사회에서 정치제도는 폭력에 입각한 권력 행사와 법이 통치의 수단이었지만, 근대 행정기구는 법과 재정(화폐)을 기본적인 작동 수단으로 삼는다.

이에 비해 의회 및 정당정치의 영역에서는 수평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정치적 구별코드인 진보와 보수 등의 분화가 형성된다. 정당간 경쟁은 전통사회에서 왕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귀족간의 경쟁과는 다르다.¹⁸⁾ 여기서 경쟁은 제정된 규칙에 입각한 선거경쟁의 행태로 진행되며 국가의 운영에 대한 이념적·정책적 비전에 근거한 경쟁이 된다.¹⁹⁾ 공론은 이런 정치체제에 대한 정보가 순환되고 인지적 동원이 일어나며 정치와 행정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분화되어 나온다. 공론장은 정치에 대한 인지적 과정을 주도하고 사회적 합의와 집합적 의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근대사회에서 주권의 형식적 소재지라고 할 수 있다.²⁰⁾

17) 이런 삼중분화에 대해서는 Michael King and Chris Thornhill, *Niklas Luhmann's theory of politics and law*, New York, Palgrave, 2005, chap. 3 참조.,

18) 루만은 위계적으로 분화된 봉건사회에서의 정치과정을 이렇게 묘사한다. “귀족의 위치는 독자적인 경제에, 자립적으로 무장한 가계에, 그리고 가계에 딸린 사람들에 기초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는 주인 자신이 결정한다. 이 주인은 왕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추종으로 보지 종속으로 보지 않는다. 추종 관계는, 왕의 태도가 계기를 만들 경우 해지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아주 쉽게 동맹관계가 만들어지고 정치적 경쟁자들이 형성된다. 고려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범위가 작고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2』, 장춘익 역, 새물결, p. 822-823 참조)

19) 정당을 기능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첫째, 유권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택의 복잡성 감축 및 유권자의 조직적 인지적 동원 기능을 한다. 둘째, 조직으로서는 정치 엘리트의 충원 및 양성 그리고 정책 개발 기능을 한다. 셋째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공직 담임, 정치적 책임의 소재, 행정관료제의 통제 등의 기능을 한다.

20) 공론장에 대해서는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 변동』, 한승원 역, 나남, 2004 참조. 공론장과 주권의 관계에서 대해서는 Jürgen Habermas, "Appendix 1. Popular sovereignty as procedure." in *Between Facts and Norms*, W. Rehg tr., Cambridge, Polity Press, 1997, pp. 463-490 참조.

이렇게 분화된 단위 사이에는 2중의 순환이 나타난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정당성 또는 정치적 정당성이라고 부르는 공론으로부터 정당으로 거쳐 행정으로 투입되는 정치적 지지(인지적, 조직적 동원)와 선거에 의한 합법적 권력 생성과정이 있다. 다른 하나는 행정으로부터 정당을 거쳐 공론으로 나아가는 수행성 또는 수행적 정당성의 흐름이 존재한다. 이 흐름은 정치체제의 체제 운영과 갈등 조정 역량을 통해서 정치적 지지를 산출한다.

앞서 논의한 박정희체제는 유신 이후로는 이런 분화를 거부했다. 흔히 독재라 불리는 유신체제는 행정부를 그 꼭지점을 차지한 대통령을 위한 일파암적 조직으로 만들고, 정당과 의회를 무력화하며, 공론의 주요 거점을 굴복시키는 동시에 행정의 체제 운영 성과를 배분하는 과정을 유일한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도는 공론과 정치의 도전에 의해 몰락했다고 할 수 있다.

87년체제는 박정희체제와 달리 근대 정치의 삼중 분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전 체제의 유산이 살아남았다. 87년체제는 대통령제에 입각하는데, 이때 대통령제는 한편으로는 행정의 수반으로서 관료제를 지배한다. 이런 제도는 인격을 통한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대신 바로 그 인격에 의한 자의성이라는 위험이 발생한다. 이런 자의성을 통제하는 것은 공중의 여론과 그것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87년체제에서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을 넘어 전체 사회의 주권자 지위도 부여받는다. 따라서 대통령제는 공중과 의회에 의해 대통령의 자의를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결정권을 다시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제왕적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의를 통제할 제도들이 다시 대통령의 자의에 의해서 관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구조적 편성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²¹⁾

이러 제도적 틀로 인해 87년체제를 통해서 대통령은 대체로 의회를 압도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권력 행사의 방향은 수평적인 여야 관계에 근거하는 의회와 정당정치를 대통령 아래 종속시키는 것이다. 그것의 핵심적인 기제는 대통령의 여당 지배, 그리고 (직권상정을 무기로 한) 여당에 의한 의회의 “통법부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갈등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갈등의 반복이 야기한 역설적 귀결은 대통령의 의회지배를 제어하고 의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개혁담론이 발전하기보다 의회의 무능력에 대한 혐오가 대중들 속에서 광범위하게 파고들고, 그 결과 문제 해결의 방향을 도리어 능력 있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대통령에서 찾는 경향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87년체제에서 행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방식은 민주화 이행기의 정치집단간의 협약에 의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모두 단순다수제로 정해졌고 의회는 여기에 소선거제를 더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기본 구조로 지속되고 있다. 이행기

21)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같은 핵심 권력 기관에 대해 지배력을 깊게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조직의 구성에도 커다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일 여당이 원내 다수당이라면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깊게 관찰될 수 있다.

의 정치집단의 중심인물들은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대중적 지지를 받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 간의 정치적 협약의 산물로 선거법의 골간이 짜인 것이며, 이들을 향한 지지 집단의 지역적 분화로 인해 독재의 유산인 지역주의가 더 강한 형태로 재생산되었다.

이로부터 몇 가지 선거 경향이 발생한다. 우선 대통령제에 의해 구조화되는 국민투표제 민주주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향한 운동을 유발했다.²²⁾ 이에 비해 의회는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의 지속으로 인해 따라 양당제를 향한 압력 속에 있는 동시에 87년 민주화 이행기에 형성된 지역주의로 인해 다당제적 경향을 가졌다.

카리스마적 지도자 정치와 대통령제의 상호강화 그리고 대통령의 의회지배 시도 속에서 허약해진 정당과 의회는 사회적 균열을 대의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정당은 대의되지 않은 균열을 대의하는 사회운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으며 또 그로 인해 대중적 신뢰를 잃어갔다.

선거법과 지역주의 속에서 일종의 2.5체제(1+1+0.5)의 변화를 거듭하던 정당체제는 두 가지 변동을 경험한다. 한편으로는 앞서 지적했듯이 계급균열이 지속적으로 중요성을 획득함에 따라서 진보정당이 발전하고, 충청도에 기반한 지역 정당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대신 충청 지역이 일종의 스윙 주(州)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자(이른바 3김)에 의해서 창설되고 그들에 의해 장악되었던 정당들이 이들의 퇴진 뒤에 스스로 지도자를 배출할 능력이 갖추지 못했고, 이런 무능력으로 인해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정당 외부에서 출현하는 일이 빈발하게 되었다. 3김 이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안철수 현상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후보는 점점 더 의회로부터 먼 곳으로부터 호출되었다. 의회가 무능한 것이 되고 무능한 의회를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통해 정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의회 경력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불리한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²³⁾

4. 시민정치와 안철수 현상

1) 시민정치

앞서 서술한 정치구조는 수행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당성 수준 모두에서 불만족스

22) 국민투표제 민주주의 개념은 막스 베버의 개념이다. 좀더 상세한 것은 Wolfgang Mommsen, Max Weber and German politics, 1890-1920, M. S. Steinberg t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chap. 10 참조.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는 Ernest Kilker, "Max Weber and Plebiscitarian Democracy: A Critique of the Mommsen 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2, No. 4 (Summer, 1989), pp. 429-465 참조.

23)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의회 경력이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그의 정치적 명망의 원천은 의회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선거시기의 대중 정치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최근 통치 행태에서도 의회를 대통령 권력에게 복속시키려는 강한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전 대통령들과 다를 바 없다. .

립다. 따라서 이런 상황으로부터 사회운동, 진보정당 운동, 카리스마적 지도자 운동이라는 세 가지 탈피운동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정당에 의해서 대의되지 않은 사회적 균열은 집합행동에 의해서 표현되고, 집합행동은 특정한 조건 아래서 사회운동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사회운동 또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사회운동 형태로 안정화될 수도 있다. 87년체제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공론장의 재활성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조직된 사회운동을 발전시켰다. 이런 사회운동은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로 인해 대의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의회개혁운동을 실천하기도 했다. 2000년 총선 연대는 공론의 지원을 얻는다면 사회운동이 정당체제를 흔들 만큼 강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압력 하에서 강화되는 사회의 개인화 그리고 정당에 의한 사회운동 의제와 성과의 수용으로 인해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운동은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 시민사회 자체가 정치사회의 분열을 복제함으로써 보수적 시민단체가 사회운동화된 것도 그것에 일조했다. 더불어 한때 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상당한 쟁점을 형성했던 시민운동의 중립성논의는 배후로 밀려났다.

다른 한편 기존의 정당체제는 지역주의가 약화됨에 따라서 양당제 경향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계급 균열의 중요성이 부상하며 진보정당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진보정당을 떠받칠 다당제를 향한 압력은 노동운동의 퇴조와 사회운동의 퇴조로 인해 사회적 토대가 약해진 상태이며, 오히려 정당명부식 투표의 도입 같은 선거법 개정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²⁴⁾

이런 상태에서 MB정부에서는 사회운동이나 정당이라는 경로를 우회한 대규모 집합행동이 발생했다. 촛불‘항쟁’이라 불릴 만한 이 사건은 이후 일종의 ‘시민정치’를 작동시켰다.²⁵⁾ 활성화된 유권자 집단들의 일관된 투표선택이 사회운동을 견인하고, 야당 전체의 연합정치를 이끌었다. 87년체제의 탈피운동 가운데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시민정치를 매개로 수렴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촛불집회의 종결 이후로는 동원의 중심 맥락은 조직적이거나 대중행동이라기보다는 공론장을 중심으로 한 인지적 동원이 중심이었다. 인지적 동원이 활발해진 이유는 정부의 대중행동에 대한 탄압, 정당 일체감의 쇠퇴,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수단 등이 결합된 요인이었다.²⁶⁾ 취약한 정당들에 대해서 공론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이다.

그 결과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의 연합정치는 그 이전의 연합정치(3당합당,

24) 지금도 내각제 개헌 같은 거대 규모의 정치변동이 없어도 결선 투표제의 도입,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법 개정, 중대 선거구제 혹은 비례대표제의 증대, 표의 등가성 기준의 엄격화(현행 1:3에서 1:2로 전환) 같은 요소들이 도입된다면, 그로 인해 양당제 압력은 급격히 약해지고 더불어 진보정당 또는 제3 정당이 약진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25) 시민정치는 MB 정부 시기에 새롭게 부상한 용어이며, 정해구, 신진욱, 이병천 등 여러 논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를 너무 폭 좁게 또는 지나치게 폭 넓게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것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위상을 명료하게 하려 시도하는 이남주, 「시민정치의 부상과 정당정치」 『역사비평』, 2012년 봄, pp. 57-87를 참조하라. 그는 이 글에서 시민정치를 (6·7·80년대) 반체제(운동) → (민주화 이후) 반정치(의 정치) → (이명박 정부 하의) 시민정치라는 경로 속에서 파악한다. 또한 연합정치를 시민정치와 정당정치간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파악함으로써 정당연합의 틀 안에서 주로 논의되던 연합정치에 대한 논의(예컨대 손호철과 고원)를 확장한다.

26) 2011년 가을부터 2012년초까지 아이튠 팟캐스트 다운로드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나꼼수”의 유행은 성공은 대표적인 예이다. 나꼼수에 대한 분석으로는 김수진 김수진

DJP 연합,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대연정 제안)처럼 정당이나 정치지도자들간의 상층 연합이 아니라 정당간 연합에 시민사회와 공론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분리가 약화되고 정치사회의 이익연합과 협상의 정치에 병행해서 논증의 정치가 발전하고 가치와 정책의 연합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런 시민정치는 선거 국면에 들어설수록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연합정치는 정당간 연합의 좁은 틀로 이동했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명망가들은 유래 없이 대규모로 정당정치 속으로 진입했다.²⁷⁾ 하지만 4.11 총선 결과는, 복지와 경제민주화같은 진보적 의제를 수용하고 지도자 정치로 자신을 정비한 새누리당이 야당의 연합정치와의 경쟁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준다.

양당제로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토대였던 4.11 총선에서의 야권 연합정치의 패배는 이어지는 대선과 맞물리며 양당제로의 압력을 더 강화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총선 이후 심각한 내부 갈등과 분당까지 겪으며 대선 국면에서 긍정적인 존재감은 거의 발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18대 대선에서는 3가지 탈피 운동 가운데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 운동이 가장 뚜렷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2) 안철수 현상

안철수 현상은 일차적으로 87년체제를 통해서 반복해서 등장한 카리스마적 지도자 운동이 안철수를 통해 나타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현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안철수가 기존의 정당체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지적했듯이 87년체제에서의 카리스마적 지도자 운동은 기본적으로 87년 정치체제의 역설적 귀결, 즉 문제의 주요 원인인 대통령제를 통해서 다시 정당체제의 기능 부전을 해결하려는 경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현상은 이런 정당체제에 대한 두가지 반응, 즉 반정치와 능동적 정치라는 두 흐름을 모두 결합한다. 즉 안철수 현상의 한 축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혐오라고 할 수 있는 반정치의 경향이고,²⁸⁾ 다른 한 축은 기존 정당체제를 개혁하려

27) 사회운동과 정당정치간의 탈분화라고 할 만한 이런 현상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심화된 것에 대한 우려로는 김동춘, 「모두가 정치에 나서면 '소는 누가 키우나?」, 창비주간논평, 2012년 1월 18일 참조.

28) 반정치의 정서를 형성하는 주된 원천은 정치와 영향력을 경쟁하는 두 가지 사회영역이다. 하나는 언론매체이다. 언론 매체는 정치를 관찰할 뿐 아니라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 언론들은 정당체제 혐오의 분위기가 야기하는 정치적 탈동원이 보수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보고 반정치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면이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운동인데, 사회운동 진영도 정치와 영향력을 경쟁하며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기반으로 약한 권력자원을 보충해온 면이 크다(물론 사회운동의 경우 허약한 정당정치로 인해 사회운동 본연의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면이 있고 그로 인해 사회운동의 발전이 지체된 면도 있다). 아무튼 이런 반정치 그리고 도덕에 입각한 정치 비판의 문화가 의도와 무관하게 안철수의 등장을 예비한 면이 있다. 그래도 조중동이 안철수를 위한 레드 카펫을 깔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

는 능동적 경향이다. 이런 두 흐름이 결합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층은 정당체제의 모든 스펙트럼으로부터 출현한다. 거기엔 안철수가 없었다면 새누리당 혹은 박근혜를 지지할 사람도 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적 포지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민주당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고, 민주당과 진보정당들 사이에 위치한 사람도 있고, 진보정당 지지자이지만 진보정당의 내부 분열에 혐오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진보정당이 현실적으로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한 마디로 해서 안철수는 수평적으로 펼쳐진 정당 스펙트럼에 대해 수직으로 형성된 축이다.

기존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비교하면, 안철수 카리스마의 출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안철수는 기업적 신화에 힘입고 있다는 점에서 정주영, 이명박, 문국현의 계보에 속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능력 있는 문국현”이라든가, “착한 이명박”이라는 식의 세간의 평은 설득력이 있다.²⁹⁾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안철수는 이들과 다른 독특성을 지닌다. 우선 그의 지도자로서의 부상은 그 자신의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업적과 문화 활동(청춘 콘서트), 대담한 기부,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 양보 같은 사건 등에 힘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언론과 여론조사에 크게 빚지고 있다는 점이다.³⁰⁾

그는 정당 기반이 없이 활동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라는 점에서도 특이하다(물론 앞으로 어떨지는 알 수 없다). 기존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기존 정당 속으로 진입하거나 창당을 했던 것(심지어 문국현 씨조차 창당을 했다)에 비하면 그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당 부재를 보충할 추종자들의 대중운동을 이끌지 않았다. 안 후보를 향한 분산된 대중의 지지는 실체가 뚜렷했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설수록 안정성을 획득해갔다. 실제로 자발적인 지지 선언과 조직화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나 그의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안 후보나 캠프 참여자 다수는 대중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안철수 캠프는 노사모도 민주당도 없는 노무현의 모습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안 후보는 87년체제의 다양한 카리스마적 지도자 그룹 가운데서 정당 기반이나 대중 운동이라는 토대 없이 정치적 자산과 토대를 가장 크게 형성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정치 상황의 덕을 본 바를 감안하더라도 그가 상당히 큰 카리스마적 자질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출마 후의 시간 부족 때문이든 반정치의 대중적 정서와 조용했기 때문이든 정당 기반과 대중운동 모두가 없는 선대본 형태의 조직이 가진 한계는 뚜렷한 것이었다. 이런 조직은 일종의 소규모 카리스마 공동체같은 특징을 띤다.³¹⁾ 안 후

29) 이런 시각의 글로는 김동춘, 「안철수 현상'을 보는 눈」, <창비주간논평>, 2011년 9월 14일.

30) 대세론은 일반적으로 정치 뉴스 수요를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시기 언론사들은 정치 뉴스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 박근혜 후보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론조사 자체가 정치현상에 대해 구성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는 한귀영, 「여론조사에 의해 점령된 정치」, 『황해 문화』, 2012년 봄, pp. 33-53 참조.

31) 안 후보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던 고원 교수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코어와 활동조

보 캠프는 안철수의, 안철수에 의한, 안철수를 위한 조직이며, 중요한 결정과 관련해서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의 정치적 자산 형성에 자신이 충분한 기여가 있으며, 그래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에서는 모든 결정이 안 후보의 판단과 의지에 종속되며, 심지어 이런 조직은 중요한 결정이 안 후보에 의해서 내려지길 기대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카리스마적 운동집단은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나르시시즘 순환이 나타난다. 집단적 나르시시즘은 한편으로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오류의 부인으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나 자신의 조직에 대해 부정적 정보의 원인을 외부로 투사하는 태도이다. 실제로 이런 경향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안 후보가 인하대 강연에서 정치개혁의 과제 중 하나로 의원정수 조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당시는 안철수 편에서 문 후보 편에 새정치에 부합한 민주당 개혁을 주문하고 문 후보 편에서는 그런 개혁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기해 달라는 대응이 공방처럼 오갔던 시기라서 안 후보가 어떤 구체안을 내놓는지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 모두가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앞에서 서술했듯이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함으로써 안 후보는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잃었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쳤다.³²⁾

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 안 후보 캠프는 그 제안의 역풍을 감지하고 여러모로 안 후보의 주장을 변명했지만, 변명들이 그 제안을 조정하고 철회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새정치공동선언>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단일화 협상을 재개한 후보 간 회동 후에 합의된 형태로 발표된 <새정치공동선언>에서도 의원정수 조정관련 문구 해석을 놓고 양측 대변인이 설전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마디로 안 후보 캠프는 의원정수 조정에 집착하고 그것을 고집했다. 대선에서 안 후보의 정치 실험이 실패한 것은 이런 취약한 토대에서 기인한 바가 큰데, 4.11 총선에서의 야권의 패배 이후 시민정치의 잔여 에너지가 안철수 중심으로 선회하며 그에 대한 기대/의구심이라는 선택지에 결박된 상황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그의 실패는 야권 전체의 실패를 함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직·추종집단 간의 관계가 다소 역전된 듯이 운영되었다. 먼저 안철수 캠프의 지도부는 구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한데다 구성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캠프 내외의 비판에서 빗겨나 관대한 대우를 받았고, 반면에 활동조직이나 추종집단은 엄격한 잣대를 요구받았다. 순도가 떨어지거나 생각이 좀 다르다 싶으면 구태정치라고 인식하는 습관이 강했다. 이런 태도는 능력 있는 사람의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안철수 정치실험은 왜 실패했나? 쿨하게 문제인 돕고 긴 호흡으로 쇄신해야」, 『프레시안』, 2012년 12월 5일)

32) 사실 이 문제는 안 후보의 운명과 관련해서뿐 아니라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문제였다. 만일 안 후보가 의원정수 조정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 단순다수제 선거법의 개정,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면, 그것은 안 후보의 운명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한국정치의 미래를 한결 밝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적어도 그 발언의 시점에서 만큼은 오랜 시간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의되어온 개혁안과 올바르게 접속되었다면, 그것을 단번에 국민적 합의로 상생시킬만한 담론적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5. 맺음말

2012년은 유기적 위기의 시기였다. 대중과 정당간의 연계에 심대한 균열이 형성되었고, 우리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는 움트고 있었지만, 어떤 정당도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그것은 유기적 위기였다. 이 위기의 전면성을 보여주는 대중적 표현이 “반한나라 비민주”라는 구도였다. 이런 위기에 대해 기존의 정당들은 한편에서는 지도자 정치로 대응하고 다른 한편은 연합 정치로 대응했다. 그리고 총선에서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 정치가 승리했다. 이어서 닥쳐온 대선에서는 대선의 본성상 카리스마적 지도자 정치가 전면부상했다. 그리고 이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은 승리했다.

이렇게 이행을 향한 탈피운동은 총선과 대선이 끝나자 여전히 이행의 예행연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7년체제의 익숙한 풍경이 되돌아왔다. 분단체제 해체 움직임은 MB 정부 시기에 이어 다시금 지연되었다. 진보정당운동은 형해화되었고, 사회운동은 초라한 형태로 남았다. 그 대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대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두 정당으로서는 유기적 위기의 시기를 ‘성공적으로’ 봉인한 것이다.

하지만 봉인은 그리 견고하지 않다. 대선 결과는 우리 사회가 좌우파로 정렬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새로운 유권자 정렬과 그것의 토대로 작동하는 시민정치가 정당체제의 수준에서는 새누리당/민주당의 불만족스런 양당제로 수렴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대칭적 상황으로 인해 기표/대의하는 것의 우위에 대한 기의/대의되는 것의 불만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현상’은 여전히 연소하고 있는 불길이다.³³⁾

33) 하지만 여기에 안철수 이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그 현상을 여전히 안철수라는 이름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 사이에서 방황하는 야권 지지자 집단에 대해 뚜렷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 평가위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2013>의 일부분항에 대한 대중의 답변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신당’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그 영향력이 막강할 것이다”라는 판단에 대해 문재인 투표자 가운데 50.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신당 창당에 대한 관찰자 관점에서의 높은 수치는 참여자 관점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안철수 전 후보가 신당을 만든다면 국민들에게 야권분열로 비춰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이 야권지지자 가운데 32.7%인데 반해 괜찮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37.9%로 팽팽한 견해 대립이 나타난다. 이런 설문은 안 후보가 취할 수 있는 행보에 대해 야권 지지자들의 생각이 복잡함을 짐작케 한다.

대선 시기 안 후보가 보인 여러 행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야권 지지자들이 보인 복잡한 심경의 원인의 편린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후보직을 사퇴하며 백의종군을 선언한 안철수 전 후보는 어느 정도 열심히 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재인 투표자의 30.3%만이 그렇다고 답하며, 안철수 지지자 집단조차 34.8%만이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들이 대다수인 것이다.

또 “안철수 전 후보는 아름다운 대선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과오를 고백한 후에 정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재인 투표자의 50.1%가 찬성하며, 안철수 지지자들도 51.2%가 찬성했다. 야권 지지자들이 분명하게 안 후보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질문은 하위 문항으로 “11월 14에서 18일까지 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다 중단한 것,” “사퇴 이후 안철수 전 후보가 문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 방식,” “안 후보가 대선 투표를 마치고 같은 날 미국으로 출국한 것” 등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물었는데, 이런 문항에 대한 답변도 상위 문항과 마찬가지로 5-60%대의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대선 후보 사퇴 후 안철수 전 후보가 외부와 접촉을 끊고 2주간 잠

그리고 이 모든 것 밑에는 분단체제의 동요와 발전주의의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전자의 경우, 동요의 진폭은 커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동향에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20년간의 교착국면의 문턱을 넘겠다는 의지가 어른거리고 있다. 분단체제 안정기에 비하면 분단체제 동요기는 더 평화적인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가상적인 긴장을 의도적으로 동원하던 분단체제 안정기보다 더 높은 수위의 불안을 항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저성장으로 인해 발전주의의 약속은 이제 유효성을 상실했다. 주거, 육아, 교육, 의료, 노년 부양 같은 재생산 영역 전반에서 박정희체제로부터 몇 걸음도 채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을 떠받쳐온 고도성장을 잃은 우리 사회에서 불안은 그야말로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 이 터질 듯 한 긴장 상태에서 우리 사회는 그 모든 문제적 패턴의 발생처였던 박정희체제의 상속자에게 문제 해결을 되 맡겼다. 하지만 상처 입힌 창만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신화의 세계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87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향한 움직임이 봉인을 찢고 재출현하는 것은 금세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것이 사회적 합의와 그것을 실현할 정치적 틀을 만들어내는데 이르지, 즉 체제 전환의 문턱을 넘을지는 예단할 수 없다.

적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투표자 가운데 70.8%가 공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안철수 지지자들조차 60.1%가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런 판단과 같은 선상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54.7%가 "문재인 후보의 대선 패배에 관하여 안철수 후보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대중의 답변은 대중들이 대선 시기 안철수 후보의 행태에 대해 예민하게 관찰했고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추상적 화법에서 벗어나 적절한 시점에서 제대로 해명하는 성찰적 자세가 안철수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에서 필요한 일임을 말해준다.

'복합적 유권자층'의 등장?

안철수 지지집단 분석

최 종 숙

1. 18대 대선과 안철수 현상, 안철수 정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국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을 꼽으라면 단연 '안철수 현상'일 것이다. 안철수는 비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여당후보의 대세론을 흔들었으며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후 사퇴하기 직전까지도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안철수 정치가 시작된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전보다 이후 '안철수 현상'은 더 파급력을 확대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물론 안철수 이전의 대부분의 제3후보들이 본선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던 것과는 달리 안철수의 지지율은 안철수가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¹⁾ 그 때문에 '안철수로 야권후보가 단일화 되었더라면 안철수가 대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²⁾

그러나 안철수는 2011년 박원순에게 후보직을 양보할 때처럼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명백히 승기를 잡았다고 하기 어려운 시기에 대선후보직을 사퇴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일 2011년 가을처럼 2012년 가을에도 안철수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라면 '국민의 호출'을 강조하던 안철수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안철수가 출마를 선언할 즈음만 하더라도 안철수의 지지도가 상승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안철수 현상의 파급력은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철수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오히려 안철수 현상의 파급력이 답보상태에 머물렀고 안철수가 후보직 사퇴를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장집은 안철수 정치가 지나치게 '정치쇄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민후보' '정치쇄신' 중심의 안철수 정치가 지나치게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폄훼하는 방식이었으며 안철수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쟁점이었던 '정치쇄신'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정작 중요한 경제민주화와 민

1) 안철수가 대선후보직을 사퇴할 당시 박근혜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내 지지율이 더 높았으며 박근혜, 문재인과의 3자대결에서는 문계인과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는 3위였다(리얼미터 조사기준).
2) 법륜스님(2013년 1월 2일)과 안철수캠프에 관여했던 김민전 교수(2013년 1월 4일)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생문제가 뒷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최장집, 2013). 손호철 역시 이번 대선의 핵심이 민생문제였는데 안철수가 정치불신에 기초한 정치개혁을 핵심공약으로 들고 나오에 따라 결과적으로 민생문제에 약한 여권에 유리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손호철, 2013). 물론 ‘정치쇄신’을 중심으로 한 안철수 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의영은 ‘정치쇄신’을 들고 나온 안철수 덕분에 대선 사상 처음으로 정치쇄신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안철수 정치의 한계는 시민정치에 부합하는 혁명적인 변화의 모습과 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김의영, 2013).

이러한 평가들이 모두 나름의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논의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민생문제’가 아닌 ‘정치쇄신’ 중심으로 이루어진 안철수 정치가 과연 안철수 현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안철수 정치가 시작된 근원은 결국 안철수 현상에 두어져 있다. 따라서 안철수 정치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안철수 현상을 실제 현실정치에서 제대로 발현해 냈는가에 두어야 한다. 말하자면 ‘정치쇄신’ 중심의 안철수 정치가 안철수 현상의 핵심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안철수라는 개인을 지지하는 30% 가량의 집단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안철수 현상의 본질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 안철수를 지지하는 집단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안철수 지지집단을 분석함으로써 안철수 현상을 ‘복합적 유권자층’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유권자층의 등장으로 파악한다. 안철수 지지층을 단순히 보수적 유권자로 규정하거나(장덕진, 2012), 반대로 새로운 진보적 유권자층의 등장으로 파악하는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조성대, 2013 ; 김정훈, 2013). 그러나 안철수 지지층은 통상적으로 진보주의로 분류되는 성향의 일부와 통상적으로 보수주의로 분류되는 성향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복합적 유권자’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물론 이념적 스펙트럼으로만 볼 때 이들은 매우 ‘이질적’ 집단인 것이 사실이다(류재성, 2013). 보수이념 집단과 진보이념 집단이 함께 안철수 지지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진보적 성향인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보수적 성향인 물질적 성공과 ‘신중한’ 대북정책 지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질적’ 집단이기도 하다.

만일 안철수가 자신의 지지집단의 복합적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성장과 복지 두 바퀴로 가는 혁신경제’ 정책에 더 집중했어야 했지만 주로 제3후보들이 손쉽게 기대는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의 활용’이라는 상투적인 전략에 머물렀다. 본 연구는 안철수 지지집단 분석을 통해 바로 이 점이 안철수 현상의 과급력을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안철수 정치의 성공을 막은 주된 요인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2. 안철수 현상을 다룬 기존논의 검토

1987년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2012년까지 우리나라는 총 여섯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그런데 이 여섯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은 언제나 두 개의 정당 가운데 하나에서 배출되었다. 정당명칭이 수시로 바뀌기는 했지만 영남지역에 기반을 둔 ‘노태우-김영삼계’ 정당과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김대중-노무현계’ 정당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정당들이 수시로 이합집산하고 당명을 변경하는 등 제도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기본적인 지역적 근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의 실적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정당체제는 유사양당제(pseudo two-party system)에 가까운 셈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두 개의 정당에서만 번갈아 배출되었지만 선거 경쟁은 늘 여러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들과의 다자간 대결의 형태를 띠었다. 양대정당 밖의 이른바 ‘제3의 후보들(the third candidates)’³⁾은 대부분 당선권과 거리가 멀었지만 때론 거대 양당후보들과 분열하거나 양당후보들 중 한쪽과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비정치인 안철수가 갑자기 부상한 것도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제3후보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제3후보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에 ‘저항투표(protest vote)’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의 제3후보현상을 연구해 온 강원택은 정주영, 이인재 등 제3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강원택, 2002; 2003). 그에 따르면 ‘저항투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순다수제가 지배적인 영국에서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 모두에 불만이 있는 유권자가 일시적으로 제3당인 자유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형태를 일컫던 말이다(Himmelweit et al. 1985 : 162 ; 강원택, 1998 : 197에서 재인용). 이때 제3의 후보에 대한 지지는 기존에 지지하던 정당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일시적으로만 선택되는 것이기에 제3의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라기보다 기존 정당에 대한 경고/항의의 의미가 일차적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면 안철수 현상의 등장은 제도화되지 못한 우리 정당들의 허약성, 그리고 그것과 맞물린 기성정치권에 대한 높은 불신의 반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안철수 현상이 등장했을 때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것을 기성정치권에 대한 높은 불신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정치인 안철수가 자신의 정치참여의 1차적 목표를 ‘정치권의 개혁’에 두고 있다고 천명한 것도 이러한 점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제3후보로 지지가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제3후보들이 높은 지지를 얻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2007년 17대 대선에서도 여러 명의 제3후보들이 등장했지만 이들의 득표는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당제를 유사양당제로 보고 양대정당 후보 이외의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들을 통칭 ‘제3의 후보’라 부르고자 한다.

양대정당 후보들에게 그리 위협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영국의 자유민주당처럼 기성양대정당에 대한 ‘저항투표’를 주기적으로 흡수하는 오랜 검증을 거친 제3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여러 명의 제3후보들이 난립하고 그 가운데 한 두 명의 유력 제3후보들만이 상당한 득표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제3후보가 기성정당들로부터 이탈한 대중의 지지를 견인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안철수의 경우 1년 이상 30%에 가깝게 지지도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일시적으로 흡수할 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 200여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제3후보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을 다루고 있는 로젠스톤과 베어, 라자루스의 논의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osenstone · Behr · Lazarus, 1996 : 126-139). 이들은 제3후보 현상이 나타나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기존 양대정당에 정당일체감을 갖지 않는 유권자가 증가하는 경향, 둘째는 기성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력적인 제3후보의 등장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요인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저항투표론’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치권이 유권자를 제3후보쪽으로 밀어내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요인은 제3후보 스스로가 지지층을 끌어당기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매력’이란 특징인이 지닌 특징을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느낄 때 형성된다는 점에서 관계적이다. 특히 정치인의 매력이란 어떤 독특한 특징을 지닌 정치인을 시민 대중들이 지지할만한 대상으로 혹은 자신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로 받아들일 때 형성된다. 따라서 안철수의 매력을 찾는 작업은 곧 안철수 지지를 통해 표출된 대중들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작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안철수의 어떤 매력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왜’ 안철수를 지지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철수 현상을 다루는 여러 연구자들은 안철수가 갖는 매력 혹은 안철수 지지로 표출된 대중적 열망을 동일선상에 놓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보수정치인에 대한 지지의 일종으로 평가하는 논의이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안철수를 ‘남자 박근혜’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장덕진(2012)을 들 수 있다. 장덕진은 18대 대선 유력 후보들의 지지집단 분석을 통해 야권 후보 지지자들의 가치관은 탈물질적인 반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박근혜 지지자와 마찬가지로 강한 보수적·물질주의적 성향을 공유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반면, 장덕진과는 달리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새로운 진보적 유권자층의 등장으로 파악하는 논의도 있다. 예컨대 조성대(2013 : 43)는 안철수에 대한 지지층이 2030대의 젊은 세대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주의에 대한 탈권위, 성장주의에 대한 탈물질, 권위주의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 등을 중시하는 ‘탈물질적 가치

관'을 갖는 세대의 등장과 연관시키고 있다. 김정훈(2013 : 145)도 조성대와 유사하게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적으로 보편적 복지·공정경쟁, 사회문화적으로 네트워크적 정체성 등을 갖는 진보적 유권자층의 등장과 연관시킨다.

안철수 지지층 분석을 통해 안철수 현상을 파악하는 위 두 입장은 상당히 대립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는 공통적인데 통상적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틀을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 하나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한편에서는 안철수 지지층을 일관된 보수층으로 규정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대북정책에서는 안보를 지향하는 것으로 자동규정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안철수 지지층을 일관된 진보층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경제민주화와 대북포용, 복지 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자동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일군의 연구자들은 안철수의 매력 혹은 안철수에 대한 열망을 단순히 보수적 가치 혹은 진보적 가치 가운데 하나에 대한 일관된 지지로 파악할 수 없음을 지적해 왔다. 안철수를 '착한 이명박'이라 규정한 바 있는 문강형준의 경우 이명박이 성장중심의 구시대 자본주의를 상징한다면 안철수는 창조와 나눔을 강조하는 휴머니즘적 자본주의를 상징한다고 말한다(문강형준, 2011 : 192). 다만 그는 '착한' 보다는 '이명박'에 방점을 두고 안철수(와 그의 지지층)와 거리를 두는 편이다. 그 외에도 '따뜻한 시장주의자'(정해구, 2011 : 59),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를 동시에 대변'(김운태, 2012 : 104), '착한 승자'(박권일, 2012 : 66), '공익과 이윤추구의 양립'(한귀영, 2012 : 169) 등 표현만 다를 뿐 모두 유사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놀라운 통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의가 여전히 인상적인 논평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철수 지지층이 어떠한 성향을 갖는다는 주장들은 많이 제기되었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경험연구는 드문 편이다. 그런 점에서 류재성(2013)의 논의는 경험적인 설문조사에 바탕하여 안철수 지지층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는 안철수 지지층 내부의 이념적 스펙트럼의 이질성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매우 이질적 집단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념적 보수와 이념적 진보가 왜 동일한 '인물'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이들 사이에 이념적 이질성을 넘어서는 어떤 '공유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3.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한상진사회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조사한 2012/2013년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토대로 안철수 지지집단이 주요 쟁점들에 대해 어떠한 가치지향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이념적 쟁점인 대북정책과 함께 18대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경제관련 쟁점들로 복지증진, 경제민주화

쟁점, 그리고 전통적인 진보/보수쟁점인 성공의 조건으로 개인의 노력과 구조적 조건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 물질주의/탈물질주의 논쟁을 고려한 ‘물질적 성공’에 대한 입장 등을 살펴본다.

‘대북정책’의 경우 ‘대북안보체제’와 ‘남북협력증진’ 두 항목을 양측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10점 척도로 측정된 질문을 활용한다. 복지확대에 대한 의견의 경우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복지증진’ 두 항목을 양측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10점 척도로 측정된 질문을 활용한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재벌특권규제’와 ‘재벌존경’ 두 항목을 양측으로 하여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5점 척도로 측정된 질문을 활용하였다. 인생의 성공조건으로 개인의 노력의 중요성은 점수가 올라갈수록 중요도가 상승하도록 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된 질문항목을 사용한다. 인생의 성공조건으로 구조적 조건의 중요성은 주요 구조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유한 집안출신’이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된 질문 문항을 활용한다. 끝으로 물질적 성공의 경우 ‘돈과 재산은 많을수록 좋다’와 ‘일정한 양까지만 갖는 것이 좋다’를 양측으로 하여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된 질문 문항을 활용한다.

한 가지 지적해 둘 점은 2012년과 2013년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대북정책과 복지확대와 관련된 두 질문 항목이다. 경제민주화와 물질적 성공 관련 질문 항목은 2012년 조사에만, 성공조건으로 개인의 노력과 구조적 조건의 중요성을 살펴본 질문 항목은 2013년 조사에서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2012년 조사결과와 2013년 조사결과는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었다. 다음 <표1>은 최종적으로 선별된 다섯 항목들을 통상적인 진보적/보수적 입장으로 구분해 본 것이다.

<표 1> 주요 쟁점에 대한 진보적/보수적 입장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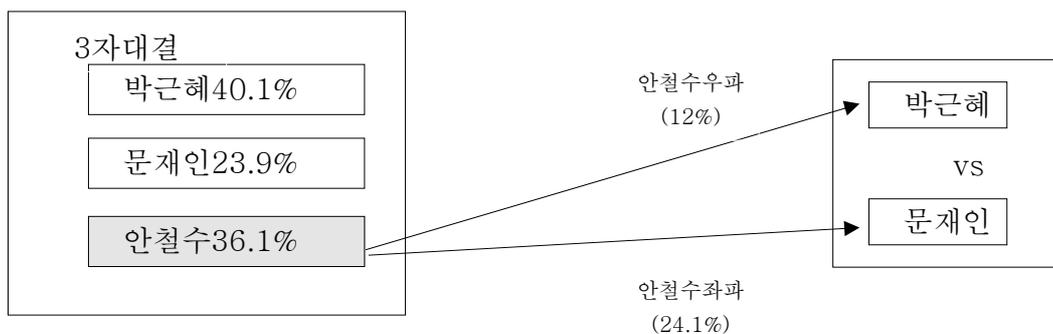
	진보적 입장	보수적 입장
①대북정책	대북협력증진	대북안보체제 강화
②경제성장 vs 복지증진	복지확대	경제성장
③경제민주화(2012년 자료만)	재벌규제	재벌존경
④개인노력/구조적 배경 통한 성공 가능성(2013년 자료만)	부유한 집안이 성공조건이다	개인노력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⑤물질적 성공(2012년 자료만)	돈/재산은 적정수준까지만	돈/재산은 많을수록

본 연구의 본론에서는 위의 다섯 쟁점에 대한 안철수 지지집단의 가치지향을 문재인 지지집단과 박근혜 지지집단의 가치지향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안철수 지지집단은 18대 대선국면에서 유력 후보들이었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인 가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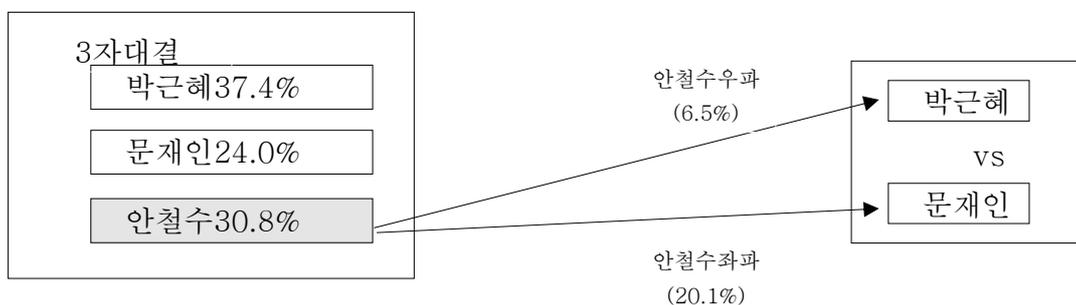
결구도에서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유력 대선후보들이 모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집단이다.

한편, 안철수 지지집단이 보수이념집단과 진보이념집단의 합으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류재성, 2013), 안철수 지지집단을 다시 편의상 ‘안철수우파’와 ‘안철수좌파’로 구분하여 이들이 실제로 이질적 집단인지 아니면 동질적 집단인지를 앞서의 다섯 쟁점항목에 대한 가치지향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3자대결구도에서 안철수를 지지했으나 안철수가 사퇴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안철수우파’, 문재인 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안철수좌파’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본 연구가 강조하는 ‘복합적 유권자’라는 개념과 충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익숙하게 사용하는 개념이기에 편의상 차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선거 이후에 이루어진 2013년 조사에서는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지지집단의 실제 투표를 조사할 수 있었지만 선거 이전 조사인 2012년 조사에는 실제 투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2년 조사의 경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가상의 3자대결과 박근혜, 문재인 가상의 양자대결을 교차하여 나오는 지지 이전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1>과 <그림2>는 2012년 조사와 2013년 조사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지지집단과 안철수우파와 안철수좌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2012년에 비해 실제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2013년 조사에서 안철수 우파의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안철수 지지집단의 구성과 분포(2012년 조사)



<그림 2> 안철수 지지집단의 구성과 분포(2013년 조사)

4. 안철수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먼저 안철수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표2>에서 2012년 3월 조사를 보면 안철수 지지집단은 여성보다는 남성, 2040세대,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집단, 중간소득집단, 지역적으로 서울과 호남거주자, 이념적 진보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남성보다 여성, 50대 이상세대, 고졸이하 학력 집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지역적으로 영남, 충청, 강원거주자, 이념적 보수의 특성을 보이는 박근혜 지지집단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지지집단과 안철수 지지집단은 2040세대, 고학력집단, 중간소득층, 호남거주자, 이념적 진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안철수 지지집단 비율이 좀더 많아서이기도 하겠으나 문재인 지지집단보다 안철수 지지집단이 박근혜 지지집단과 좀더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만을 놓고 볼 때 문재인 지지집단보다 안철수 지지집단이 범진보층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표 2> 18대 대선후보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2012년 3월 조사			2013년 3월 조사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전체		40.1	23.9	36.1	40.6	26.0	33.4
성	남	36.9	25.1	38.0	40.4	24.7	34.9
	여	43.2	22.7	34.1	40.8	27.3	31.9
연령	20대 이하	25.1	27.7	47.1	19.3	27.5	53.2
	30대	24.5	29.7	45.8	25.0	33.5	41.5
	40대	33.6	27.9	38.4	30.6	31.6	37.8
	50대	51.6	20.2	28.2	46.6	21.7	31.7
	60세 이상	66.5	13.1	20.4	77.2	16.3	6.4
학력	중졸 이하	63.0	14.1	23.0	79.7	13.3	7.0
	고졸	50.0	18.2	31.8	46.5	24.9	28.6
	대재 이상	30.9	28.4	40.7	29.5	29.3	41.2
소득	200만원미만	43.8	22.1	34.1	52.4	22.8	24.8
	200-400만원	36.4	24.8	38.9	33.3	28.3	38.4
	400만원이상	42.1	24.0	33.8	39.4	26.0	34.6
지역	서울	35.7	24.9	39.4	39.1	25.5	35.3
	인천/경기	39.2	25.4	35.4	36.5	27.3	36.2
	대전/충남/충북	43.0	23.4	33.6	48.4	17.9	33.7
	광주/전남/전북	10.4	30.2	59.4	14.6	41.7	43.8
	대구/경북	65.7	12.4	21.9	64.0	8.0	28.0
	부산/울산/경남	48.1	24.1	27.8	45.3	31.4	23.3
이념*	강원/제주	40.5	21.4	38.1	41.5	24.4	34.1
	보수	67.1	13.2	19.7	73.0	10.9	16.1
	중도	43.2	20.7	36.0	38.9	28.5	32.7
	진보	16.4	34.9	48.7	19.0	34.4	46.6

*이념은 1-9점으로 측정된 것을 1-3을 보수, 4-6을 중도, 7-9를 진보로 재구분한 것임

2013년 3월 조사의 경우 역시 2012년 3월 조사와 그리 큰 차이는 없다. 다만, 2012년 3월에는 호남 거주자의 60% 가량이 안철수를 지지했다면 2013년 조사에 서는 문재인, 안철수 지지가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5. 안철수 지지집단의 가치성향

1) 세 후보 지지집단 비교분석

그렇다면 안철수 지지집단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까? 그것을 위해 우선 안철수 지지집단과 문재인, 박근혜 지지집단을 비교분석해 보도록 한다. 다음 <표3>은 2012년 조사를 바탕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 주요 쟁점 항목에 대한 세 후보 지지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것이다.

<표 3> 세 후보 지지집단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가치성향(2012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F값	사후검정(각 두 집단간 평균값 차이에 대해)
대북안보체제 vs 남북협력증진 (1-10점)	4.74	6.37	5.97	41.96***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모든 두 집단간 평균값 차이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경제성장 vs 복지확대 (1-10점)	5.06	6.48	6.38	41.47***	· 박근혜-문재인, 박근혜-안철수 평균값 차이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문재인-안철수 평균값 차이 통계적으로 무의미
재벌존경 vs 재벌규제(1-5점)	3.68	4.05	4.06	16.54***	· 박근혜-문재인, 박근혜-안철수 평균값 차이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문재인-안철수 평균값 차이 통계적으로 무의미
물질적 성공(1-5점)	3.08	3.0	3.25	3.09*	· 문재인-안철수 평균값 차이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박근혜-문재인, 박근혜-안철수 평균값 차이 통계적으로 무의미

*점수가 높을수록 오른쪽 항목에 대한 지지가 높아짐.

물질적 성공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의 강도가 커짐

표를 보면 대북정책에 대해서 안철수 지지집단은 문재인 지지집단에 조금 더 가

값기는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지지집단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사후검증을 했을 때에도 안철수 지지집단은 박근혜 지지집단은 물론 문재인 지지집단과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안철수 지지집단은 경제성장보다는 복지확대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박근혜 지지집단보다 문재인 지지집단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벌규제의 경우 역시 문재인 지지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물질적 성공의 경우 안철수 지지집단은 박근혜 지지집단과 더 근접한 값을 보였다. 이 항목의 경우 안철수 지지집단과 문재인 지지집단의 평균값의 차이는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다음 <표4>는 2013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 방법을 이용, 주요쟁점 항목에 대한 세 후보 지지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것이다. 표를 보면 대북정책의 경우 2012년 3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화 경향이 진행되었음에 눈에 띄며 안철수 지지집단의 위치가 좀더 중간쪽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확대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재인 지지집단과 거의 비슷한 지지도 값을 보이고 있다.

<표 4> 18대 대선 세 후보 지지층의 보수/진보적 가치에 대한 의견(2013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F값	사후검정(각 두 집단간 평균값 차이에 대해)
대북안보체제 vs 남북협력증진 (0-10점)	3.92	6.11	5.38	55.22* **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모든 두 집단간 평균값 차이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경제성장 vs 복지확대 (0-10점)	4.78	6.32	6.26	41.01* **	· 박근혜-문재인, 박근혜-안철수 평균값 차이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문재인-안철수 평균값 차이 통계적으로 무의미
개인노력으로 성공가능성 (1-5점)	4.33	3.88	4.16	17.91* **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모든 두 집단간 평균값 차이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성공조건으로 부유한 집안 (1-5점)	4.09	4.46	4.53	27.69* **	· 박근혜-문재인, 박근혜-안철수 평균값 차이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문재인-안철수 평균값 차이 통계적으로 무의미

흥미로운 점은 안철수 지지집단은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박근혜 지지집단과 비슷하게 동의비율이 높으며 반대로 집안배경과 같은 구조적 요소가 성공의 조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지지집단과 비슷하게 동의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안철수 지지집단은 복지확대와 재벌규제의 경우 문재인 지지집단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대북정책이나 물질적 성공의 경우 박근혜 지지집단과 비슷하거나 문재인, 박근혜 지지집단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또한 성공의 조건으로 구조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 역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안철수 지지집단은 일관성을 가지고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거나 일관성을 가지고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기보다 특정 영역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특정 영역에서는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는 ‘복합성’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주요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안철수 지지집단과 문재인 지지집단, 안철수 지지집단과 박근혜 지지집단 사이에 주요쟁점에 대한 가치 지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이분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때 연령의 경우 2040세대와 50대 이상 세대의 지지가 서로 엇갈렸다는 점을 고려하여 2040세대와 50대이상의 2분위로 재구성하였으며 학력의 경우도 고졸이하와 고졸이상의 2분위변수로 재구성하였다. 지역의 경우 호남과 영남지역거주만을 포함시키되 영남은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을 구분하였다. 다음 <표5>는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안철수 지지집단의 주요쟁점에 대한 가치지향(자승비)

	2012년		2013년	
	모델1: 문재인 지지집단(0) vs 안철수 지지집단(1)	모델2: 박근혜 지지집단(0) vs 안철수 지지집단(1)	모델3: 문재인 지지집단(0) vs 안철수 지지집단(1)	모델4: 박근혜 지지집단(0) vs 안철수 지지집단(1)
성별(여성0/남성1)	1.011	1.714**	1.233	1.190
세대(2040세대1/50대이상0)	1.090	2.800***	1.244	3.442***
학력(고졸이하0/대재이상1)	.834	1.619*	1.433!	1.898**
소득(3분위연속변수)	1.004	.875	1.062	1.249!
호남거주	1.396	6.663***	.703	6.626***
영남TK거주	1.142	.264***	1.879	.551*
영남PK거주	.793	.596*	.468**	.675
주관적 이념(3분위연속변수)	.988	2.596***	1.041	2.357***
대북협력증진	.938!	1.081*	.900**	1.108**
복지확대	1.016	1.127***	1.009	1.155***
재벌규제	1.023	1.398***	-	-

개인노력으로 성공 가능성	-	-	1.384**	.837
성공조건으로 부유한 집안	-	-	1.211	1.609***
물질적 성공	1.157*	1.116	-	-
상수항	1.238	.004***	.138*	.002***
카이제곱	13.441	310.086***	46.238***	304.460***
모델적합도 -2Log우도	813.546	770.456	724.118	659.330
Cox&Snell R2	.022	.328	.079	.353
Nagelkerke R2	.029	.437	.106	.472

· !p<0.1, *p<0.05, **p<0.01, ***p<0.001

표를 보면 먼저 2012년 조사에서 안철수 지지집단과 문재인 지지집단을 비교한 결과(모델1)를 보면 이 두 집단이 대부분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위 모델은 모델적합도가 유의도 수준 0.05를 넘지 못했다.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유사 R2값도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말하자면 모델1은 두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는 통계적 모델로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안철수 지지집단과 문재인 지지집단이 세대, 이념, 지역 등 한국정치에서 핵심 균열로 받아들여지는 변수들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주요 쟁점 가운데 복지확대에 대한 의견, 재벌규제에 대한 의견 역시 두 집단이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과 물질적 성공에 대한 관점은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확률 0.1 (물질적 성공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안철수 지지집단은 문재인 지지집단에 비해 대북정책에서 다소 중도적이며 또한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2년 자료를 통해 안철수 지지집단과 박근혜 지지집단을 비교분석한 모델2를 보면 두 집단이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이념 등 대부분의 변수들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적합도나 유사 R2값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남성, 2040세대, 고학력집단, 호남거주자, 비영남 거주자, 이념적 진보인 사람들은 박근혜보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경향이 유의도 0.05 수준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인 복지확대, 재벌규제 항목의 경우에도 두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다. 또한 대북정책의 경우에도 남북평화증진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집단보다 안철수 지지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 다만 물질적 성공을 중시하는 경향은 이 두 집단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안철수 지지집단은 박근혜 지지집단만큼이나 물질적 성공을 중

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자료 역시 2012년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안철수-문재인 지지집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모델3) 기초 인구학적 변수들 가운데서 고학력자의 안철수 지지경향과 영남PK지역민의 문재인 지지경향이라는 새로운 모습이 유의도 0.1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 이념지향, 호남거주 등에서 안철수 지지집단은 문재인 지지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복지확대에 대한 의견에서도 이 두 집단은 서로 의견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공조건으로 부유한 집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안철수 지지집단은 문재인 지지집단에 비해 개인노력을 통한 성공 가능성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였고 대북정책에서도 두 집단은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안철수 지지집단과 박근혜 지지집단을 비교했을 때(모델4) 2040세대, 고학력집단, 호남거주자, 비영남 거주자, 이념적 진보인 사람들은 박근혜보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경향이 유의도 0.05 수준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더불어 복지확대, 대북정책에 대한 관점 역시 두 집단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 역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성공의 조건으로 부유한 집안을 중시할수록 박근혜보다 안철수를 지지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러나 안철수 지지집단은 박근혜 지지집단만큼이나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공 가능성을 중시했다. 이 항목에 있어서만큼은 이 두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안철수 지지집단이 문재인 지지집단과 마찬가지로 2040세대, 이념적 진보, 호남거주지역민,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등을 지지하며 성공조건으로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진보층'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안철수 지지집단은 박근혜 지지집단만큼이나 성공조건으로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고 물질적 성공을 지향하고 있으며 대북정책에서는 문재인 지지집단보다 신중한 성향을 보였다. 통상 일관된 진보층의 성향 리스트에서 다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안철수 지지집단 내부의 경우

그렇다면 안철수 지지층 내부집단들의 경우는 어떠할까? 이 절에서는 주요쟁점에 대한 안철수우파와 안철수좌파의 관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지층 내부의 이질성 정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표6>은 2012년 자료를 토대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대북정책, 복지확대, 재벌규제, 물질적 성공에 대한 안철수우파와 안철수좌파의 관점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것이며 <표7>은 2013년 자료를 토대로 대북정책, 복지확대, 성공의 조건에 대한 두 집단간 평균값 비교를 수행해 본 것이다.

<표 6> 안철수 지지층 내부 집단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가치성향(2012년)

	안철수우파	안철수좌파	F값
대북안보체제 vs 남북협력증진 (1-10점)	5.24	6.34	16.68***
경제성장 vs 복지확대(1-10점)	5.93	6.60	7.47*
재벌존경 vs 재벌규제(1-5점)	4.09	4.05	.14
물질적 성공(1-5점)	3.36	3.19	1.25

<표 7> 안철수 지지층 내부 집단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가치성향(2013년)

	안철수우파	안철수좌파	F값
대북안보체제 vs 남북협력증진 (0-10점)	4.87	5.65	3.72
경제성장 vs 복지확대(0-10점)	5.72	6.47	4.67*
개인노력으로 성공가능성 (1-5점)	4.12	4.15	.05
성공조건으로 부유한 집안 (1-5점)	4.58	4.51	.497

<표6>을 보면 안철수우파와 안철수좌파는 재벌규제, 물질적 성공에서는 동질적 성향을 보였으며 남북협력증진, 복지확대 항목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표7>을 보면 안철수우파와 안철수좌파는 대북정책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사라졌으며 복지확대 항목에서만 집단간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동질성을 보였다.

그렇다면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집단간 차이가 유지될까? 다음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안철수우파와 안철수좌파 집단간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이분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표8>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8> 안철수 지지층 내부집단 비교(자승비)

	안철수우파(0) vs 안철수좌파(1)	
	2012년	2013년
성별(여성0/남성1)	1.565	1.164
세대(2040세대1/50대이상0)	.774	2.496*
학력(고졸이하0/대재이상1)	1.165	1.012

소득(3분위연속변수)	.982	1.457
호남거주	1.743	4.633*
영남TK거주	.785	.324*
영남PK거주	.766	.331*
주관적 이념(3분위연속변수)	2.012***	2.600***
대북협력증진	1.142*	1.062
복지확대	1.052	1.085
재벌규제	.964	-
개인노력으로 성공가능성	-	1.027
성공조건으로 부유한 집안	-	.814
물질적 성공	.965	-
상수항	.155*	.082
카이제곱	44.321***	49.109***
모델적합도 -2Log우도	426.236	255.148
Cox&Snell R2	.113	.165
Nagelkerke R2	.157	.245

표를 보면 2012년 자료의 분석결과에서 안철수우파와 안철수좌파는 주관적 이념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였고(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지지) 복지확대나 재벌규제, 물질적 성공 등 나머지 항목에서는 집단간 성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순 비교분석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복지확대 항목이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허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자료 분석결과에서 안철수우파와 안철수좌파는 세대, 지역, 이념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인 주요 쟁점들에서는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2년에 차이를 보였던 대북정책마저도 2013년에 오면 내부집단간 차이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3년 자료의 분석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13년 자료는 실제 투표를 중심으로 안철수우파와 안철수좌파를 구분한 경우다. 이들은 안철수가 사퇴하기 전에는 기존의 정치균열들에도 불구하고 ‘복합적 성향’에 따라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안철수가 사퇴한 이후 실제 선거에서는 다시 기존 균열로 복귀하여 투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논의한 안철수 지지집단의 성향을 살펴보면 복지확대, 경제민주화에서는 통상적인 진보층에 가깝지만 대북정책에서는 중도, 물질적 성공 지향에서는 통상적 보수층에 가까우며 성공의 조건으로 개인의 노력과 구조적 요인 모두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진보과 보수적 성향을 모두 공유한다. 안철수 지지집단을 박근혜, 문재인 지지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리고 안철수 지지집단 내부의 안철수좌파와 안철수우파를 비교했을 때에도 이러한 성향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안철수좌파와 안철수우파는 이념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로 갈리지만 앞서 살펴본 주요 쟁점 항목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9>는 주요 쟁점에 대한 안철수 지지집단의 입장을 정리해 본 것이다.

<표 9> 주요 쟁점에 대한 진보적/보수적 입장과 안철수 지지집단의 입장

	진보적 입장	보수적 입장
①대북정책	대북협력증진	중도/신중 대북안보체제 강화
②경제성장 vs 복지증진	복지확대	경제성장
③경제민주화	재벌규제	재벌존경
④개인노력/구조적 배경통한 성공 가능성	부유한 집안이 성공조건이다	개인노력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⑤물질적 성공	돈/재산은 적정수준까지만	돈/재산은 많을수록

*표에서 굵은 글씨가 안철수 지지집단의 입장임.

대북정책의 경우 안철수 지지집단은 중간의 ‘중도/신중’ 입장. 양쪽모두와 구분되는 중간적 입장임.

안철수 지지집단이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동시에’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 안철수 지지집단이 완전히 보수적이지 않으며 진보주의자들이 볼 때에도 안철수 지지집단이 완전히 진보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념적 진보와 이념적 보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갈라설 수 있는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면 그것은 ‘보수-진보’라는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복합적’ 유권자층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로 그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안철수 그 스스로 자신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며 ‘상식파’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은 곧 안철수 지지집단에 투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안철수가 대중들에게 어필했던 매력이라는 것이 ‘경제성장’과 ‘복지’의 결합이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물질적 욕망의 추구’와 같이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의 공존과 같은 것들이었다면 안철수 정치는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이러한 대중들의 열망을 발현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 안철수는 출

마지막으로 ‘성장과 복지 두 바퀴로 가는 혁신경제’라는 정책을 제기하면서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대중적 열망을 끌어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곧 ‘혁신경제’ 프레임은 무대에서 사라졌고 ‘정치쇄신’ 프레임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후의 과정은 안철수 정치를 분석한 연구자들이 지적한 대로 흘러갔다.

물론 안철수 현상의 핵심지점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안철수 정치는 현재진행형이다.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가 안철수 그 자신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의 재가동 역시 안철수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안철수 정치가 승부를 봐야 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한국 정치의 한 단계 도약도 이 지점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을 런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강원택. 1998. “정치적 기대수준과 저항투표: 단순다수제 하에서 제3당에 대한 지지의 논리.” 『한국정치학회보』 32(2). pp. 191-210.
- 강원택. 2002. “투표 불참과 정치적 불만족: 기권과 제3당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2). pp. 153-174.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 김윤태. 2012. “안철수 현상은 한국 정치 양날의 칼이다.” 『안철수를 생각한다』. 알랩. pp. 97-107.
- 김의영. 2013. “그래도 ‘시민정치’다.” 《한국일보》 1월 7일자.
- 김정훈. 2013. “18대 대선의 의미와 진보의 재구성: 과국적 균형을 넘어서.” 『경제와사회』 봄호. pp. 121-154.
- 류재성. 2013. “안철수 지지자의 선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학술대회 <2012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정치의 특성과 변화> 발표문.
- 문강형준. 2011. “안철수, 혹은 탈정치 시대의 판타지.” 『문화과학』 68호. pp. 189-199.
- 박권일. 2012. “세대와 정당정치: 정치적 세대동맹의 역사와 의미.” 『황해문화』 봄호. pp. 54-72.
- 손호철. 2013. “안철수를 다시 생각한다.” 《경향신문》 1월 8일자.
- 장덕진. 2012. “안철수, 그 허락된 욕망.” 《한국일보》 5월 14일자.
- 정해구. 2011. “안철수 현상, 시민정치의 부상, 정당정치 재편의 전망.” 『내일을여는역사』 45호. pp. 50-65.
- 조성대. 2013. “민주화 이후 제3후보 현상과 선거연합.”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 한국선거학회 공동토론회』 발표문. pp. 27-55.
- 최장집. 2013. “신년 기획 - 2013년을 말한다” 인터뷰 기사. 《경향신문》 1월 2일자.
- 한귀영. 2012. “안철수의 착한 리더십은 제3후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안철수를 생각한다』. 알랩. pp. 159-171.
- Rosenstone, Steven J., Roy L. Behr and Edward H. Lazarus. 1996. *Third Parties in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토론요지]
중민 이론의 재조명
: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

김 남 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나는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대체로 통계는 소속감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정체성을 지닌 어떤 무형의 집단이 실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3개 또는 4개의 범주로 묶고 정치의 흐름과 정권의 향방을 알려줄 절대적 기준으로 독립변수화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작업을 거친 통계는 더 신뢰할 수 있다. 첫째, 연구의 시작이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story)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 이야기들의 차이를 통계(statistics)를 통해 비교하고, 그렇게 드러난 차이의 의미를 이론적 모델링(formal modeling)을 통해 검증했을 경우이다.
- 이론적 모델링은 통계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목표와 대안의 제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만약 시민의식의 몇 가지 층위를 독립변수로 놓고 민주당의 실패나 한국정치의 향방을 종속변수로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 정치는 단순히 실재하지 않거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무형의 어떤 집단을 상정하고 그들의 이해를 사후적으로 추수하는 선에서 그친다. 이런 연구는 우리 사회의 기존 세력 구조를 정당화 하거나 뒷받침하는 미시적이고 사소한 이론들을 만들어 낼 뿐이고 구조나 흐름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담론을 실종시킨다.
-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정치의 사법화의 진행에 따라 시민의 역할은 왜소해지고 정치가의 역할을 법률가가 대신하며 정치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일들이 법정에서 사후적으로 판결을 통해 보상되어 진다. 이제 가장 창의적이어야 할 정치조차도 안일하고 기계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은 정치공동체의 앞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평가받는 형성의 정치(formative politics)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 무게를 감당해 내야 한다. 시민들의 과편화된 이해를 반영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공동선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학자의 연구도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통계를 통해 비교한 다음 대안을 제시하고 이론적 모델링의 검증을 통해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한다.

- 대의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선출된 대표가 시민들의 통제로부터 멀어져 권력화 될 때 포퓰리즘이 등장한다. 포퓰리즘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 내가 당신들의 권력을 기득권자들로부터 빼앗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둘째, 그 방법이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한 감정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가 명목적이 되고 꺾질만 남게 되었을 때 포퓰리스트적 지도자가 등장하고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은 이러한 도전을 무서워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선동적이라는 부정적 낙인을 찍고자 애쓴다.
- 제도화는 안정성을 가져오지만 관념화되고 탈색될 때 적실성을 결여하게 된다. 따라서 포퓰리스트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현대사의 큰 변화들은 대부분 제도권 밖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 4월 혁명, 61년과 79년의 군사 쿠데타, 80년 광주항쟁, 87년 노동운동, 2002년의 인터넷혁명과 2004년 총선의 낙선운동 등은 제도 밖의 도전에 의해 제도권이 긴장하고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조직된 기득권 세력이 시민들로부터 멀어졌을 때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포퓰리즘적 저항은 한국정치에 축복이자 한계이다. 이런 맥락에서 안철수의 등장 역시 기존 제도권에 긴장과 도전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에 축복이고 포퓰리즘적 저항의 주체가 제도화의 주체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한계이다. 나는 안철수를 단순히 87년 이후 시작된 제 3후보론 보다는 대의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갖는 항상적인 긴장의 맥락에서 보고 싶다. 그가 포퓰리스트적 저항이 걷는 일반화된 쇠퇴의 길을 갈지, 아니면 포퓰리스트적 저항과 조직을 결합시켜 한국사회에 변화를 추동하고 그 변화를 제도화시킬 수 있을지가 그의 성공의 관건이다. 노무현이 뛰어났던 점은 제도 또는 조직과 포퓰리즘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는 민주당이라는 조직을 바탕으로 대중을 효과적으로 선동한 발칸형 대통령이었다. 역사는 때로 구습과 구악을 압축적으로 파괴해 줄 발칸형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그는 목표 집단이 분화할 때 방법에 초점 맞춰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등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고 오래 남을 수 있는 구호를 외쳤다. 그렇지만 그도 자신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줄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 87년 체제이후 근간이 되던 분단체제가 동요하고 발전주의가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의 정치체제가 분화하는 다원적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체되어 있는 것은 여전히 분단체제의 균열 구조에 바탕을 둔 정당체제의 동결(frozen)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분단과 발전주의의 규정력을 무시하기 힘들다. 이 구도 안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대의민주주의의 쇠퇴와 포퓰리즘적 저항의 긴장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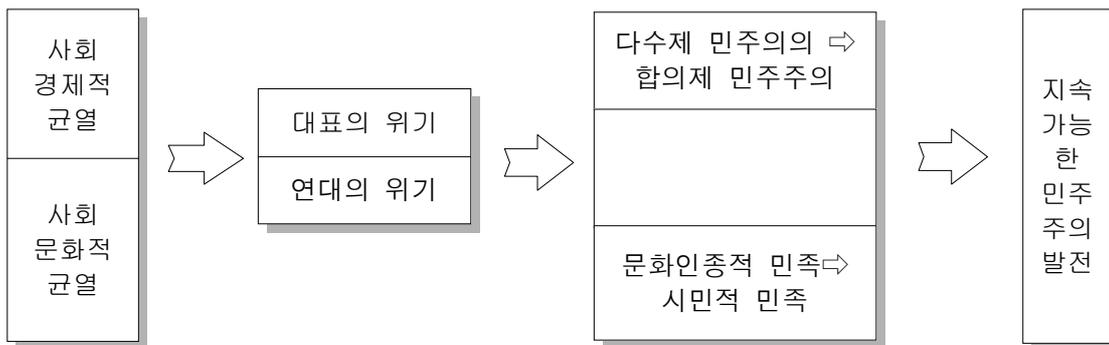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큰 도전은 시민이 어떻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제하느냐와 시민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자의 대안은 참여민주주의이고, 후자의 해법은 국가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지도자와 정당은 자신들이 파악한 시민들의 의식의 흐름과 이러한 대안 사이의 길을 토론하고 검증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정당은 참여민주주의의 수혜자이자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복지 또는 최적의 국가개입 범위에 대한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 궁극적으로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정치체제는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행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제 민주주의는 정치체도가 지녀야 할 두 가지 긴장, 즉 공정한 대표(fair representation)와 통치가능성(governability) 가운데 너무 통치가능성에 치우쳐 있는 문제가 있고 사회적 형평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에 치우쳐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를 대표하지 못하는 기존의 정치엘리트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안철수가 담고 있다면 안철수의 등장은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 대표가 말한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격이라는 발언에 공감하기 힘들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시민들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 그들만의 권력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일반시민이 권력집단에 느끼는 거리감은 한 정치공동체를 유지해 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의 부재를 의미한다. 우리는 사회갈등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수결의 원칙에 합의한다.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에는 두 가지 규범적 측면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 내가 이번 결정에서는 이 사회의 소수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다. 둘째, 내가 지금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양보할지라도 다수가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이라는 다수에 대한 믿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다수가 요구하는 희생에 소수가 기꺼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에 대한 신뢰, 즉 다수와 소수 사이의 사회적 연대감이 충분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그것이 이미 성립된 제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에 기꺼이 승복할만한 아무런 신뢰 없이 기계적인 포기를 강요당하는 사회를 우리가 바람직한 정치공동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사회적 연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 조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시민에게 다가가고 포플리즘을 갖고 있는 안철수가 조직으로 다가가는 것이 지금의 모범답안일 것이다. 그 후 경쟁하고 연합하는 것이 더 나은 정치를 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조직에 시민을 더하는 민주

당의 과제는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포퓰리즘에 조직을 더하는 것은 모든 카리스마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화 되고 조직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에서 더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 안철수가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조직하고 최장집, 장하성을 영입하는 것이 주목 받는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결정들은 민주당이 민주정책연구원을 통해서 해야 할 일, 즉 연구원의 원장을 삼고초려를 통해 최장집 같은 사람을 영입하여 시민의 주목을 끌고 정책을 통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 필요하다.
- 역사 속에서 모든 진보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와 비교하면 반동일 뿐이다. 각자 자기가 맡은 시대적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것, 그렇게 본다면 노무현을 비난하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발칸형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상징성으로 더 철저하게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힌 구시대의 나쁜 관습과 관행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비난해야 한다. 486세대 역시 이미 그 세대가 해야 하는 역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의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사회 구조개혁에 대한 정체제도적 설명>



*출처: Nam-Kook Kim (2013), "Identity Crisis and Social Integration under Globalization in Korea," *Korea Observer*, Vol. 44, No. 1.

[토론요지]

탈이념 민생정당의 정강정책과 지지층 간 연결성

김 재 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제17대 국회의원)

▣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 정강정책에 대한

복잡성 과학이론(complexity science)의 적용

- 안철수 현상은 정당의 사회적 지지기반과 유사하며 그것을 안철수 후보가 모두 흡수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의 확장성을 갖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음.
-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의원은 별개라는 시각을 주목할 필요.
- 안철수 현상을 진보와 보수의 혼재라거나, 또는 정책들을 사안별로 진보노선과 보수노선으로 분리 평가하는 것은 구시대적 단순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평가됨.
안철수 의원 자신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로 한다고 설명했으며 언론 등이 이를 인용하는 것이 그런 예임.
- 복잡다단화 해 가는 현대사회의 난제들을 낚은 이념인 진보나 보수, 또는 중도 노선에 바탕한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무리임.
- 특히 2000년대 들어 정책학에서 발전되고 있는 복잡성 과학이론(complexity science)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
자기조직화(selg-organization), 복잡적응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 창발(emergence) 개념을 중심으로 구시대적인 이념 패러다임과 차별되는 사고가 새로운 정책학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민주당의 이념 논쟁과 정강정책, 그리고 안철수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진보-보수 논쟁에서 벗어나 복잡성 과학이론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 적용해야 함.

▣ 민주당의 18대 대선패배 원인들

-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세대, 지역, 직능, 소득계층 별 유권자층이 대거 이탈.
 - ⇒ 유권자의식조사에 기반한 사전 준비와 전략기획이 부재.
 - ⇒ 계파정치 때문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선거캠페인의 구심점이 확립되지 못했으며, 후보의 리더십도 취약했고, 선거대책위원회의 컨트롤 타워도 부재.

- ⇒ 평상시 정당활동이 취약해 선거에 임박한 캠페인의 효과 무위.
-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당활동을 뒷받침할 싱크탱크로서 민주정책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이 취약.

● 50대 이상 세대 <민주당 18대 대선평가보고서, 133쪽>

- 1997년 대선 때 50대 투표 : 김대중 44.7%, 이회창 37.0%
- 2002년 대선 때 60대 이상의 투표 : 노무현 47.6%, 이회창 44.6%
-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50대 이상 투표에서 모두 뒤짐.

● 수도권 및 충청권 유권자층

- 1997,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과 충청북에서 모두 승리.
- 18대 대선 :
 - 서울- 문재인 51.4%, 박근혜 48.2%
 - 경기- 문재인 49.2%, 박근혜 50.4%
 - 인천- 문재인 48.0%, 박근혜 51.6%

● 자영업자 <서복경, “정당지지의 사회적 기초 : 15-18대 대선 민주당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2013년 2월27일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한국선거학회 공동토론회 발표논문.>

- 1997년 대선 : 김대중 46.9%, 이회창 24.7%
- 2002년 대선 : 노무현 47.0%, 이회창 37.7%
- 2012년 대선 : 문재인 37.5%, 박근혜 56.0%

● 서민층 <서복경, 위의 논문>

- 1997년 대선, 월소득 150만원 미만 : 김대중 40.2%, 이회창 31.1%
- 1997년 대선, 월소득 150-250만원 : 김대중 34.6%, 이회창 34%
- 2002년 대선, 월소득 150만원 미만 : 노무현 49.0%, 이회창 34.3%
- 2002년 대선, 월소득 150-299만원 : 노무현 48.4%, 이회창 35.3%
- 2012년 대선, 249만원 미만 : 문재인 37.3%, 박근혜 52.4%

⇒ 계층 역방향 투표

▣ 선거에 미친 영향력 변수로서 정당과 후보 <민주당 18대 대선평가보고서>

- 민주당 대선평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 발견점은 18대 대선에서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후보요인이 정당요인보다 압도적 우위로 나타남.

- 유권자들은 민주당보다는 문재인 후보를 보고 투표했으며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보다는 박근혜 후보를 보고 투표한 경향이 확인됨. 그러나 민주당 보다는 문재인 후보를 보고 투표했다는 강도가 박근혜 후보의 경우보다 훨씬 높음.
- 유권자들은 능력 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비해 국정운영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 문 후보는 박 후보에 비해 상황대처 능력이나 TV토론 실력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으나 당 장악력과 캠프운용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
- 정당 요인의 경우, 새누리당은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폭넓은 호감을 이끌어 내고 있었으나 민주당은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인색한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당이 지지층에게 만족감을 안겨주지 못하고 있다는 징표임.

▣ 국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생정당 요구

- 대선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정치적 교훈으로 삼기 위한 대선 평가위원회 활동 결과, 민주당 내 주요인사에 대한 설문조사와 일반 국민의식조사에 최우선적으로 나타난 주문은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음.

<민생정당 관련 국민의식조사와 민주당 내 설문조사 결과>

문항	국민의식조사			민주당 설문조사		
	찬성 (%)	반대 (%)	100점 만점	찬성 (%)	반대 (%)	100점 만점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복지 등의 의제를 선점했으나 이를 생활현장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가꾸는 데 새누리당보다 못해 선거에서 졌다.	45.9	25.3	55.0	83.1	5.5	75.6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건 민주당이라는 확신을 지역주민에게 주지 못해 선거에서 졌다.	53.5	18.0	58.5	73.7	11.3	70.3
민주당은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73.6	6.7	73.0	96.4	0.8	91.4

- 선거상황에서도 지역밀착 안해
 - 이러한 일상적인 지역 활동을 등한시 해온 민주당은 선거 때만 움직인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평가였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상황인데도 지역에서 성실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음.

“새누리당은 철저히 지역주민의 삶에 결합했지만 민주당은 지역주민의 삶에 결합하지 못했다.”(인천, 시민단체 대표)

“지역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역공약으로 인해 지역유권자를 설득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인천, 민주당 지역위 사무국장)

“민주당은 지역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전북, 시민단체 대표)

“민주당이 지역을 소홀히 했다. 문재인이 거제 사람인 줄도 몰랐다.”(경남, 언론인)

“바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시의원 구의원인데, 시의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유세차의 마이크도 잡지 않았다.”(대전충남세종시, 시민)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조직적 활동이 부족했다.”(인천, 시민단체 간부)

“시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고 서울의 중앙선대위에 상근하는 이상한 선거였다.”(중앙선대위 팀장급 증언)

-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역 구에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무르는 등 선거에 미온적이어서 졌다”는 설문에 66.2%가 찬성하였고, 100점 만점에 65.8점으로 문제점이 지적됨.
- 민주당의 평상시의 지역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이거니와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캠페인에서도 민주당이 지역 활동을 등한시하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임.

● 지역적 가치 인식에서 보수정당보다 못해

-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역 활동이 새누리당에 비해 왕성하지 못하고, 따라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증명되었음.
- 향후 민주당이 지역적 가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정당 활동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그런 지역활동이 바로 생활정치이며 선거에 임박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음.
- 민주당은 평상시의 정당 활동으로 평가 받고 그것을 축적해 갈 수 있어야 함. 이것이 지역간담회에 참가했던 지역민들의 목소리이자 국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

▣ 민주당 강령의 변화

● 1990년대 새천년민주당 :

- 중도개혁주의 노선으로 이념적 대립구도 탈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지향
- 민주주의 정통세력으로 자리매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국민화합의 정치
- 시장경제와 함께 생산적 복지, 경제정책의 균형화 추구
- 지역과 사회계층적 분열을 넘어서 국민통합 추구

-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기반 확립
- 노·장·청 세대간 조화와 균형

- 2003년 열린우리당 :
 - 중도실용주의 노선으로 개혁정치의 대중화를 지향
 - 정통 민주개혁세력을 표방, 새롭고 깨끗한 정치 실현
 -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무한경쟁 시장을 보정,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나라 구현
 - 한반도 평화통일 지향

- 2008년 대통합민주신당 :
 - 기존의 강령에 교육, 문화, 환경보전을 새로이 추가

- 2009년 통합민주당 1기 (정세균 대표) :
 - 기존의 강령에 복지국가, 민생제일주의 추가

- 2010년 통합민주당 2기 (손학규 대표) :
 - ‘민주 자유 복지 평화 환경’으로 기존의 강령에 자유를 추가.

- 2012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 경제민주화,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 노동의 가치 존중
 -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청소년 중시 정책, 고령층 존중
 - 문화 예술의 나라 지향
 - 안전한 농림수산물정책 확립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 언론과 뉴미디어의 공공성 보장
 - 검경,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민주진보적 강령에 추가할 내용**
 -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반영해야 :

 - 민생, 복지, 경제민주화
 - 디지털, IT, 융합과학기술
 - 문화예술의 중심국가(한류)
 -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범죄 없는 ‘인간안보’ 확립
 - 지역주의 타파와 국가균형발전

▣ 한국정치에서 정치적 세대의 구획과 맞춤형 기본정책

● 세대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 이번 대선은 인구구성비에서 5060세대가 2030을 넘어선 뒤 처음 치르는 전국 선거였음.
 - 2002년 제16대 대선 : 2030세대 48.3%, 5060세대 29.3%
 - 2007년 제17대 대선 : 2030세대 42.3%, 5060세대 33.5%
 - 2012년 제18대 대선 : 2030세대 36.4%, 5060세대 40.0%

⇒ 그런데도 이같은 유권자 지형변화를 사전에 간파하지 못하고 세대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함.

⇒ 세대별 인구구성비는 간단한 사회조사로 알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세대별 정치의식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임.

⇒ 50대 이상이 되면 보수화한다는 이른바 ‘연령효과’란 정치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세대효과’에 비해 투표결정 요인으로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정치적 세대의 구획

-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세대 구획을 위해서는 정치사회화와 사회심리학 이론에서 외부세계의 변화와 충격에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며 그것이 의식과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는 나이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이른바 ‘형성의 시기(formative period)’에 어떤 정치사회적 사건에 노출됐는지가 기준 됨.
- 한국의 정치적 세대 구분은 의식 형성의 시기에 경험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획지을 수 있음.

● 첫째, 국가주의-원로 세대

- 의식 형성시기에 8.15해방과 6.25전쟁을 경험한 ‘국가주의-원로 세대’로 이들은 국가주의와 안보의식이 강하며 한국 사회에서 보수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냄. 이 세대는 대체로 주요 정당의 강령에 ‘대한민국’과 같은 용어가 강조되기를 원함. 이들이 주로 경험한 정당은 한민당-민국당-민주당과 자유당, 그리고 한독당이며 정치지도자는 김구 이승만 신익희 조병옥 장택상 장면 등으로 독립운동 세대.

● 둘째, 자유민주 세대

- 4.19혁명과 5.16쿠데타, 6.3 대일 굴욕외교반대운동, 유신선포를 경험한 ‘자유민주운동 세대’로 이들은 전통적 자유민주주의를 신봉. 이 세대라면 ‘자유’와 함께 산업화를 중시. 이들이 바라 본 정당은 공화당과 민정당, 그리고 민자당이며 그 주도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군사쿠데타 세대임.

● 셋째, 시민항쟁과 민주주의 세대

● 중민의 발아

- 80년 광주시민항쟁과 정치군인 집단의 내란을 겪은 ‘민중운동 세대’로 군사권 위주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저항의식을 보이며 사회적 약자지만 다수 구성원인 노동자와 농민층에 눈을 돌려 경제적 분배와 복지정책을 중시. 이들은 1987년 6월 선배세대인 이른바 ‘넥타이부대’와 함께 시민항쟁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도 갖고 있음. 이들은 개혁과 함께 민주주의적 지향을 강조. 여기서 민중과 중산층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중민이 발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19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정치적 자유화를 누리며 등장했고 그 주역은 민주화투쟁 세대로 김영삼 김대중. 여기에 김종필이 참여해 이른바 3김정치 시대가 전개됨.

● 넷째, 인터넷 신진세대

- 인터넷언론의 주역이고 2002년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 응원을 경험한 ‘신진세대’로 이들은 정치적 관심보다도 정보, 문화, 스포츠, 일상생활에 비중을 두며 개인주의가 강한 것이 특성. 이들의 개인주의는 국가나 정치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삼는 전통적 자유주의와는 다르며, 시민사회 속에서의 자율적 행위자임을 중시.

이런 정치적 세대 구획을 연령적 세대 사이의 분열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임. 연령적 세대가 다르더라도 위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사건과 현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세대는 달라짐. 새로운 정치의 기반은 연령적 구획이 아니라 바로 정치의식과 철학이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이른바 ‘세대 효과’라고 해야 할 것임.

[토론요지]

현실정치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견해

백기철

(한겨레 논설위원)

1. 안철수 신당 문제

- 안철수 현상의 미래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안철수 신당을 통해 구현될 것임.
- 정치권에선 안철수 의원에 대해 대체로 유통기한이 종전보다는 좀더 길어진 제3 주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선 기간 안철수에 기대를 걸었던 오피니언리더들 중 상당수는 그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철회한 것으로 보임. 의원 정수 축소 문제 등에서 드러난 빈약한 콘텐츠, 대선 레이스 하차 이후 보인 정치적 퍼포먼스의 미숙함, 노원병 출마 이후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반 정치의 추상적 슬로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이 그 이유로 보임. 정치적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안 의원에게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정치권과 오피니언리더들의 회의적 시각과 달리 가상의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보다도 정당 지지도에서 앞서는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직도 안철수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경제에선 진보, 대북정책은 중도, 개인적 성공에선 보수로 요약되는 복합적 유권자층이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라는 분석은 유의미한 것으로 보임. 보수 진보 기존 프레임으로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유권자층이 안철수 지지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임. 대중과 정당간의 연계에 심대한 균열이 생긴 '유기적 위기'란 규정도 같은 맥락임. 안철수 신당이 정치지형에서 아직도 유의미한 이유는 대선을 거치며 한풀 꺾이긴했지만 아직도 정치의 새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
- 문제는 새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욕구를 안철수 세력이 현실정치에서 구현할 수 있느냐임. 유권자의 새 흐름을 대변하는 것과 그 흐름을 실제로 구현해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 정치쇄신을 촉구하는 것과 정치쇄신을 관철하는 것은 전혀 다름. 불행하게도 안철수는 편지정치나 토크콘서트 등에서 보듯 정치 스타일이나 정치 행태에선 다른 면모가 있지만 구체적인 콘텐츠와 정치세력, 대중조직 등은 갖추지 못함. 1인 정치에 머물 뿐 정치적 리더십의 실체가 별로 없음.
- 최근 안철수가 최장집 교수와 제휴한 것은 정당을 통해 콘텐츠와 세력, 대중 등

리더십의 실체를 확보하겠다는 것임. 최장집이 안철수 신당의 성격을 노동문제를 전면화하는 진보정당으로 규정한 것은 흥미로운 대목임. 이런 시나리오라면 형해화된 진보정당이 안철수를 통해 다시 정립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음. 심상정 노회찬 등의 진보정의당 그룹도 안철수 신당 합류가 선택지의 하나가 될 수 있음. 최장집의 발언은 안철수 신당에 바라는 최대강령 수준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임. 초점은 안철수가 어느 정도까지 좌회전할 수 있느냐임. 안철수라는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와 함께 사회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진보정당이 양대 보수 정당과 정립할 수 있다면 한국 정치의 일대사건이 될 것임. 안철수의 그간 행보가 진보정당 보다는 민주당에 더 가깝고,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민주당과 더 겹친다는 점에서 그가 본격적인 진보정당 노선을 걷을지는 회의적임. 안철수란 지도자가 먼저 있고 이제야 정당의 노선과 색깔, 인물을 채워나가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임. 정당도 공부를 해가며 만들어야 하는 상황. 안철수는 대선 당시의 모호한 화법이나 숙제하듯 몰아치기해서 답을 내놓는 신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서 신당을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할지, 신당이 추구하는 노선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바람직함.

- 안철수 신당의 미래는 비록 작지만 강고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적 성채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게 관건임. 요즘 새정치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가 무엇인지는 스스로 찾아야 함. 새누리당과 민주당과는 차별성을 갖는 정치적 비전과 정책들을 내놓으며 현실정치에서 착실히 세력을 넓혀가면서 차기는 물론 차차기까지도 내다보는 긴 호흡이 필요함.

2. 민주당의 앞날

- 김한길 체제가 친노 중심 체제를 대체했지만 기대 난망이란 게 당 안팎의 평가임.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종전 비주류는 친노 주류에 대한 안티세력이었을 뿐 창의적인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해왔음. 친노 주류와 비주류 어느 쪽도 현국면을 타개할 리더십을 갖추지 있지 못함. 민주당 내에서는 안철수 세력에 일정부분 위협을 느끼면서도 당내의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전 후보 등에 기대를 걸고 있음. 민주당에선 은연중에 박원순 대망론이 너무 일찌감치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민의 중심세력이랄 수 있는 80년대 세대가 이번 대선에서 야권에 등을 돌린 것은 친노에 대한 평가 문제와 관련이 있음. 눈여겨볼 점은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 계열의 노무현에게 60.1%를 몰아줬던 80년대 세대가 2007년 대선에선 20.2%밖에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임.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43.8%에 그친 것은 어떻게 보면 2007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함. 아직도 친노에 대한 실망, 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야기임. 친노 중심 민주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기도 함.

- 친노가 어찌됐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야권의 대세를 장악하면서 계파 패권주의의 행태가 일정부분 노정된 것이 사실임. 친노만 탓할 수 없는 게 이를 대체할만한 다른 세력이나 리더십이 야권내에 존재하지 않았음.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숙명적인 상황에 빠져들었다고 할 수 있음. 노무현 임기 후반부 부동산 폭등과 대연정으로 상징되는 실정에 대한 낙담과 실망이 80년대 세대가 여전히 야권에 등돌리는 이유로 볼 수 있음. 경제적 빈부격차의 심화,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의 분열의 정치, 진보적 어젠다를 포기하고 갈팡질팡한 정책노선의 무능, 대북 퍼주기로 비판받는 일방주의적 대북 정책 등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금의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충분히 극복하고 신뢰할만한 세력으로 거듭났다고 보지 않은 것임.
- 야권은 세력 재편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제대로 된 자유주의정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분할될지, 빅텐트식의 거대정당으로 갈지, 인물 중심의 이합집산으로 갈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임. 민주당의 경우 당 차원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당의 구심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진보정당들간의 힘겨루기와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임.

3. 486 정치인 문제

- 486 정치인이 여지껏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은 경우가 별로 없음. 2000년 총선때 디제이 동교동 가신들 손에 이끌려 황태자처럼 의회에 진출한 이후 유의미한 정치적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음.
- 김영춘 전 의원이 반성한대로 486 정치인들은 대통령과 당 지도자들을 교주화하고 계파의 관점에서 추종했을 뿐 시대정신에 입각해 그들에게 동지적 비판을 제기하고 견인하지 못했음. 김영춘은 486정치인들이 새 패러다임 구현을 위해 과거의 이념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련된 대안을 집단 실천하는 정파적 정체성을 갖자고 제안한 바 있음. 정파적 정체성의 문제는 중요한 시사점임. 민주당에 계파는 있지만 정파적 소그룹을 찾아보기 어려움.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후진적 리더십을 보완하고 추동하는 전향적인 목소리나 그룹이 꾸준히 있어왔던 것과 대조됨. 486 정치인이 학생운동 시절 그러했듯 제대로된 정파적 목소리만 내줄 수 있어도 제 역할을 하는 것임. 반면, 기존의 486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너무 깊숙이 자리잡은 탓에 이제와서 새로운 정파성을 찾으려고 하는 건 무리일 수 있음.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486 운동권 정치인만을 중민이론의 핵심 세력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넓은 의미의 486, 80년대 세대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음.

4. 중도개혁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론

- 보수, 진보, 중도개혁 노선의 시대적 상황이 변해가면서 유동적인 측면이 많아짐. 무엇보다 유권자의 의식이나 성향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선 제대로 된 정책노선을 채택하기 위해 배가된 노력이 필요함.
- 노무현 이후 민주당이 디제이 시절의 중도개혁 노선에서 벗어나 지나친 이념적 좌파노선을 추구한 것이 대선 패배의 요인이라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맞음. 좌파노선이 이념적으로 경도돼 경직되고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점에선 근거가 있는 비판이지만 유권자들의 의식구조가 무상급식을 받아들이고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급격한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진보적 정책노선을 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아님. 흔히들 선거에서 중원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원이 왼쪽으로 급격히 이동했다면 기존의 정책노선에 대한 구분은 무의미함. 오히려 좌회전을 제대로 했느냐, 유권자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좌회전을 했느냐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함. 현실적인 좌회전, 합리적인 좌회전이란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균형잡힌 중도개혁 노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님. 유권자들은 이미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존의 이념적 잣대로 재단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함.
-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는 안정적인 경제민주화와 중심잡힌 대북평화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유권자의 요구라고 봐야 함. 여든 야든 좌로 갔지만 실제 정책의 수행능력에서 야당이 믿음을 주지 못했고, 정책 역시 국민이 보기엔 이념적으로 과격한 것들이 있다고 본 것임.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른바 복합적 유권자층이 경제민주화에선 진보, 대북정책에선 중도 성향을 띠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임. 일종의 시대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안철수는 그런 시대정신을 실현한 콘텐츠와 세력이 없었음. 문재인은 경우 친노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됐고, 엔엘엘 논란에서 보듯 대북정책에서 유권자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음.
- 앞으로의 선거에서 진보, 보수, 중도개혁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과 이슈를 놓고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음. 대형 이슈 중 하나인 교육 문제만 봐도 학부모인 유권자들은 교육현실에 낙담하면서 점차 급진적 정책을 지지해나갈 토양이 자라고 있다고 보여짐. 기존의 잣대로 보면 과격할 수 있지만 현실을 놓고 보면 합리적인 정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이념적 과격성이나 실행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정책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 발상의 전환에서 나오는 현실적합성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함.

[토론요지]

민주당에겐 4개월의 시간이 있다!

천 정 배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전 법무장관)

1. '안철수 현상'과 원인

- 안철수 현상은 "카리스마적 지도자 운동이 안철수를 통해 나타난 형태"이고, 그 "한 축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혐오"이며 "다른 한 축은 기존 정당체제를 개혁하려는 능동적 경향"이라는 발제자의 견해에 공감
- 주된 원인은 3무(3가지가 없는) 민주당
 -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성, 자기쇄신, 국가비전 없이 우왕좌왕했음

2. 민주당의 과제

-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자신과의 싸움에 집으로써 빈사상태에 이름. 민주당의 미래도 자신과의 싸움에 달려 있음
- 3무 정당에서 3유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 그러기 위해서는 제1원칙을 중심으로 3대 쇄신 필요
- 제1원칙
 - '민심정당'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아야 함. 여의도와 민주당의 틀에서 뛰어 나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함
- 3대 쇄신
 - 첫째, 당풍쇄신. 계파를 따지지 말고, 당내 반대파들도 너그럽게 포용하는 당 운영 필요. 당내에서부터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시작해야함. 당내 경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정책과 노선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정책쇄신.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선명하고 풍부하게 정립하고 제시해야. 민생을 안정시키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서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수권정당이 돼야 함
 - 셋째, 제도쇄신. 국민에게 개방적이고 국민의 뜻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당의 구조를 만들어야 함. 모든 당직을 당원이 뽑는 전당원투표제를 전면 도입해 당내 민주주의를 이뤄야 함. 공직후보공천이 계파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함. 정책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전면적인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이게 해야 함. 부패나 비리 연루자와 당의 정체성을 훼손한 당원에 대해 즉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윤리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함.

3.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

- 10월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안철수 세력과도 힘겨운 경쟁이 불가피할 듯함
- 그 결과에 따라 대선 패배를 능가하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위 3대 쇄신을 해야 하지만 모두 시간이 필요한 일로 10월 재보선 이전에 정국을 반전시킬 만한 효과가 나기 어려울 듯
- 당장, 또는 단기간 안에 국민을 감동시킬 '획기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함
-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있었다면, 민주당에겐 4개월의 시간이 있을 뿐

4. 결론을 대신하며

-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에서 성과를 내고 '자기쇄신'이라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다면 민주당은 분명히 부활할 것임
- '안철수 현상'의 수혜자가 궁극적으로도 안철수의원일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듯. 벼랑 끝에 선 민주당이 '하기에 따라서는'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임

[토론요지]

안철수 현상과 '노동중심 신당론'

표 학 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12월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안철수 현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해석은 향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활동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학술 세미나를 기획한 <중민사회이론 연구재단>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한상진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하여 중도 개혁노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민생정치의 패러다임을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교수는 중민이론이 제시했던 중도개혁노선은 중도·진보 양 날개 노선으로 재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도 개혁 노선을 재조명하자면 이것은 중도와 진보의 양 날개를 뜻한다. 중민이 ·중산층과 민중을 결합하듯이 중도개혁은 중도와 진보를 양 날개로 활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진보의 구상을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동시에 중도의 포용성이 진보에 미치는 함의를 숙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안철수 현상’을 ‘노동중심 진보적 신당론’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의 발언은 ‘안철수 현상’을 편향된 진보의 시각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안철수 지지집단의 복합적 성향을 분석한 최종숙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안철수 지지집단은 진보와 보수적 성향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이다. ‘노동중심적 신당론’은 안철수 현상의 핵심주체인 ‘개혁적인 중산층’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진보층이지만 대북정책과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층에 가까운 중도개혁계층’을 소외(alienation)시키고 배제시키게 될 것이다.

안철수 신당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노동중심적 신당론’에 구애받지 말고 ‘개혁적 중도성향’의 지평을 중도보수층과 중도개혁층에 똑같이 넓혀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고용률 70% 달성”과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통상임금확대문제

등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률 70% 달성은 앞으로 4년 동안 점진적으로 달성하겠다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의 거시경제 정책이 고용목표에만 몰입할 경우 자본·기술·에너지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한 여타의 정책수단에 부산물적 왜곡효과(by-product distortion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목표보다 더 중요한 노동문제의 현안이 없는데도 야권으로부터 노동문제의 현안을 등한시 하는 정부라고 공격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노동문제가 첨예화되어 온데는 정부의 우유부단한 노동정책에도 있었지만 귀족노조의 기득권 사수와 노동조합 중심의 극한투쟁이 민생의 바닥에서 허덕이는 대부분의 중하계층의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철수 현상’을 ‘노동중심 진보적 신당론’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안철수 현상’의 핵심적 주체인 ‘개혁지향적 중도세력’의 결집을 와해시키고 대부분의 중도진보세력을 지지계층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2013 학술세미나
중민 이론의 재조명 :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
- 자료집 -

2013년 6월 3일 발행

발행처_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발행인_ 한상진

편집인_ 조명옥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Joongmin foundation for Social Theory

151-84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64, 202호
(봉천동, 대우슈페리움1단지)

Tel. 02-875-8474 / www.joongmin.org